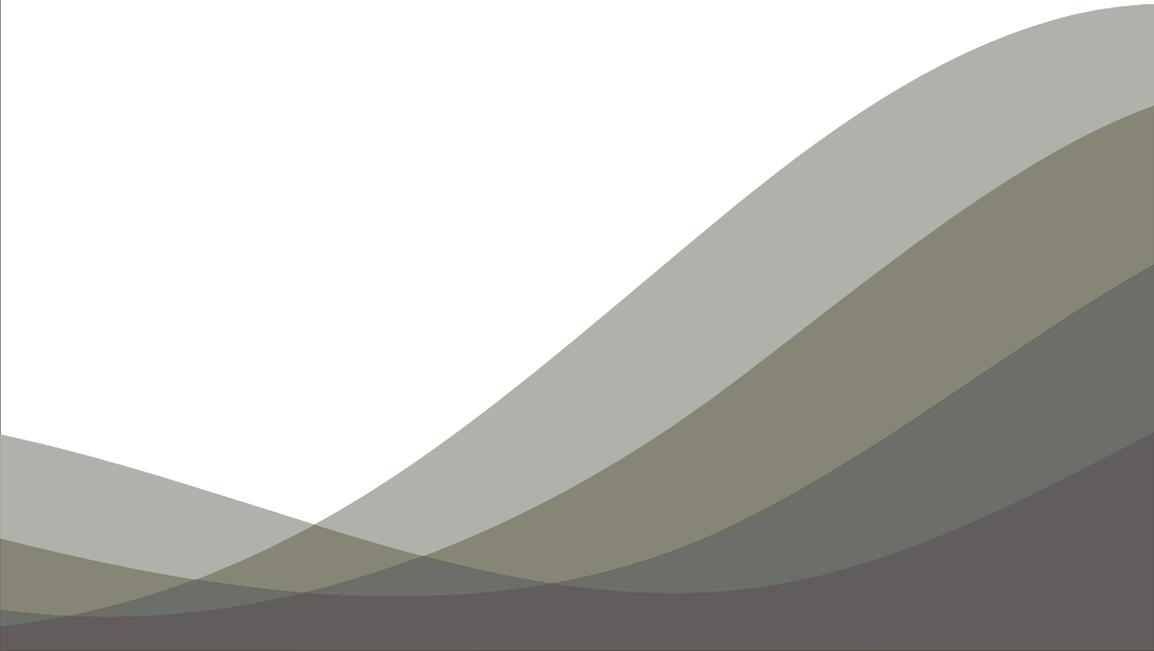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KINU 연구총서 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ISBN 978-89-8479-755-0 93340

가 격 ₩11,00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ix
I. 문제 제기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방법	6
II.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 및 개도국의 특징	9
1. 계획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북한의 인식	11
2. 개도국에서 공식부문의 기업과 비공식부문의 관계	16
III. 북한 국영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과의 관계: 주요 특징	45
1. 분석 틀	47
2. 북한 국영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에서 나타나는 특징	49
3. 북한 국영기업소의 비공식부문 활용방식	78
IV. 북한의 시장화 실태 변화: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87
1. 설문지의 주요 구성과 설문 대상자의 특징	89
2.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91
3. 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시장화 실태 비교	102
4.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교차분석 주요 결과	110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V. 맺음말	131
1.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부문과 북한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133
2. 북한 기업들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방식의 주요 특징	134
3. 산업분야에 따른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수준의 격차	135
4. 국가 계획에 대한 고착화된 관념과 현실적 인식의 괴리	136
5. 북한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화 가능성	137
참고문헌	139
부록	145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결과	147
2.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88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9

표 목 차

<표 I-1> 심층면접인터뷰 대상자 인적 사항	7
<표 II-1> 세네갈 비공식부문의 주요 특징	28
<표 II-2> 세네갈에서 나타나는 공식·비공식부문의 주요 분야별 관계	31
<표 II-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비공식 고용실태	34
<표 II-4> 비공식부문 기업의 중간재 공급 원천의 비중	37
<표 III-1> 북한 기업소 등급별 시장 활용의 비율	72
<표 III-2> 기업소 경영 단위와 시장 활용의 관계	74
<표 IV-1> 지표계획의 중요도	91
<표 IV-2> 계획 목표량 미달성 시 처벌	92
<표 IV-3> 계획 초과 달성 시 보상	94
<표 IV-4> 액상계획의 중요도	95
<표 IV-5> 기업의 시장 활용의 중요성	97
<표 IV-6>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	99
<표 IV-7>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99
<표 IV-8> 기업의 생산물 처분 방식	101
<표 IV-9>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비중	101
<표 IV-10> 국영기업의 자재조달 관련 계획의 비중	103
<표 IV-11> 국영기업의 생산물 처분 관련 계획의 비중	104
<표 IV-12> 국영기업에서의 8:3 노동자 비율	106
<표 IV-13> 시장의 개수	107
<표 IV-14>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비율	108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표 IV-15> 부업의 종류	109
<표 IV-16> 목표 달성 실패 시 처벌의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	111
<표 IV-17> 목표 초과 달성 시 보상에 대한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	112
<표 IV-18>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	114
<표 IV-19>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 중요도의 산업별 차이점 ...	115
<표 IV-20> 생산에 필요한 자재·물품 조달방식의 산업종류별 차이점	117
<표 IV-21> 자재·물품 조달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산업별 차이점 ...	118
<표 IV-22> 생산물의 처분에서 산업별 차이점	119
<표 IV-23> 생산물 처분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산업별 차이점 ...	120
<표 IV-24> 최종 탈북 연도별 설문대상자의 숫자와 비율	122
<표 IV-25> 목표 달성 실패 시 처벌행태의 시기별 차이점	123
<표 IV-26> 목표 초과 달성 시 보상에 대한 시기별 차이점	124
<표 IV-27>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시기별 차이점	125
<표 IV-28>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 중요도의 시기별 차이점 ...	126
<표 IV-29> 생산에 필요한 자재·물품 조달방식의 시기별 차이점	127
<표 IV-30> 자재·물품 조달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시기별 차이점 ...	128
<표 IV-31> 생산물의 처분에서 시기별 차이점	129
<표 IV-32> 생산물 처분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시기별 차이점	130

그림 목 차

<그림 Ⅱ-1> 중간재 소비를 통한 연계	26
<그림 Ⅱ-2> 소비자 시장에서의 경쟁	27
<그림 Ⅱ-3> 공식-비공식 경제관계의 개념적 틀	32
<그림 Ⅱ-4> 비공식부문 기업의 중간재 공급 원천	36
<그림 Ⅲ-1> 분석 대상의 기본 구도	47
<그림 Ⅲ-2> 북한 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개념도	80

요 약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2년에 접어든 최근까지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개혁·개방 관련 다양한 조치들이 북한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혁·개방조치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들 중에서는 기업들에게 생산물 처분 및 성과 분배 등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당국은 사유재산 및 시장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기대해온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영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시장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경제주체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와 정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전략 혹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업소 혹은 모든 생산단위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영기업들의 시장 참여 실태와 특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국영기업이 계획 수행 및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로 대표되는 공식부문과 일반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주를 이루는 비공식부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개도국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관심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첫째, 궁극적인 퇴출 예측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는 여러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둘째, 비공식 경제의 특징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공식 직업에 대한 개선은 성장 촉진과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비공식부문의 성장에 공식·비공식부문의 생산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국영기업이 비공식(시장)부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경제의 운영체계 및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시장과 계획,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관계들을 구성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관리·운영체계는 국가 주도의 계획관리체계에 입각한 경영과 시장의 자율경쟁체계에 기초한 운영으로, 기업들의 공간적 활동영역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도에서 계획과 공식부문의 결합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계획경제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중앙 기업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영 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물자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계획지표의 수정(액상지표의 확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운영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 활동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시장화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첫째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시장화’가 진행되었다는 견해로, 외형상으로도 국영기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기업 활동의 내용은 대부분 비계획적인 경제활동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업들의 제한적인 시장화’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북한의 계획체제가 와해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주요 국영기업들은 여전히 국가의 계획 관리 운용시스템의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다른 쪽은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기업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장·기업소의 계획 책정 및 수행방식이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는 기업의 계획수행 관련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설문조사는 화폐개혁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 기업의 계획수행 과정에서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 ① 경제상황 일반에 대한 질문, ② 노동 및 직업(공식영역), ③ 노동 및 직업(비공식영역) 부문을 주요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상황 일반 및 전망의 영역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당시 느꼈

던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 질문, 경제난 발생원인과 당국의 노력 여부, 2002년 7·1조치에 대한 개인적 평가, 향후 경제체제 변화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직장 생활 및 소득, 그리고 계획 수행(공식영역) 부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공식적인 직업 현황에 대한 일반적 질문, 계획의 특화(특혜) 여부, 지배인의 권한과 역할, 계획의 변화 및 수정, 자재조달, 노동규율, 급여 및 후생, 8·3과 관련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로, 시장 활용의 영역과 방식(비공식 영역)에 대한 설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했던 부업과 관련하여, 개인부업에서 패기밭이나 축산과 같은 농업관련 활동, 개인 상업 관련 활동 및 실패, 개인 제조업 관련 활동 및 실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상자 100명에게 설문하였고, 그 결과를 화폐개혁 전후로 나누어 북한 경제의 비공식부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주제어: 북한 경제, 비공식부문, 북한 시장, 북한 기업, 시장화, 계획 경제

Abstract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North Korea's Informal(Market) Sector: Focus on Corporate Activity

Lim, Kang-Taeg

Two years into the Kim Jong-un regime, various measures regarding reform and opening have been announced, and yet the specific contents of such measures have not been fully grasped.

One of improvement measure for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that is known to have been introduced in 2012 focuses on expanding incentives for corporations regarding disposing products and distributing gains. However, it appears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not adopted specific measures to expand the areas of market activity, nor private property. In this respect it is difficult to state that the economic reforms expec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being promoted.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 of North Korea's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study based on data collection of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marke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wo aspects. The first point elaborates on how state-owned enterprises utilize the market in their planning and performance as a corporation. The second point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ial sector of North Korea's factories and corporations, and the informal sector, comprising North Korean civilians' market activities.

There are mainly two mixed views regarding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the markets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First is the view that the 'actual marketization of corporations' has been in progress, in which the framework of state-owned enterprises is maintained only for appearances' sake while the contents of corporate activity consist mostly of unplanned economic activity, and that the market has been actively used in the process. The second view concerns the 'limited marketization of corporations.' This view argues that although North Korea's planned system has been on the verge of collapse, major state-owned enterprises are still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ate's planned management operation system. In reality, neither of two views mentioned above can be deemed as being an absolute truth, or conversely, false. Instead, both occurrences are mix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give attention on the assessment that the marketization of corporations is gaining momentu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nderstanding the vast number of factories' and corporations' planning arrangements and performances, survey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escapees has been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corporations' planning performances, and the surveys have adhered to prior studies' questionnaires in order to grasp the changes that took place after the currency reforms.

Keywords: North Korean Economy, Informal Sector, North Korea's Market, North Korean Enterprise, Marketization, Planned Economy

I

문제 제기

1. 연구 목적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2년에 접어든 최근까지 개혁·개방 관련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혁·개방조치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 경제관리 및 운영 관련 조치들이 아직까지 종합적·전면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경제특구를 지방까지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2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들 중에는 기업들에게 생산물 처분 및 성과 분배 등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서는 분조의 규모를 축소하고, 수확량을 7:3의 비율로 국가와 나누는 등의 조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당국은 사유재산 및 시장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기대해 온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도매상업 기업소들이 계획상품은 물론

I

II

III

IV

V

계획 초과분과 계획 이외의 상품을 소매상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허용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추가분 및 계획 이외의 생산물을 국영상점을 통해서 유통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평양시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대형 쇼핑센터 및 음식점들을 보면 북한당국은 시장을 당장에 폐쇄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영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시장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시장의 역할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경제주체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와 정도로 작용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전략 혹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업소 혹은 모든 생산단위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차원의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 정도는 기업소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지원과 공급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하고 있는 전략부문의 공장·기업소에서는 시장 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들의 시장을 통한 식량 및 생필품 조달과 소득창출 활동은 보편화·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시장 실태에 대한 소식이 한국의 민간단체나 탈북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시장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왔

으며, 이에 따라 북한경제에서 시장화 현상이 어떻게 확산되고,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시장화에 대한 정보가 시장 가격의 변화와 정부의 통제 등 주로 일반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시장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제학적 분석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주제별로 다양화·심화되면서 시장규모의 측정, 시장의 심화정도, 가격과 시장의 관계, 분야별 시장의 특성, 시장 확대와 계획부문의 침식 현상에 따른 정부의 시장통제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¹ 이와 함께, 최근에 와서는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딜레마가 체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증가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순수 경제학적인 분석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기업소들의 시장 관련 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영기업들의 시장참여 실태와 특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에서 시장(비공식)부문이 계획(공식)부문과 어떻게 경쟁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특히 시

1.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5호 (한국정치학회, 2012), p. 211.

2.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북한경제리뷰』, 제15권 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59~60.

장부문이 국영기업의 계획 수행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영기업이 계획 수행 및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장·기업소에 부과되는 계획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공식활동 또는 시장 활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로 대표되는 공식부문과 일반주민들의 시장활동이 주를 이루는 비공식부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최대 어려움은 공장·기업소의 계획 책정 및 수행방식이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공장·기업소가 비공식(시장)부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의 계획수행 관련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설문조사는 화폐개혁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1 심층면접인터뷰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출생년	탈북년	입국년	직업(북한)
1	최○실	1949	2004	2005	○○○도 인민위원회 식료공장 사장
2	김○국	1951	2010	2010	농기계수리사업소 소장
3	함○찬	1955	2009	2009	물 혼합 디젤유 생산기지장
4	정○희	1963	2010	2010	○○중기계공장 여맹위원장
5	허○순	1942	2008	2009	○○시 원양사업소 로동행정부 지도원
6	함○국	1956	2006	2006	○○군 원림시설사업소
7	손○옥	1966	2008	2009	○○시 안전부
8	김○희	1973	2009	2010	○○식료품공장 직장장
9	김○식	1965	2009	2009	○○탄광기계공장 지도원
10	정○순	1959	2009	2009	○○가루비누공장 공장장
11	권○진	1961	2011	2011	생산직장 지배인
12	최○철	1962	2009	2009	당 무역기관 일꾼
13	채○룡	1963	2011	2011	도시건설사업소 지배인
14	이○호	1965	2011	2011	내각 재정일꾼

I

II

III

IV

V

II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 및 개도국의 특징



1. 계획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북한의 인식

가. 계획의 임의적인 수정·변경 현상에 대한 우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가 충분한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여 계획실행에 대한 긴장도가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계획을 공장·기업소 등에서 마음대로 고치거나 무질서하게 조정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민경제의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마음대로 고치면 그것은 련관된 부문이나 단위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며 나아가서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³

이에 따라서 계획일꾼들이 물자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노동력·설비·자재·자금이 제대로 맞물려지지 않아서 현실성이 결여된 생산지표, ‘기술합의’가 되지 못한 지표, 설계도가 없는 건설물과 설비의 생산지표들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임의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계획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상도 지적하고 있다.⁴

³ 김주성,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p. 19~20.

⁴ 위의 글, pp. 19~20.

I
II
III
IV
V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획과 일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하거나 기관본위주의에 사로잡혀 계획과 어긋나게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현상”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⁵

나. 달성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현실성 확보

북한에서 계획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국가에서 계획 달성에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원자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자재와 노동력문제의 자체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자재나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자재에 대한 해결 원칙은 기업소 자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구체적으로 지방공업에서는 기업의 자체 노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료자원은 중앙에서 아니라 지방자체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⁷ 또한 부족한 지방공업의 자재와 노동력은 상급기관(웃기관)이

5. 리진수, “국가의 계획적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p. 13~14.

6. 국가적보장조건이 불리하거나 이리저리한 요인으로 상급단위자재공급이 소비단위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련된 자재를 가지고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작성하자면 앞으로 입고될 자재확보량에 대한 예측을 해보아야 함. 송미, “공업기업소 자재확보사업에서 예측방법의 적용,”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43.

7. 김옥경, “일군들이 강한 생활력을 가지는 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 담보,”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3.

보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업에 한정해서 나타나고 있는 인식이다.

또한 계획의 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의 일원화체계의 강화와 계획단위의 합리화 및 계획지표의 합리적 분담 그리고 현실성 있는 계획숫자의 작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⁸ 여기에서 일원화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계획화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계획기관 일군들의 주관주의와 지방과 아래 단위들의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획단위의 합리화가 의미하는 것은 “계획단위를 연합기업소를 기본단위로 하여 규정하고 계획단위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으며 경제건설의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 기본원칙(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계획)의 고수 강조

북한에서 기업 경영의 중요한 원칙인 ‘대안의 사업체계’는 현재까지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계획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전통적 계획방식의 기업운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계획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립채산제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를 국가의 계획과 기업소의 창발성의

⁸ 김학성, “현 시기 계획의 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방도,”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pp. 21~22.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근로자들 속에 부분적으로 아직 자기가 지출한 로동에 대한 보수를 타산하는 관점이 있고 집단주의정신이 높지 못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공간을 리용하여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그들이 국가재산을 자기의 것과 같이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로동에서 창발성을 발양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국영 기업소에 경영상독자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¹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아래 기업소들을 유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며 관리운영에서 이중독립채산제”¹¹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합기업소의 현실적인 운영에서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연합기업소는 북한의 주장대로 “계획, 생산, 집행단위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연합기업소 자체로 계획권, 자재계약권, 제품판매권을 가지고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독자적”¹²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재, 예산, 노동력 등 생산의 3대 요소에 대한 자체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공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단위의 예산 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자재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중앙기업소 등)의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⁹ 정영룡,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p. 16~18.

¹⁰ 박홍엽, “국영기업소 경영상상대적독자성의 사회경제적기초,”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p. 11.

¹¹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대학용』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p. 329.

¹² 위의 책, p. 330.

하지만, 여전히 계획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경제관리원칙이 구현되어야 경제발전의 모든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고 높은 속도가 이룩되어 생산의 정상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가 담보되게 됨으로써 사회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갈 수 있다.¹³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으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경제 관리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에 의하여 실현된다.¹⁴

북한은 계획수립 및 실천에 있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기초가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역으로 하부 기관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경제관리질서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옹계 행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¹³ 강응철,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p. 8.

¹⁴ 김경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 2.

2. 개도국에서 공식부문의 기업과 비공식부문의 관계

가. 공식과 비공식부문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게르샤니(Klarita Gërshani)에 따르면, 초기의 연구들은 발전도상국들에서 비공식부문에 대한 참여를 ‘잉여노동력(reserve army of labour)’의 최저 생계를 위한 활동을 간주하였다.¹⁵ 즉, 비공식부문의 발생 원인이 대규모 빈곤과 실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일차적으로, 낮은 수준의 산업화와 낮은 생산성, 잉여 노동력 등이 제3세계의 도시들에서 비공식부문이라는 이중적인 경제시스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이 낮은 수준의 기술과 저렴한 비숙련 노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이 쉽게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⁶

최근 비공식부문에 대한 관심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고 첸(Martha Alter Chen)은 강조하고 있다.¹⁷ 첫 번째는 궁극적인 퇴출 예측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는 여러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비공식 경제의 특징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공식 직업에 대한 개선은 성장

¹⁵ Klarita Gërshani, “Informal Sector i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 Literature Survey,”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s*, No. 99-083/2 (November 1999), p. 22.

¹⁶ *Ibid.*, p. 25.

¹⁷ Martha Alter Chen, “Rethinking the Informal Economy: Linkages with the Formal Economy and the Formal Regulatory Environment,”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Working Paper*, No. 46 (July 2007), p. 1.

촉진과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공식-비공식부문의 이질성

비공식부문에 대해 생드쟁그르(Alice Sindzingre)는 공식부문과는 구별되는 이질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통제되지 않은 노동집약적인 활동, 자영업, 소규모 기업 활동, 국가의 규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비등록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조세 회피, 노동 관련 규제에 대한 불이행, 국가의 관찰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불법적인 활동도 비공식부문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또한, 그는 비공식부문의 영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이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공식-비공식부문의 이질성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질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쾌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식-비공식부문의 이질성은 다른 종류의 이질성과 혼동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공식-비공식부문의 이질성이 ‘국가-비국가, 공적-사적, 대기업-소기업, 강성-유연성, 시장-비시장 제도, 서구적-전통적, 성문법-관습, 비인간적-인간적, 효율적-비효율적 집행, 사적인 교류의 의존 정도, 신뢰와 평판의 메커니즘’ 등과 같은 이질성과 혼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와 같은 혼동 가능성에도

¹⁸-Alice Sindzingre, “The Relevance of the Concepts of Formality and Informality: A Theoretical Appraisal,” Basudeb Guha-Khasnobis, Ravi Kanbur, and Elinor Ostrom (eds.),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5-3.

¹⁹-*Ibid.*, p. 5-3.

불구하고 비공식부문은 일반적으로 ‘비농업과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비숙련 노동력이 과다 공급 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⁰

(2) 비공식 기업과 공식 기업 간의 관계

비공식 기업과 공식 회사 간 연계는 생산체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체계의 유형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¹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래로, 일부 비공식 기업은 시장교환의 형태로 공식 회사와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한다. 둘째는 하부단위(sub-sectors)의 거래로, 많은 비공식 기업들은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소위 하부단위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와 교환한다.²² 셋째는 가치사슬(value chains) 내에서의 거래로, 일부 비공식 기업들과 근무자들은 공식 기업의 가치사슬(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기능·과정의 연계) 안에서 상품을 생산한다.²³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비공식 기업은 공식 기업들과 연계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출장 음식서비스, 운수업, 건설부문 등과 같은 서비스

²⁰- *Ibid.*, p. 5-4.

²¹- Martha Alter Chen, “Rethinking the Informal Economy: Linkages with the Formal Economy and the Formal Regulatory Environment,” p. 7.

²²- 이 하부단위는 독립적인 단위들로 생산과 분배의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개인들은 공급자이자 소비자로서 거래에 참여한다. 거래 조건은 경쟁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큰 기업 및 하부단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²³- 가치사슬 내에서의 생산 조건은 주로 선도적 기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부분의 국내 가치사슬에서 선도적 기업은 대규모 국내기업이, 국제적 가치사슬에서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그 역할을 맡는다.

공급부문에서는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과 관계를 맺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²⁴

(3) 비공식 노동자와 공식 기업의 관계

개도국에서 점점 더 많은 임금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들은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첸은 이러한 현상이 대체로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²⁵ 첫 번째 이유는 신분 위장(disguised)으로, 다른 합법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고용관계를 의도적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두 번째는 모호성(ambiguous)으로 이를 활용하여 고용관계가 실지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불명확성(not clearly defined)으로, 고용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누가 고용주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누가 노동권 보호에 책임이 있는지 등의 문제를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많은 공식부문의 회사들은 유연하고 전문화된 생산, 글로벌 경쟁, 또는 (단순히) 낮은 노동비용 등을 이유로 비공식적인 고용관계를 선호한다.²⁶ 공식부문의 기업이 비공식 고용관계를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공식적인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²⁷

이와는 별도로, 비공식 노동자와 공식 기업의 관계를 자영업자에게

²⁴- *Ibid.*, p. 8.

²⁵- *Ibid.*, p. 8.

²⁶- *Ibid.*, p. 9.

²⁷. 이 경우,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비공식성의 혜택을 선택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강조하는 것은, 비공식 고용관계가 비공식 임금노동자의 관점에서 '자발적'이라는 개념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²⁸ 해당되는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생산연계

비공식부문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인 연구에서 공식-비공식 생산연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라니스와 스튜어트(Gustav Ranis and Frances Stewart)는 비공식부문을 전통적인 영역과 현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²⁹ 그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비공식부문이 소규모 자본, 낮은 노동생산성, 정체된 기술력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진입이 자유롭다. 반면에 현대적인 생산영역에서는 비공식부문이 직접 판매와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공식부문과 전방연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부문의 중간재에 대한 수요에 따라 이 부문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트(Sugata Marjit)는 공식부문이 비공식부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영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는 상황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³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식부문의 위축은 수요 감소를 통해서 비공식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영역의 축소로 연결된다. 이어서, 노동력의 비공식부문으로의 재분배를

²⁸ *Ibid.*, p. 8.

²⁹ Gustav Ranis and Frances Stewart, “V-goods and the Role of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7, No. 2 (1999), pp. 259~288.

³⁰ Sugata Marjit, “Economic Reform and Informal Wage-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2, No. 1 (2003), pp. 371~378.

통해서 비공식부문의 노동집약적인 영역의 생산을 촉진시키게 된다. 결국 공식부문의 생산 위축 현상이 비공식부문의 노동집약적인 영역의 생산을 촉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빈 래드(Hassan Arvin-Rad) 등은 비공식부문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하고 공식부문을 위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상황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³¹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가정한 생산연계를 통해서 공식부문의 규모가 비공식부문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리마(Ben C. Arimah)는 나이지리아의 도시에서 설비 근대화를 위한 투자에 부지런한 비공식 기업들이 공식부문과 전방연계효과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³² 반면에 인도의 사례분석에 따르면, 비공식 제조업부문에서는 전방연계효과가 자본집약적인 비공식 기업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발견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것은 비공식부문의 성장에 공식-비공식부문의 생산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³³

³¹-Hassan Arvin-Rad, Arnab K. Basu, and Maria Willusen, "Economic Reform, Informal-Formal Sector Linkages and Intervention in the Inform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A Paradox,"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Vol. 19, No. 4 (2010), pp. 662~670.

³²-Ben C. Arimah, "Nature and Determinants of the Linkages between Informal and Formal Sector Enterprises in Nigeria," *African Development Review*, Vol. 13, No. 1 (2001), pp. 114~144.

³³-Ana I. Moreno-Monry and Abdul A. Erumban, "Chapter 5. Formal-Informal Production Links and Growth of Informal Manufacturing in India," <<http://dissertations.ub.rug.nl/FILES/...../feb/...../05c5.pdf>> p. 92.

나. 사례 분석

(1) 인도경제의 사례

바이라가(Indrajit Bairagya)는 인도의 대외경제개방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모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규모에서 보면 비공식부문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³⁴ 그에 따르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관계를 3가지 유형(school)으로 분류한다. 첫째 유형은 독립적 관계로, 비공식부문이 자체적으로 소비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독자적인 경제 부문이라고 인식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의존적·수탈적 관계로,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과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식부문에 의해 수탈을 당한다고 인식한다. 세 번째 유형은 보완적·통합적 관계로, 이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과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공식부문과 통합된다.³⁵ 또한 바이라가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관계를 소비·생산·기술 등 세 가지 부문의 연계성을 통해서 파악한다.

□ 기본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인식

비공식부문을 전통적 영역과 현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식부문과의 관계를 분석한 라니스와 스튜어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비공식

³⁴-Indrajit Bairagya, "Liberalization, Informal Sector and Formal-Informal Sectors' Relationship: A Study of India," (The 31st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St. Gallen, Switzerland, August 22~28, 2010), <<http://www.iariw.org>> (검색일: 2013년 9월 1일).

³⁵-*Ibid.*, p. 6.

부문은 소비재만 생산하고 제품을 저소득계층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반면에 근대적 비공식부문은 소비재와 생산재를 모두 생산하고 저소득과 중간소득계층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이 제품들은 종종 공식부문의 제품들과 경쟁하게 된다. 한편, 근대적 비공식부문에서 생산된 소비재는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 내에서 소비되며 부분적으로는 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소비한다. 반면에 근대적 비공식부문이 생산한 중간 생산재와 단순한 자본재는 부분적으로 공식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근대적 비공식부문은 생산물이 공식부문과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이기도 하다.³⁶

새크바티(Sauya Chakraborti)와 쿤두(Anirban Kundu)는 구조주의학과 (structuralist school)의 시각에서 공식-비공식부문의 경쟁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두 부문의 경쟁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식량공급제약 (food-supply-constraint)’이라는 조건을 도입하였다.³⁷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술발전을 통한 농업생산 증대의 경우 공식·비공식부문 모두가 팽창하게 되지만 그 효과는 공식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농업발전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추동될 경우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공식과 비공식부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경쟁관계를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⁸ 이와 함께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공식부문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36. Gustav Ranis and Frances Stewart, “V-goods and the Role of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Development,” pp. 259~288; *Ibid.*, p. 6에서 재인용.

37. Sauya Chakraborti and Anirban Kundu, “Formal-Informal Sectors’ Conflict: A Structuralist Framework for Indi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34, No. 2 (December 2009).

38. *Ibid.*, p. 59.



도 공식·비공식 경쟁구도를 심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⁹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의 공급계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공식부문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비공식부문의 팽창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⁴⁰

□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의 연계성

모레노 몬로이(Ana I. Moreno-Monroy)와 에럼반(Abdul A. Erumban)은 인도의 제조업부문에서 비공식부문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공식-비공식부문의 생산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적인 분석을 동원하여 공식기업들이 비공식부문과 하청계약을 맺고 중간재를 구매하는 것이 비공식부문의 생산과 고용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⁴¹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식-비공식 생산관계가 비공식부문의 규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식-비공식 제조업부문의 생산관계가 인도의 비공식부문 제조업기업들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⁴² 여기에 더해, 그들은 인도

³⁹ 재정지출 확대는 식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식량공급계약이라는 조건하에서 공식부문과 농업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공식부문의 가격은 다른 부분의 가격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⁴⁰ *Ibid.*, pp. 59~60.

⁴¹ Ana I. Moreno-Monroy and Abdul A. Erumban, "Chapter 5. Formal-Informal Production Links and Growth of Informal Manufacturing in India," p. 92.

⁴²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에 비공식기업들의 생산물이 판매되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과, 비공식기업과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공식기업들의 정확한 유형을 알 수가 없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는, 제조업부문에서 생산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비공식 제조업부문이 공식 서비스부문과 전방연계를 형성하는 정도가 이 연구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Ibid.*, pp. 104~105.

에서 관찰되고 있는 비공식 제조업부문의 빠른 성장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에서는 노동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서 생산이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³

피에터스(Janneke Pieters), 모레노 몬로이(Ana I. Moreno-Monroy), 에럼반(Abdul A. Erumban) 등은 생산자 시장과 소비자 시장을 나누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⁴⁴ 생산자 시장에서 양부문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에서 중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공식부문은 직접 판매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비공식부문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소비함으로써 양 부분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중간 투입에 대한 수요가 공식 회사의 크기와 성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아웃소싱을 통해 발생하는 수요의 경우에는 왜 공식 기업이 그들의 생산 과정의 일부분을 외부에 위탁하는지 그 이유에 달려있다.⁴⁵ 또한 공식 기업의 ‘아웃소싱 경향’은 비공식 기업의 비용 우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 규제와 법적 최소 임금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의 압력이 공식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절감 전략으로 비공식 기업과의 연결을 찾으려 한다면,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 내에서 더욱 경쟁적이 될 것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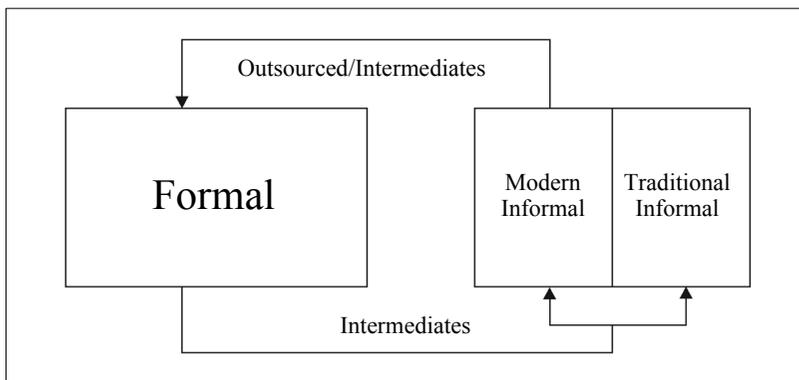
⁴³- *Ibid.*, p. 105.

⁴⁴- Janneke Pieters, Ana I. Moreno-Monroy, and Abdul A. Erumban, “Formal-Informal Linkages and Informal Sector Dynamics: Evidence from India,” (The 31st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St. Gallen, Switzerland, August 22~28, 2010).

⁴⁵- *Ibid.*, p. 4.

⁴⁶- Gustav Ranis and Frances Stewart, “V-Goods and the Role of Urban Informal Sector in Development,” pp. 259~288; Janneke Pieters, Ana I. Moreno-Monroy, and Abdul A. Erumban, “Formal-Informal Linkages and Informal Sector Dynamics: Evidence from India,” p. 4에서 재인용.

● 그림 11-1 중간재 소비를 통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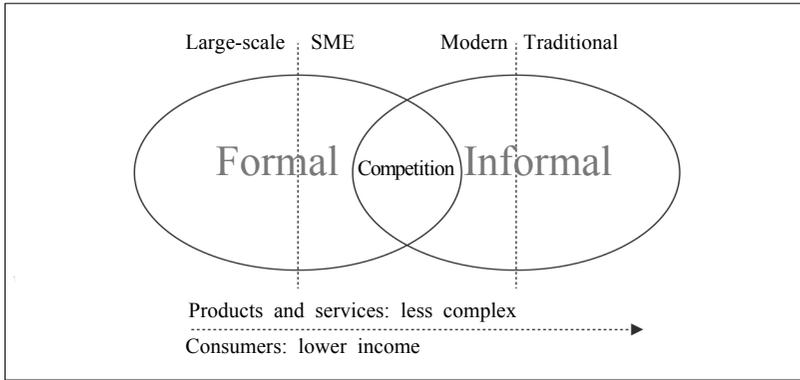
출처: Janneke Pieters, Ana I. Moreno-Monroy, and Abdul A. Erumban, “Formal-Informal Linkages and Informal Sector Dynamics: Evidence from India, (The 31st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St. Gallen, Switzerland, August 22~28, 2010), p. 4.

소비자 시장에서는 시장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공식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⁴⁷ 반면에, 현대적인 비공식 기업들은 공식 기업들, 특히 공식부문의 소규모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⁴⁸

47. 그들은 소비자에 가장 근접하게 존재하고, 그들의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더 적은 양의 물건을 판매고, 낮은 질, 싼 물건을 판매하면서 틈새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비공식 기업과 공식 기업들이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비공식부문은 공식 부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48. 비공식 기업이 공식부문의 소규모 기업에 비해 유리한 점은 그들이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때문에 더 낮은 초기비용과 운영비용이 든다는 데에 있다. 그들의 불리한 점은 그들이 정부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윤율이 그것을 허락한다 해도 그들은 어떤 크기 이상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시장의 관점에서는 비공식 기업의 크기와 성장도 규제의 틀에 달려있게 된다. *Ibid.*, p. 5.

●그림 11-2 소비자 시장에서의 경쟁



출처: Janneke Pieters, Ana I. Moreno-Monroy, and Abdul A. Erumban, “Formal-Informal Linkages and Informal Sector Dynamics: Evidence from India,” p. 5.

(2) 세네갈 경제의 사례

□ 세네갈에서 비공식부문의 특징

그랜스트롬(Sigrid Colnerud Granström)은 비공식부문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⁴⁹

⁴⁹ Sigrid Colnerud Granström, “The Informal Sector and Formal Competitiveness in Senegal,” *Minor Field Study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Lund), No. 194 (2009), p. 12.

I
II
 III
 IV
 V

표 II-1 세네갈 비공식부문의 주요 특징

No.	주요 특징	원인 및 결과
1	기업을 등록하지 않고, 합법적 고용관계 없이 노동력 고용함	공개되지 않은 경제활동 위주
2	비공식적인 기업 운영에 따르는 편익이 불이익보다 큼	공식기업이 되는 비용이 매우 높음
3	비공식부문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임	낮은 생산성 수준으로 인하여 기업의 잠재적인 규모를 제한함
4	인적자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낮은 수준의 기술력 사용
5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함 국가경제의 총생산에 기여함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완충역할 수행함

출처: Sigrid Colnerud Granström, "The Informal Sector and Formal Competitiveness in Senegal," *Minor Field Study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Lund), No. 194 (2009), pp. 12~14의 내용을 요약.

세네갈에서 관찰되는 비공식부문은 무엇보다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랜스트롬에 따르면, 세네갈에서 비공식부문의 성장은 1970년대 농업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가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네갈 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1970~1980년대의 심각한 경제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세네갈의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1974년도의 유가상승과 함께 1980년대의 심각한 가뭄 등이 누적적으로 결합되면서 공식부문의 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조세와 규제를 피해서 비공식부문으로 활동무대로 옮겼으며, 정부가 이를 묵인하게 되면서 비공식부문이 빠르게 증가하였다.⁵⁰

⁵⁰ *Ibid.*, pp. 16~18.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된 세네갈의 비공식부문, 특히 수도인 다카르의 비공식부문은, 사업의 규모가 작고, 고용인원 수가 적으며, 자본조달 및 생산물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공식부문의 행위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¹

□ 공식-비공식 관계의 성격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좀 더 어린 나이에서 비공식부문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 구성에서는 여성이 비공식부문(41%)에 공식부문(17%)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교육수준은 비공식부문이 낮게 나타나며, 공식부문의 높은 교육수준은 보다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으로 연결된다. 결국 교육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낮아질 것이며, 이러한 점이 비공식부문의 새로운 진입 연령이 낮은 이유를 설명한다.⁵³ 사업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피고용자의 평균 숫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비공식부문의 기업에서는 평균 1.5명을 고용한 데 반해서 공식부문 기업은 122.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인당 자본비율에서도 공식부문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생산성에서도 공식부문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⁴

한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부문의 산업에서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의 경쟁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

⁵¹-*Ibid.*, pp. 18~22.

⁵²-*Ibid.*, p. 23.

⁵³-*Ibid.*, p. 24.

⁵⁴-*Ibid.*, p. 24.

러나 일반적으로는 비공식부문에서 가격결정은 판매 때마다 거래(merchandizing)와 협상(negotiation)의 결과에 좌우된다. 비공식부문은 소수의 경우에서만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반해서, 공식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가격이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에 따라서 결정된다.⁵⁵

경쟁관계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비공식부문 생산단위의 85%가 같은 비공식부문에서 경쟁자가 있으며, 오직 9% 이하만이 공식부문과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공식부문은 대체로 가격이 싸고 수입품에 비해 구입이 용이한 비공식부문의 중간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에 비해 좀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⁶ 흥미로운 사실은 양 부문이 직면하는 생산 가능성과 상품·서비스의 공급 상황,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⁵⁷

결론적으로, 세네갈에서는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은 양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관계보다는 대체적이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주요 영역이나 주제별로 접근하면 각기 다른 관계가 발견된다. 나아가 비공식부문은 여성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 부문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⁵⁸

⁵⁵- *Ibid.*, p. 25.

⁵⁶- *Ibid.*, pp. 25~26.

⁵⁷- *Ibid.*, p. 26.

⁵⁸- *Ibid.*, p. 28.

● 표 II-2 세네갈에서 나타나는 공식·비공식부문의 주요 분야별 관계

부문	비공식-부문 관계	주요 특징
시장 점유율	제한적 경쟁	제한된 영역에서 경쟁적인 관계 형성
금융자본	경쟁적	공급의 제한으로 경쟁관계 형성, 공식부문에 유리
노동시장	보완적	노동 기술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
소비	보완적	비공식부문에서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공식 부문에서 소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과 세금 수입에 기여
특정 산업분야	협력적	특정분야의 산업부문에서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에 중간재를 제공

출처: Sigrid Colnerud Granström, "The Informal Sector and Formal Competitiveness in Senegal," p. 28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그랜스트롬은 비공식부문의 존재가 세네갈의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 사이에 일부 보완적인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부문을 세네갈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⁵⁹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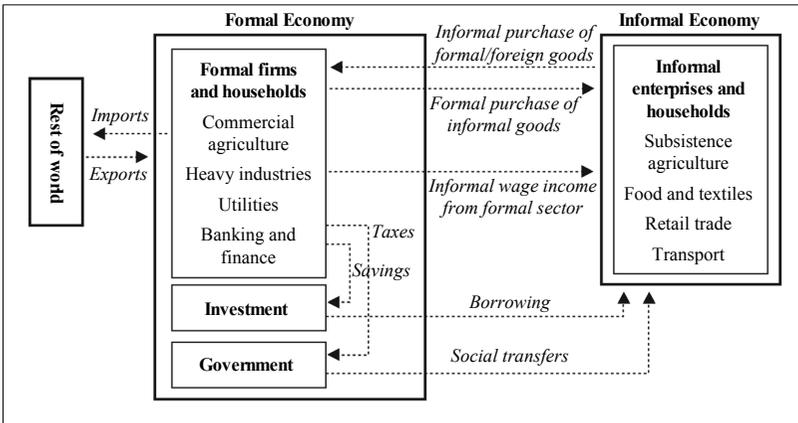
□ 공식-비공식 관계의 기본 틀

데이비스(Rob Davis)와 쉐로우(James Thurlow)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경제적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

⁵⁹ Ibid., p. 42.

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⁶⁰ 이에 따르면, 공식부문의 생산품들은 대부분 대외무역을 통해서 수출하거나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의 범위가 넓고 비교적 자율적이다. 또한 공식부문의 회사들과 가게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고 공식 금융기관들에 투자한다. 반대로 비공식부문은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 생산 범위가 좁고 다른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교역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공식 기업들과 가게들은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다.⁶¹ 그 결과 비공식부문의 가게들에서는 초과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림 11-3 공식-비공식 경제관계의 개념적 틀



출처: Rob Davis and James Thurlow,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and Unemployment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Vol. 78, No. 4 (2010), p. 6.

⁶⁰- Rob Davis and James Thurlow,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and Unemployment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Vol. 78, No. 4 (2010).

⁶¹- *Ibid.*, p. 6.

첫 번째 방법은, 비공식부문의 생산물을 공식부문의 생산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IES 2000(Income and Expenditure Survey)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으로 판매한 금액은 비공식경제가 공식부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77.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공식-비공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산 시장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⁶² 비공식경제의 두 번째 소득 원천은, 노동자들이 공식부문의 노동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인 임금이다. 이 노동자들은 공식부문에서 일을 하고 그들의 임금을 비공식부문의 가정으로 송금한다.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로부터 송금된 소득은 비공식부문 적자의 15.1%에 해당한다.⁶³ 이외에 공식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공공연금이나 아동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사회적 이전지출을 통해서 비공식부문의 적자를 보전한다.

다음의 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국가 전체에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⁶²- *Ibid.*, p. 6.

⁶³- *Ibid.*, p. 7.

표 II-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비공식 고용실태

(2007년 기준)

Worker Characteristic	Formal	Informal
Paid Employee	79.4%	17.4%
Self-employed	36.2%	60.5%
Finance Sector	83.6%	13.1%
Construction Sector	61.5%	34.1%
Professional Occupation	91.0%	5.8%
Elementary Occupation	42.5%	53.9%
Income > R800/month	54.6%	11.0%
Income < R800/month	2.6%	4.4%
Education ≥ HS Diploma	48.8%	6.2%
Education < HS Diploma	11.8%	7.2%
Male	22.0%	6.3%
Female	13.4%	6.0%
Black	13.1%	6.7%
White	42.6%	3.3%

출처: David Duane Kay,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Employment in South Africa,"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2011), p. 18.

□ 높은 실업률과 비공식부문의 낮은 비중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은 2013년 5월 6일, 1분기 고용현황과 관련, 실업률이 25.2%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남아공은 높은 실업율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적인 현상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앨트만(Miriam Altman)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⁶⁴ 첫째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⁶⁵에 따른

⁶⁴ Miriam Altman,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April 2008), <www.hssrc.ac.za>.

경제활동과 재산 축적에 대한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 차별정책으로 인해 흑인들은 경제활동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다. 이 정책은 백인의 높은 기술력에 의존하는 중앙의 산업기반과 도시경제로부터 낮은 기술의 흑인 노동력에 의지하는 지역 경제를 분리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흑인 인구의 성장 기회를 박탈했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약화시켰다. 약한 네트워크와 낮은 수준의 자본 축적은 흑인그룹의 사업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일자리를 찾는 데에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을 유발하였다.⁶⁶ 두 번째는, 남아공 경제에서 생산과 서비스산업이 높은 자본 집약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⁶⁷ 여기에는 비공식부문에서의 활동도 예외가 아니다.⁶⁸ 남아공의 소비자들은 신용이 덜 가면서도 더 비싸게 파는 비공식 판매자에게 사는 것보다는, 알려진 상표와 거래신용이 있는 공식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을 선호한다. 비공식부문의 상인들은 특정한 틈새시장에서 적은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 때문에 비공식부문의 기업의 숫자가 작은 것이다. 셋째는, 수요부족에 따른 실업 증가와 공식부문 기업들이 국가의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⁶⁹

⁶⁵ 이 정책은 1948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느슨해졌으며, 1994년에 폐지되었다.

⁶⁶ Miriam Altman, "Low Wage Work in South Africa," (IAZ/World Bank Conference on Employment & Development, Berlin, Germany, May 25~27, 2006); *Ibid.*, p. 17에서 재인용.

⁶⁷ *Ibid.*, pp.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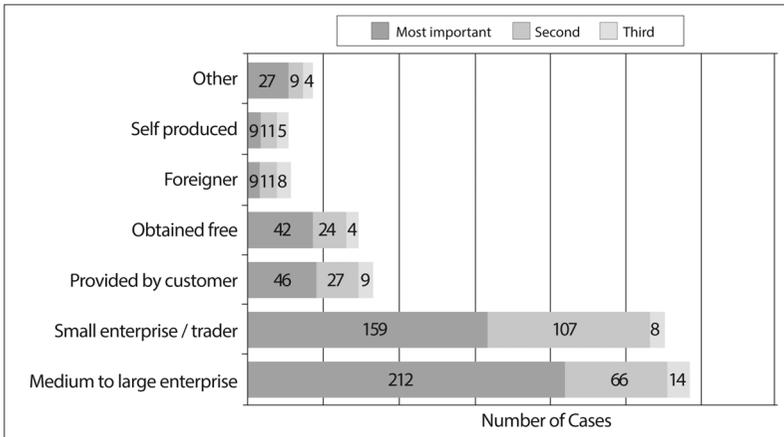
⁶⁸ Imraan Valodia,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Some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Revised paper prepared for the HSRC, April 2008), <www.hsrb.ac.za/egdi.phtml>.

⁶⁹ Miriam Altman,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 생산 연계

앨트만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의 기업들이 원자재 등 중간투입재를 구입하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들이 공식부문의 중·대형 기업들로부터 구매하였으며, 뒤이어 소규모 업체와 무역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에서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생산연계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11-4 비공식부문 기업의 중간재 공급 원천



출처: Imraan Valodia, L. Lebani, and C. Skinner, “Low Waged and Informal Employment in South Africa,”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in Southern Africa*, Vol. 60, No. 1 (2005); Miriam Altman,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April 2008), p. 33, <www.hsrc.ac.za>에서 재인용.

앨트만은 또한, 공식-비공식부문의 연계가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전통적인

⁷⁰ *Ibid.*, pp. 32~33.

비공식부문에서도 공식부문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공식부문의 의류, 작은 가게(spaza), 술집과 택아소 등은 중·대형 공식 상점에서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공업부문은 때때로 완전하게 독립적인 비공식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공식부문의 가게들과 다양한 연계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⁷¹

표 II-4 비공식부문 기업의 중간재 공급 원천의 비중

(단위: %)

	중·대형 상점	소형가게/ 무역업자	고객 제공	외국인	무상 획득	자가 생산	기타
의류	61	70	40	4	1	2	4
수공업	43	73	1	9	13	5	5
전통의학	19	54	0	18	69	15	25
작은가게	79	48	0	0	0	2	2
건축	56	41	51	0	5	0	3
금속작업	79	37	30	2	0	0	5
술집	85	46	0	0	0	2	0
택아소	67	36	15	3	5	13	15
미용	66	51	22	5	0	0	7
	292	274	82	28	70	25	40

출처: Imraan Valodia, L. Lebani, and C. Skinner, “Low Waged and Informal Employment in South Africa,”; Miriam Altman,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p. 33에서 재인용.

⁷¹ Ibid., p. 32.

- I
- II
- III
- IV
- V

(4) 기타 국가들의 사례

여기에서는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SSA)

아프리카의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전방 연계(forward linkages)를 가지고 있다.⁷² 공식부문과의 전방 연계는 1980년대에 수입의 격감과 구조 조정의 압박 속에서 증가하였으나, 비공식부문 생산물의 낮은 질과 비공식부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 및 산업부문과의 전방 연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⁷³

공식부문의 회사들은 생산부문에서 비공식 기업들과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유통분야에서는 비공식부문과의 연계를 사용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공식부문의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확충할 목적에서 비공식부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⁷⁴

전방 연계에 비해, 공식부문과의 후방 연계(backward linkages)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따르면,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과의 후방 연계효과는 서아프리카 도시들에서 62~80%, 르완다에서는 96%에 이른다고 한다.⁷⁵

⁷² 전방연계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 후방연계는 어떤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

⁷³ Kate Meagher, "Crisis, Informalization and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Sub-Saharan Africa," *Development and Change*, Vol. 26 (1995), p. 275.

⁷⁴ *Ibid.*, p. 276.

⁷⁵ ILO, *Informal Sector in Africa* (Addis Ababa: JASPA, 1985), p. 30.

□ 서아프리카(West Africa)

서아프리카 6개국의 비공식부문의 6,0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식부문과의 연계성(후방 연계와 전방 연계)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방효과가 전방효과보다 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관 효과는 비공식성(informality)의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부문과의 연계가 없거나 자본스톡이 작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⁷⁶

공식-비공식부문 간 연계가 갖는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 규칙성을 보여준다.⁷⁷ 첫째, 비공식부문에서 높은 자본스톡을 보유한 등록기업의 경우에도 공식부문에 대한 판매보다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판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식부문은 약 2%가 넘는 정도가 낮은 자본스톡을 보유한 미등록 비공식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부분이 낮은 단계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구매자로서 하는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이다.

또한 전방 연계의 관점에서 보면, 공업과 유통부문에서 비공식 기업들의 공식부문과의 연계성은 등록된 비공식 기업에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부문의 발전이 공식부문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비공식 공업부문, 특히 등록된 비공식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⁷⁸

⁷⁶- Marcus Böhme and Rainer Thiele, "Informal-Formal Linkages and Informal Enterprise Performance in Urban West Africa," *Kiel Working Papers*, No. 1751 (January 2012).

⁷⁷- *Ibid.*, p. 6.

⁷⁸- *Ibid.*, p. 6.

□ 가나(Ghana)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공식-비공식 관계

가나와 같은 저개발국가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특성 차이는 경제적 상황과 제도화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게르미디스(Dimitrios A. Germidis) 등은 공식부문의 금융과 비공식부문의 금융이 지니는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다.⁷⁹ 이에 따르면, 공식부문의 금융은 완고하고 관료적인 절차, 복잡한 서류작업, 높은 거래비용(대출심사, 서류, 법무 관련 수수료 등), 거액 대출에 대한 엄격한 담보조건 요구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자율은 보통 통화당국에 의해 낮은 수준에 고정되어있는 반면, 소규모의 고객들과 거래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비공식부문의 금융은 운영과 (장·중·단기)대출 기간의 유연성, 쉽게 이해되는 규칙과 규제들, 신용 요청과 거래의 빠른 진행, 고객의 능력과 요구에 응하는 소액을 다루고자 하는 의지, 거래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불필요한 요식(red tape), 비공식부문 안에서의 낮은 거래비용, 그리고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환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애리티(Ernest Aryeetey)는 신용의 분배와 저축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가나의 신용시장에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⁸⁰ 그에 따르면, 가나의 신용 시장(credit market)에서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사이에 세 가지 연계관계가 존

⁷⁹ Dimitrios A. Germidis, Denis Kessler, and Rachel Meghir, *Financial Systems and Development: What Role for the Formal and Informal Financial Sector?* (Paris: OECD, 1991); Ngoun Sethykun, "Linkag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Financial Sectors in Cambodia," *Cambo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 (August 2011), p. 8에서 재인용.

⁸⁰ Ernest Aryeete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of the Financial Market in Ghana, Vol. 10* (Oxford: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1992).

재한다. 첫 번째는, 사업자들의 재정조달부분에서 공식적인 신용창출 부문과 비공식 신용창출 부문이 경쟁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사업 자들에 대한 신용창출에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때이다. 세 번째는, 비공식부문의 신용 제공자가 공식부문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⁸¹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나의 금융시장에 분절현상(segmentation)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용 분배와 저축의 동원에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신용 배분에 있어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사이에 상호 경쟁적 요소와 보완적 요소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⁸²

다. 정책적 시사점

(1) 공식-비공식부문 간 공평한 연계의 구축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양자 사이에 보다 대등한 연계관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비공식적으로 일하는데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⁸³

비공식경제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비공식 경제를 ‘공식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식화’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정책결정자들에게 공식화는, “비공식 기업들이

⁸¹ *Ibid.*, p. 8.

⁸² *Ibid.*, p. 30.

⁸³ Martha Alter Chen, “Rethinking the Informal Economy: Linkages with the Formal Economy and the Formal Regulatory Environment,” p. 10.

허가증을 취득하고 기업등록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공식경제로 진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비공식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한 근로계약과 노동자 복지, 사회보장 등이 포함된 공식적인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⁸⁴ 이처럼 공식화의 다양한 해석들을 고려했을 때, 비공식경제를 공식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⁸⁵ 이에 따라 첸은 비공식부문을 공식화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식 경제의 여러 부문들에게 공식화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비공식부문에서 활동하는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공식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⁸⁶

(2) 비공식부문을 통해서 공식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모색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비공식부문이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적인 시사점은 비공식부문을 위축시키고 공식부문의 경쟁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식부문으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둘째, 공공재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소규모 생산자들이 자본을 용이하게 조

⁸⁴ *Ibid.*, p. 11.

⁸⁵ 왜냐하면, 첫째, 대부분의 관료들은 등록 허가증과 세금등록양식을 한꺼번에 작성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관료들은 비공식사업가들에게 공식부문의 사업가들에게 제공하는 유인책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셋째, 최근 추세에 따르면, 고용의 증가가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비공식 일자리를 공식 일자리로 전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Ibid.*, p. 11 참고.

⁸⁶ *Ibid.*, p. 11.

달할 수 있도록 금융체계 등을 개선한다. 넷째, 공식부문의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다섯째,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수준을 제공한다.⁸⁷

(3)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

그랜스트롬은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 사이에 일부 보완적인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부문을 세네갈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차라리 비공식부문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⁸⁸ 이를 위해서는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조세제도 등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공식부문의 활동을 금지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비공식부문의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목적 이외의 부분(전통, 문화적·상징적 가치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보다는 공식부문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 부문의 특성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문을 고리로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⁸⁹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설계할 때, 비

⁸⁷-Sigrid Colnerud Granström, "The Informal Sector and Formal Competitiveness in Senegal," p. 1.

⁸⁸-*Ibid.*, p. 42.

⁸⁹-*Ibid.*, p. 42.

공식부문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크만(Victor E. Tokman)에 따르면, 정책 처방에는 비공식부문 내에서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과 공식-비공식 연결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은 현대적인 비공식부문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⁰

⁹⁰ Victor E. Tokman, "An Exploration into the Nature of Informal-Formal Sector Relationships," *World Development*, Vol. 6, No. 9~10 (1978), pp. 1065~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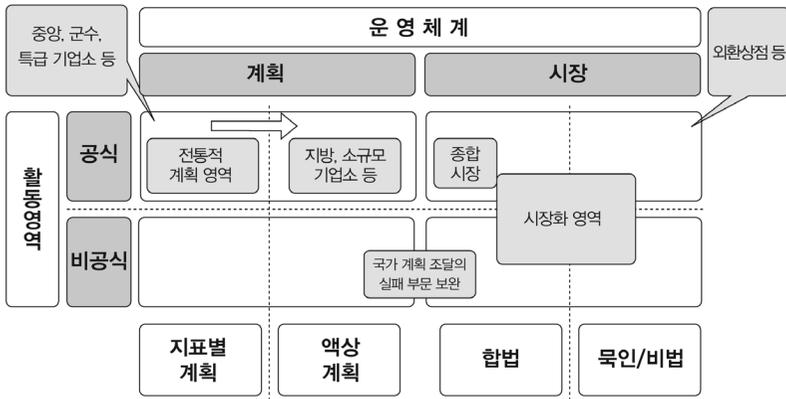
III

북한 국영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과의 관계: 주요 특징

1. 분석 틀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북한의 국영기업이 비공식(시장)부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운영체계 및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시장과 계획,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관계 틀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그림 Ⅲ-1 분석 대상의 기본 구도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관리·운영 체계는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주도의 계획 관리체계에 입각한 경영과 시장의 자율경쟁체계에 기초한 운영체계이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공간적 활동영역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기준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구도에서 계획과 공식부문의 결합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통적인 형태로 계획경제체제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타

- I
- II
- III
- IV
- V

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소를 비롯한 특수부문(군수, 당 등) 관련 기업 등은 여전히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 메커니즘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기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앙기업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영 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물자공급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지표의 수정(액상지표의 확대)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계획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운영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인 계획체계에 기초한 방식에서 변형된 형태의 기업운영방식은 점차 계획경제체제보다는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띠게 되는데, 현재 북한의 지방기업, 소규모 기업 등에서는 이처럼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운영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소의 등급과 규모가 작은 지방기업일수록 시장경제체제와 비공식 영역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경제에서 관찰하고 있는 시장화의 확산 현상은 지방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등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 활동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시장화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 국영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에서 나타나는 특징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첫째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시장화’가 진행되었다는 견해로, 외형상으로는 국영기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기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부분 비계획적인 경제활동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수년 동안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보들은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는, ‘기업들의 제한적인 시장화’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북한의 계획체제가 와해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주요 국영기업들은 여전히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의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 특히 소규모의 지방 산업들은 비계획적인 경제 활동이 묵인되고 있어서 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경제 전체의 규모로 보았을 때, 그 비중과 역할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사실에 가깝고, 다른 쪽은 완전히 거짓에 가깝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현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기업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국영기업들의 경제활동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를 한 극단으로 하고, 다른 극단은 순수한 시장경제체제로 하는 연속체(continuum)의 한 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군수산

I
II
III
IV
V

업에 소속된 기업과 전력과 철도 등 기간산업 등은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에 근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의 소규모 기업들은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에 근접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급기업소와 2, 3급기업소는 연속체 중간의 각기 다른 한 지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연속체에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점차 시장경제체제 쪽에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장에서는 국영기업들이 비공식부문, 특히 시장영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계획수행 단계별 특징과 부서별 시장 활용의 특징 그리고 시장 활용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계획수행 단계별 시장 활용의 특징

국영기업들이 국가의 계획 수행을 위해 상당 수준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기업소의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 실태를 국가계획의 수립과 실천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계획의 작성과정(계획의 부과), ② 계획의 수행, 즉 생산과정, ③ 계획 완수, 즉 생산물의 처분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

북한에서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80년대 이전에는 (계획과 생산을

위해) 특급 및 1급 기업소의 경우, 전체 종업원들의 생활비와 월급뿐만 아니라 심지어 후생설비, 편의봉사, 생필품까지 제공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급이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간부들⁹¹에게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와 임금조차 공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8·3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⁹² 경제난으로 인해 생산을 위한 계획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계획을 실행할 자재마저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외화별이와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8·3부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원자재 등 각종 물자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최고위층이 관심을 갖거나 문건으로 ‘배려’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는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도 계획체계의 무질서와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계획이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계획과 실적계획, 액상계획이 그것이다. 원양사업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고기 종류별로 생산계획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제시하는 최대치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거의

⁹¹ 간부들은 거의 1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각종 형태의 재화와 물품을 전횡하여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1990년대 이들에게도 사실상 공급이 중단되었다.

⁹² 1990년대 초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은 기업소 당위원회에 방침을 하달, 노동자들의 출퇴근 강요 자제, 기본 생산라인의 ‘8·3라인’으로의 전환을 지시하였다. 김정일의 방침은 사실상 기업소 실정에 맞는 계획·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액상계획을 수행하고 일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계획과 함께 최소한의 생산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적계획을 같이 부여한다고 한다. 여기에 생산계획과 실적계획을 물량계획이라고 하면 물고기의 가격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액상계획이 생산계획 및 실적계획에 맞추어 제시된다고 한다.⁹³

□ 국가계획의 비중 감소 및 이에 따른 비계획 생산의 증대

계획당국의 관점에서 계획은 생산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생산계획은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파악한 이후에 생산지표와 금액지표의 형태로 기업소에 하달된다. 또한 생산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행 생산계획이 작성되고, 월별 작업계획 등이 작성되어 기업소로 하달되는 것이다.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기업소의 필요 노동과 재정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면, 노력관리계획, 자재소요량 추산 및 관리, 재정관리계획 등이 작성되어 기업소로 하달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소의 지배인은 사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 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 수행을 위한 공급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계획 작성 단계에서 기업소 지배인은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장악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 즉 ‘돈주’를 활용한 자본, 자재지도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재의 종류와 수량, 가용한 필요 노력의 실태파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분야의 생산목표가 결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기업소에 세부적인 계획량을 하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줄

⁹³ 탈북자 허○○, 2008년 탈북, 2013.4.11. 인터뷰.

경우에는 우선적인 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시장의 상황이 기업소의 사전 계획 작성단계(기업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국가의 계획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무원칙과 혼선의 일상화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특급기업소 및 1급기업소에서도 국가계획 수행을 위해 ‘주석뿐드’를 배당받아 자재를 수령한 후, 최소한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⁴ 경제난으로 인해 물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와 국방위원회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행⁹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계획이 지속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시스템이 명목만 유지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각 차원에서 하달된 국가계획은 최소한의 할당량 정도만 수행해도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국가계획을 수행을 위한 생산 활동은 최소화하고 ‘더벌이 사업’ 등을 통한 ‘생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0개의 작업반이 있는 건설기업소의 경우 3개 정도의 작업반은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에 동원하고, 7개 작업반은 수익 창출을 위해 ‘8·3계획’ 실행이나 돈주들의 개인 건축을 위해 동원된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특급 및 1급기업소의 경우 국가 계획에 따라 시멘트 등 건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이러한 물자공급체계가 경제난으로 사실상 중단되자, 연합기업소 내 건재공장의 기계들을 수리하여 개인 집 및 기관

⁹⁴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⁹⁵ 예를 들어, 기존에 특정 기업소가 100% 가동되었고 현재 50%만 가동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수공업 관련 계획은 무조건 100% 수행된다. 그 이유는 간부들이 군수공업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건축이 가능한 질 낮은 시멘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⁹⁶ 국가는 기업에게 경제난 이전에 비해 약 40% 수준의 계획량만을 하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동원’ 등을 통해서 부족분을 보충한다고 한다. 철강 생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파고철 수집 등을 통해 철강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기업소들에게 국가의 지표계획을 하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는 액상계획으로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형식적인 지표계획은 부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액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품목과 그 규모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의 주 생산품목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⁹⁷ 이에 따라서 지방의 무역회사의 경우에는 액상계획이 기본이 된다.

지방기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지표별 계획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서⁹⁸ 지방의 기업들은 액상계획을 달성하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인은 액상계획 규모 조정을 위해 상부기관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액상계획 결정에는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종업원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96.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97.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액상계획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지배인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지방공업의 공장·기업소의 경우에는 지배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98.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계획기능도 함께 축소되었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로 2001년부터 지방에는 계획위원회를 축소하여 계획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하달하지는 못하고 대신 지방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건설에 노력을 동원하는 일이 주업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단위에서 계획위원회가 복원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성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외화별이 사업을 포함하여 종업원들의 생활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상부에 제안하여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더별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더별이 과제’가 대부분 외화별이 사업이거나 시장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액상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수립과정은 결국 기업들의 시장 공간 활용에 대한 당국의 목인을 통해서 시장화의 확산현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직원이 5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식료공장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계획지표가 별도로 하달되지는 않았으며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하는 선물(또는 명절공급)로 과자, 간장, 된장, 술 등을 생산하도록 지시가 하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해준다고 한다.⁹⁹ 즉, 199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 지방공업에 해당되는 기업소에게는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지표를 하달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의 제약회사의 경우 특화된 품목에 대한 지표계획과 액상계획이 하달된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액상계획만 달성해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의 지표계획이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에게 하달되고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는 기업별·단위별·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분장하는 정부차원의 작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표계획의 일부는 생산순환체계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소와 사정이 유사하지만 인삼이나 녹용 등을 계획에 따라서 공

⁹⁹ 탈북자 이○○, 1998년 탈북, 2013.4.25. 인터뷰.

I
II
III
IV
V

급받아(확보하여) 인삼농축액과 녹용편육 등으로 가공하여 외화상점에 공급하여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소의 사정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⁰

지표계획이 거의 의미를 상실하고 액상계획이 이를 대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표계획이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분야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기계수리사업소의 경우에는 특정 농기계를 몇 대 수리해 주었는가를 놓고 실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¹⁰¹

□ 부차적인 성격의 계획과제의 부여

계획지표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정부는 액상지표에 더하여 기업에게 국가적·지역적 건설과업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것의 실천 여부를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소재한 도시의 건물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과제가 부과되거나 평양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같이 국가적인 역점사업에 노동력을 동원하도록 하는 과제가 부과된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가가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요구될 경우에는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국영 기업소에서 비공식적인(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한다고 한다.¹⁰² 지역 건설사업 및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그 실천여부가 해당

¹⁰⁰-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¹⁰¹-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¹⁰²- 탈북자 함○○, 2006년 탈북, 2013.4.23. 인터뷰.

지방 최고책임자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지방 당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기도 한다고 한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막대한 뒷돈을 들여서 사전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공작을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5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¹⁰³ 일종의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활동으로, 이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고 한다. 국가의 계획적인 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북한식의 시장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양한 종류 및 성격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생산계획, 액상계획, 8:3계획 등 세 가지가 하달되고 있으며, 생산계획의 경우에는 국가가 물자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적(예를 들면 30%)만을 달성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¹⁰⁴ 대신 액상계획을 통해서 이를 보충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한다. 이 액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들 중의 일부에게 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조정한다고 한다. 또한 이외는 별도 폐자재를 활용하여 생필품을 생산하는 8:3계획이 하달된다고 한다. 지방 단위에서 하달하는 8:3계획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필품을 생산하여 8:3직매점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때 국가 계획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¹⁰³ 탈북자 함○○, 2006년 탈북, 2013.4.23. 인터뷰.

¹⁰⁴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고난의 행군 이후 직접적인 국가계획 즉, 생산계획 분량은 감소하였고 이를 대신해서 생산 단위 내 자체 계획, 예를 들어 액상계획, 8·3계획, 사회적 계획¹⁰⁵ 등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⁶ 이러한 자체적인 계획들은 국가계획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 지표, 액상계획, 사회적 계획, 8·3계획 등은 서로 연동되어 맞물려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계획을 수행할 때, 공장·기업소는 생산계획과 액상계획 등을 묶어서 관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¹⁰⁷ 다시 말해, 계획의 교환 및 거래, 혹은 계획의 시장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⁰⁸

기업으로서는 액상계획만을 수행해도 계획 수행을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생산계획을 완수하고 남은 물자로 얻은 수익은 개별 생산 단위의 액상계획과 사회적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재투입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생산 단위에서는 ‘비공식적인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획에 따른 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계획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상부에서의

105- 사회적 계획이란 기업소가 관리하는 일정지역 내에서 계획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강하천 보수, 도로보수, 토지정리, 파고철수집, 농촌동원 등이 있다.

106-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107- 이 경우, 공식적으로는 개별 계획이 연동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로부터 중간과정을 동의 혹은 승인 받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생산 단위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것을 생략해 버린다.

108- 예를 들어, 사회적 계획 수행을 위해 100명을 노력동원 해야 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농촌 지역의 해당 단위를 방문하여 지원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온다. 그리고 생산 단위는 100명의 노력동원에 해당하는 액상 금액을 지원해 준다. 액상 금액을 지원받은 농촌 단위에서는 기름을 구매해서 트랙터를 운행한다.

책임 추궁이나 처벌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계획달성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외무역과 관련되는 생산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도 하거나와 외화벌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원자재와 전기 등을 보장해 주어서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무역과 관련된 생산계획은 비교적 제대로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생산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

□ 원자재를 절약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지표변경을 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은 지표계획, 액상계획, 사회적 동원계획, 8·3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맞물려 수행해 나간다. 지표계획은 국가로부터 계획을 지시·하달 받고 일정한 물품을 생산해야 하는 계획이다.¹⁰⁹ 국가계획에 의해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단위는 생산된 물품을 1차적으로 국가에 납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대형 가구 공장인 함흥영예군인공장, 청진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먼저 국가에 납품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는 필요한 수요 단위에 이것들을 배분한다. 생산 단위는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실제 국가 계획 수행에 필요한 양과 남는 비율을 계산한다. 쉽게 말해, 제품을 만들다 남은 자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무가 1m³ 들어왔다고 가정할 경우, 이 나무를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 즉 실수율을 판단하는데 북한에서는 약 56%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나무 1m³에서 실제 사용되는 목재량은 평균 56%이고

¹⁰⁹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나머지 44%는 공식적으로는 사용 가치가 없는 폐자재들이다. 북한 당국은 나머지 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해야 하는 지표도 지시·하달한다. 생산 단위는 폐자재를 이용하여 8:3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10mm 판자, 20mm 판자, 슬판, 먼지털개 손잡이, 장난감, 젓가락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남은 톱밥은 압축해서 화력용 연탄으로 사용하여 작은 나무 조각 하나 남겨 놓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국가계획에 의한 생산이며, 따라서 국가가 공급하는 원부자재에서는 가능한 많은 생산계획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하달한다는 것이다.¹¹⁰

국가가 부여한 지표계획을 완수하게 되면 기업은 나머지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가 높은 제품을 위주로 추가적인 생산활동을 한다. 기업은 국가계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정작업을 통해서 절약된 자재를 팔아서 운영 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사회적 계획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생산 단위는 액상계획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고 한다. 국정가격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국가는 상품의 국정가격을 토대로 계획을 관리한다. 생산 단위에서는 액상계획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시장에 국정가격의 10~20배를 받고 판매한 뒤, 국가계획 분량에 들어가는 일부 제출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업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간부들이 사적으로 유용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생산을 위한 원부 자재를 공급 받은 뒤, 시장성이 높은 물품으로 지표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¹¹¹

¹¹⁰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¹¹¹ 예를 들어, 원래 책상걸상을 만들기 위해 원부자재를 수령한 뒤, 지표를 변경해 밥상, 의자, 책상으로 액상지표가 일부 포함되게 변경하여 재가를 받는데, 북한 기업소의 약 50% 정도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 생산계획의 달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시장을 활용

기업소에서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원자재, 식량, 운송수단, 운용자금, 노동력 등을 비공식(시장)부문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 주요 생산자재, 생산품의 사적판매를 위한 운송수단 확보, 노동자들의 식량 및 생필품 확보, 돈을 통한 자금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탈북자에 따라 증언 내용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국가전략산업, 권력기관 산하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조달분’(상부기관의 원자재 보장)이 존재한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원자재를 포함한 각종 물자 등을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달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모가 큰 특급기업의 경우 기업소 차원에서는 생산을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는 일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특급기업의 경우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회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계획체계가 와해되면서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회사는 적당한 물주를 모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아파트의 일부를 물주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여유분으로 수익을 올려서 액상계획을 달성하게 된다. 또 다른 사례는 계획에 의한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액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활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경우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의 일종인 ‘엑스까발포르’를 활용하여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식량을 구입해서 노동자들에게 배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익의 일부를 투자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¹²

철제일용품공장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압연롤’(철판을 펴는 기계)을 활용하여 철판을 펴서 삼을 찍어 판매한다고 한다. 또한 지방의 소규모 식료공장의 경우, 공식적인 생산 활동은 원자재가 공급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¹¹³ 선물생산(명절공급을 위한 생산)의 경우에는 전력과 함께 국가에서 목표로 하달된 물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원자재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미역 등과 같이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소에서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별도의 가공료를 받지 않는 대신 식품 원료의 일부를 대가로 챙긴다고 한다. 군수 관련 물품 생산과제가 하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국가가 수입 등을 통해서 원자재를 보장해 주고 전력도 제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지방의 소규모 기업소에 생산과제와 함께 원자재가 공급되는 경우는 군수품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 제품 생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원자재 공급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군수품 생산 공장이라고 모두 생산조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군수품 생산 공장도 계획시표에 따르는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공장들처럼 액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부업지 등에 매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¹⁴

¹¹²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기업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요구하는 분배방식은 수익의 50%는 국가에 납부하고, 30%는 노력비 등 재생산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기업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¹¹³ 탈북자 이○○, 1998년 탈북, 2013.4.25. 인터뷰.

¹¹⁴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 생산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의 증가

액상계획만을 부과받은 지방기업소의 경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일감을 찾아 외국의 기업체와 접촉하기도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주문 업체로부터 원자재와 얼마간의 운영자금을 받고 돌아가 물건을 생산, 납품하는 방식으로 액상계획을 이행한다고 한다.¹¹⁵ 이러한 방식으로 임가공물량을 확보한 사람은 기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은 물론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며, 지방정부로서는 재정확보에 기여하게 될 이러한 기업소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과 함께 액상계획을 잘 이행할 경우, 기업소 지배인에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일정한 특권도 부여해 준다고 한다. 액상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은 임가공사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달러’, 또한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한 달에 북한돈 300~400만원’의 형태로 책정된다.¹¹⁶

그러나 기업이 생산과정에서나 판매를 위해서 시장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지배인이 외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은 뇌물로 취급해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개인이 시장을 활용하거나 사적인 활동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묵인되고 있다고 한다.¹¹⁷ 또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하는 경우 각종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성공할 경우, 거래의 형식은 기업 간의 거래로 처리

115-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116- 농기계 교체 및 보수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은 시장에서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조립하거나 보수작업을 추진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117-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I
II
III
IV
V

되어 ‘행표’를 주고 물건을 가져오게 된다. 때로는 원하는 원자재를 제공받지 못해서 스스로 대용품을 만들어 가져오는 경우에도 기업 간의 공식거래로 간주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철판이 필요한데 제철소에서 계획에 따라 제대로 된 철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제철소의 파철더미에서 일부를 가져오더라도 기업 간의 공식거래처럼 행표를 주고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온 파철을 가공하여 샵이나 호미 등 농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판매한다고 한다.¹¹⁸ 지방의 기업들은 결국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원자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공식거래처럼 행표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계획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간의 거래는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공급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며, 이 가운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의 형태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거래의 결과는 행표 지급을 통해서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춘다고 한다.

□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내에서 시장 활용 방안 모색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물건을 다른 기업과의 뒷거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획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¹¹⁹ 워낙 물자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가 계획을 통해서 ‘보장’한 부분도 사적인 거래를 통해서 어렵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물건의 일부가 개인적으

¹¹⁸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¹¹⁹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4.25. 인터뷰.

로 빼돌려져서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물을 주면 계획 밖에 있는 물건도 비공식적으로는 빼돌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²⁰ 기업 간에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법적인 뒷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최소한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에서 배정받지 않은 자재지도원의 수를 증원하여 관련 지역과 공장·기업소로 보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물자를 조달하도록 지시한다고 한다.¹²¹ 이러한 자구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산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계획수행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식량구입이나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해 추가적인 생산이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 외에 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급기관의 관계자에게는 미리 언질을 주어서 만약의 경우 발각이 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사전에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¹²² 또한 일과시간 외에 비공식적으로 생산을 조직하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인력과 전기공급 등에 참여한 인원들에게는 식량 제공 등을 약속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만 추가적인 생산 목적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없으며, 대체로 외화벌이사업을 위해서 조직된다고 한다.

¹²⁰-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4.25. 인터뷰.

¹²¹-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¹²²-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3) 생산물 처분과정에서 기업의 시장 활용

□ 생산물의 일부를 시장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분

생산과정과 비교할 때, 생산물의 처분과정(판매)에서 시장이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 확보의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소는 생산품을 시장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판매하여 자본을 확보하고 부업지 생산물의 판매 및 교환 과정에서도 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지배인 혹은 노동자 개인들) 비법적인 행위(사적인 경제활동)의 중요한 경로로 시장이 활용된다.

증언이 엇갈리는 하지만, 기업소 계획 생산분의 일정부분(3~5%)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기업소의 운영 및 노동자 후생과 관련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기업소의 유지·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속품 및 소모품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하는 창구로 시장을 활용하는 사례는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지방의 소규모 식료공장의 경우, 공식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대신에, 주변의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소에서 가공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식품 원료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¹²³ 그러나 이런 기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부업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퇴비 생산, 도로 정비, 딸감 하기 등의 작업에 동원된다고 한다. 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¹²³- 탈북자 이○○, 1998년 탈북, 2013.4.25. 인터뷰.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장사를 하거나 노동력을 파는 등의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국가의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기업소 차원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소들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생산품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¹²⁴ 예를 들면, 신발공장의 경우 출근한 노동자들에게는 신발을 20켈레씩 공짜나 다름없는 국정가격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다. 낮은 가격이라도 받는 이유는 나중에 검찰소 검열에 걸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 물건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품을 생산해서 일부를 노동자의 생활비로 나눠줄 수 있는 공장은 그나마 사정이 양호한 경우이고 이런 공장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¹²⁵

일반 기업소에 군수 관련 물품의 생산과제가 추가적으로 하달되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배급이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생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 이유는 생산품의 일부나 부산물들을 개인적으로 빼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²⁶

¹²⁴-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¹²⁵-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¹²⁶-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 계획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 조달

대부분의 공장·기업소들이 국가로부터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을 포함하여 노동자 생계문제의 해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방의 식료공장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쌀을 제공해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곡물로 식료품도 생산하고 노동자들의 식량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¹²⁷ 탄광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제대로 식량 공급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생산물이 발생하면 탄광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배낭에 매고 집으로 가져가서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탄광이 유지된다고 한다.¹²⁸

지방의 3급기업소 이상의 규모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생산품의 시장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¹²⁹ 따라서 직장 단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월급이나 식량 및 생필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배인은 종업원들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60%)이 출근하도록 관리하는 선에서, 나머지 인원들은 번갈아가면서 개인적인 시장활동을 통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고 한다.¹³⁰

그러나 지방산업 단위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의 경우에는 국가 계획분이 생산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산업총국으로 가져가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분배를 해준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재와는 달리 완제품의 경우에는 공장·기업소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뒷거래를 통해서

127-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128-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4.25. 인터뷰.

129-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130-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계획분을 자의적·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¹³¹ 다만, 계획분 생산량에서 소량을 빼돌려서 종업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묵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무역활동을 통한 자원 조달이 지방정부의 주 소득원

북한에서 군(郡)인민위원회를 포함한 군(郡)단위 기관들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대형 사업이나 무역과 같은 일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¹³² 지방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임가공무역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업은 액상계획만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경우 수익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계획수행과 노동자에 물자공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고위간부들에게 뇌물로 상납하는 규모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의 경우에는 여성 직원들에게 생필품은 물론이고 의복류까지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제공하였으며, 결혼할 때는 혼수품(가전제품 포함)을 선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³³

일반적으로 무역기관의 경우 시장을 활용하는 정도가 더욱 크며, 이들이 시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주요 통로를 제공한다고 할 수

¹³¹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¹³² 탈북자 채○○, 2011년 탈북, 2013.5.31. 인터뷰, 예를 들어, 유엔이나 중국, 한국에서 대북물자지원을 할 경우 지원품을 받은 다음 받은 단위들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데, 간부들이 암암리에 협의를 해서 한 절반이상 시장에 판매를 한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근 대형 도시(청진)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

¹³³ 탈북자 최○○, 2004년 탈북, 2013.2.27. 인터뷰.

I
II
III
IV
V

있다. 특히 소비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제품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애초에는 국가 상점을 통하여 판매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국가상점이 이 물건들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점으로부터는 인수증을 받고 실제로는 이 물건들을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거래의 결과는 수입 가격에 일정비율의 비용을 추가하여 매긴 상점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장부에 남기고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추가적인 수익은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국가상점은 판매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정리하게 된다.¹³⁴ 다만 국가상점을 통한 위탁판매가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품 중에서 일부는 상점에 진열한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물건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나. 주요 부서별 계획 수행과 시장의 관계¹³⁵

1980년대 계획경제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상대적인 독자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소의 ‘계획과’의 역할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지배인책임제가 가동된 것으로 알려진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영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

¹³⁴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¹³⁵ 이후의 내용은 탈북자 인터뷰(탈북자 한○○, 2013.2.13.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없던 ‘기업비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에 부과된 계획(지표 및 액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비계획적인 활동과 비공식적인 영역을 활용하는 비밀스러운 과정은 지배인을 중심으로 부기장과 창고장이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계획과는 형식적인 행위를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동력과’의 경우, 전기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생산품을 비롯하여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송배전부에서 전기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확산되면서 ‘회계과’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국가의 물자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활용하여 액상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회계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업무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이중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재과’도 형식적으로만 운용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물자를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창고는 비워져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관들의 차량이 몰려와서 대부분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는 달리, 부서의 특징에 따른 협력관계를 통해서 시장을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기업소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동력과에서 지배인의 허락을 받고 판매과에 요청을 하여 생산물 중 일부를 확보한 뒤, 이 물건을 시장에 판매해서 필요한 물품을 해결한다는 것이다.¹³⁶

¹³⁶ 탈북자 허○○, 2008년 탈북, 2013.4.11. 인터뷰.

다. 시장 활용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

(1) 기업의 등급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는 기업의 등급과 성격,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기업소(일반적으로 3급 이상)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주요 원자재를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 기업소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양과 규모가 상당히 크고, 불법행위로 엄격한 단속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① 공업생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무역회사 등과 같은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서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 북한 기업소 등급별 시장 활용의 비율

(단위: %)

일련 번호	등급별 자재 구입 시 시장 활용 비율						등급별 상품 판매 시 시장 활용 비율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1	1	3	5	5	10	15	5	10	10	15	20	35
2	5	8	15	15	20	30	5	10	15	20	20	30
3	2	5	10	10	15	20	3	5	15	15	20	25
4	3	5	5	10	15	25	5	5	5	5	15	30
5	5	10	15	20	20	30	5	10	15	25	25	30
6	1	1	1	1	5	10	3	5	5	10	15	30
7	3	3	3	3	15	30	3	3	3	3	10	20

일련 번호	등급별 자재 구입 시 시장 활용 비율						등급별 상품 판매 시 시장 활용 비율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8	5	8	10	15	20	30	3	5	10	10	20	25
9	1	1	1	3	5	10	1	1	1	1	3	10
10	1	3	5	5	10	15	5	10	10	15	20	35
11	5	5	10	13	20	30	3	10	15	20	20	30
12	2	5	10	10	15	20	3	5	15	15	20	25
13	3	5	5	10	15	30	5	5	5	5	15	25
14	5	10	15	15	20	30	5	10	15	15	25	30
평균	3.0	5.1	7.9	9.6	14.6	23.2	3.9	6.7	9.9	12.4	17.7	27.1

* 일련번호는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참조

(2) 기업소 경영진(자재지도원)의 역할

기업소의 계획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을 활용하는지, 특히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과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기업소가 필요한 자재를 시장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자본주를 확보하고 계획량을 초과하거나 별도로 시장을 겨냥하여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내다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작동되는 기업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영기업소가 시장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소의 다양한 운영단위(지배인, 자재지도원, 임금조 등)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II-2>는

I

II

III

IV

V

기업의 시장 활용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기업소 운영 단위들의 역할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표 III-2 기업소 경영 단위와 시장 활용의 관계

시장 활용 경영 단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인과 계약을 통한 통제 (1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인과의 경영 파트너십 체결 (계약형: 1년→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의 임대 현상이 발생하고, 국가는 임대료를 취함 기업경영의 위험 감소
지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잉여에 대한 처분 혹은 재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잉여 처분 및 재배치 확대(손실에 대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인은 국가, 자재지도원, 돈주와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형성
자재지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으로 활동: 지배인과의 계약을 통해 활동영역 결정(지배인은 행정적으로 보장) 핵심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재지도원이 지배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 돈주로 역할 변경 가능
입금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중이 확대 8·3작업반의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 경영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며 노동자들의 후생부담 담당 핵심적 역할
돈주 (=개인 더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별 직접투자 : 손실에 대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주 역할을 함 거대 돈주의 출현

* 돈주와 '개인 더벌이'의 역할은 기업 경영의 측면에 있어서는 유사함.

<표 III-2>에서 특히 자재지도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자재공급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북한에서 자재지도원은 거의 만능 해결사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기업소에서 활동하는 자재지도원의 역할에 따라서 시장 활용도가 결정될 정도로 자재지도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활동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대부분의 증언에서 자재지도원이 기업소 사이의 자재 교환방식을 통한 물자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재지도원의 물자조달 방식에 시장의 거래 방식이 반영되는 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재지도원의 시장 활용 활동을 기업의 계획수행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재지도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시장 활용 정도가 높은 기업소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지배인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돈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재지도원의 역할과 시장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돈주와 자재지도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가가 자금과 물자를 제공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영시스템 및 경영단위의 성격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지배인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 발전 및 노동자의 생계가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액상계획 및 ‘더벌이 과제’의 수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큰 사람이 기업의 실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도급 농기계사업소의 경우, 국가계획은 농기계를 조립해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필요한 부속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투에 가까운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 자재지도원은 경쟁에 필요한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 술, 고기, 쌀 등을 부속품 자재공급소 소장 등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뇌물용 물품은 농기계 완성품을

I
II
III
IV
V

필요로 하는 리 단위의 협동농장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다고 한다. 결국, 국가에서 충분한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자재지도원을 매개로 비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⁷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인은 종업원 중에서 다수를 선정하여 ‘자재지도원’이라는 신분을 부여해서 지역별로 파견한다고 한다.¹³⁸ 이들은 출근은 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소량이나마 조달하여 생산에 투입하게 된다. 그렇게 생산을 해도 생산계획분의 20~3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지명된 ‘자재지도원’은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시장영역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을 조달하는 것이다. 결국, 비정상적으로 자유 활동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이 해당지역의 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가져오거나 시장활동을 한 결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생산과 기업운영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재지도원을 매개로 기업들이 시장과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계획 수행을 위한 자재 획득을 위해 자재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재지도원은 해당단위 책임자의 신임을 얻은 자로서, 책임자의 허락 하에 출근과 단위 내 업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외부에서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를 담당한다.¹³⁹

¹³⁷ 탈북자 김○○, 2010년 탈북, 2013.4.4. 인터뷰.

¹³⁸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5.27. 인터뷰.

예를 들어, 해당 단위의 장은 “야, 너 이달에 가서 3천원만 회사에 넣어. 그리고 니 알아서 갔다와. 말썽없이 제기되지 않게 갔다 와라.”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적인 행위가 재정창출의 효율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재지도원이 국가로부터 원부자재를 받아서 계획 실행 및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도용을 할 경우 바로 적발된다. 변압기, 선풍기 등을 만드는 공장의 경우도 제품 200대를 생산해서 190대를 국가계획분으로 납품하고 10대를 몰래 시장에 팔면 비법적 행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유후 자재를 이용하여 250대를 생산하여 50대를 시장에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계획 수행을 위해 자재가 공급될 때 여유 자재분을 더 주었지만 (경제난 이후) 계획은 잘 안되고 축소되어 자재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할 때 규정을 어겨 하나라도 더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부품 수를 줄이는 등의 비법행위를 통해 생산량을 늘려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풍기 하나를 생산하는데 동선을 50바퀴 돌려야 한다면 48바퀴만 돌리고 나머지 2바퀴로 또 다른 선풍기를 생산한다.

(3) 기타 요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 시장에 대한 이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공장·기업소가 공급의 부족과 협동생산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지만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시장을 활용할 생각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139- 탈북자 채○○, 2011년 탈북, 2013.5.31. 인터뷰.

이 제기되고 있다.¹⁴⁰ 물론 이러한 현상도 기업소의 성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들의 시장 활용 활동은 이때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기업차원의 시장 활용과 개인들의 시장활동 양상이 기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기업들이 시장을 활용하는 정도는 시기적인 구분을 기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북한 국영기업소의 비공식부문 활용방식

가. 비공식(시장)부문 활용의 기본 특징

특급 및 1급 기업소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계획이 지시·하달될 경우, 생산 단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원·부자재량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들 기업소의 경우 해당 계획의 수행을 위해 시장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생산 단위가 요구하는 원·부자재를 100% 공급해주지 못할 때, 특급이나 1급 기업소라 할지라도 국가계획 100%를 수행하기 위해 나머지 부족분은 시장을 이 문제를 해결한다.¹⁴¹ (경제난 이후) 특급 및 1급 기업소의 경우에도 국가계획 실행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50~60% 정도를 공급받는다고 한다. 나머지 부족분은 생산 단위들 간의 계획의 거래 및 시장 활용, 액상계획의 수행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공받는 수준은 기업 규모와 중요도가 낮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¹⁴⁰- 탈북자 김○○, 2009년 탈북, 2013.4.25. 인터뷰.

¹⁴¹- 탈북자 권○○(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씨는 1급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시장을 통해 처분하는 비율을 약 40%로 예상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는 평균적으로 기업소의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장 의존성이 낮아지고, 내려갈수록 시장 의존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소의 급수가 높을수록 계획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시장을 통해 처분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급수가 내려갈수록 생산된 제품을 시장을 통해 처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특급 및 1급기업소의 경우처럼 국가적으로 중요도를 인정받는 공장·기업소의 계획, 생산, 분배가 중앙 경제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감시와 통제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중앙단위의 공장·기업소와 지방단위의 공장·기업소 사이에 격차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물자 공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에서 지방의 산업은 말 그대로 ‘자력갱생’을 통해서 명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자율성이 확대된 형태의 외화벌이사업 및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단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영역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물자지원이 거의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급수가 낮은 지방의 공장·기업소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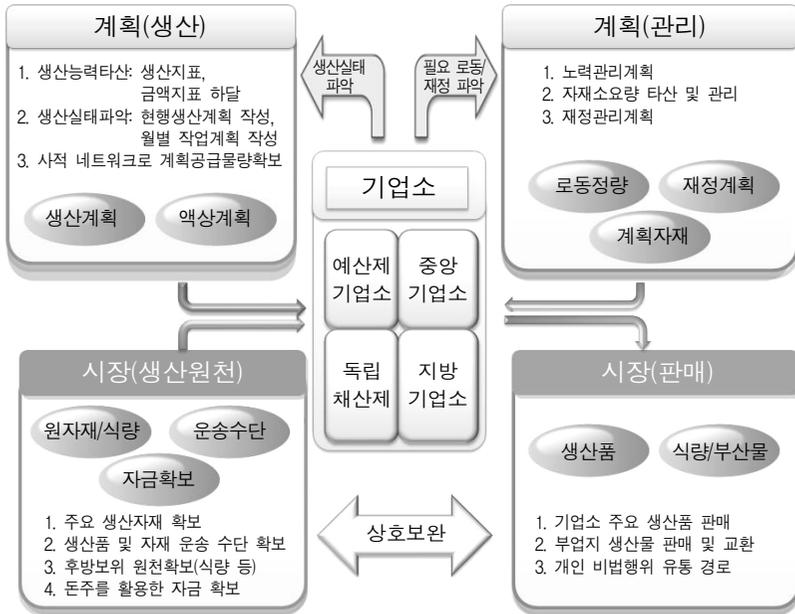
II

III

IV

V

그림 III-2 북한 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개념도



나. 국영기업들의 비공식적 활동

(1) 계획의 교환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이 비공식(시장)부문과 관계를 맺는 경우는 소규모 지방공장·기업소에 주로 해당되며, 이 경우 생산계획(지표별 계획, 액상계획)과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시장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자재상사는 국가계획과 생산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장과 연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동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과의 거래라는 시장영역이 활용된다고 한다. 철강 생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파고철 수집 등을 통해 철강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바다에 버렸던 ‘슬라그 황선’(제철하고 남은, 이른바 ‘깡치’)을 재생하여 10년 넘게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사회적 동원 계획을 통해 얻은 부산물들을 기업 간 교환 및 거래를 통해 생산에 이용하였다고 한다.¹⁴² 예를 들어, 파고철 수집을 통해 강철 원재료를 보유한 생산단위는 그것을 다른 기업소에 제공하고 자신들의 생산계획에서 필요한 일부 원자재를 공급받는다. 국가계획과는 무관한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1996~1997년 즈음 생존을 위한 생산 단위 간 국가계획의 교환 및 협조체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⁴³ 이에 따르면,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계획을 지시·하달할 경우, 이를 부여 받은 생산 단위들은 원자재와 노동력 등의 공유를 통해 국가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기업소 간부들끼리 ‘계획의 교환 및 거래’를 통해 서류를 조작하여 상부의 검열을 피해간다고 한다.¹⁴⁴ 예를 들어, 계획 수행을 위한 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예정된 공장·기관으로부터 물자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을 다른 기업들이 메워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¹⁴⁵

142-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143-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144-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145-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검열단은 일꾼들, 특히 생산라인이 종사하는 이들에게 국가에서 배급한 물자들이 생산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

I
II
III
IV
V

(2) 기업 사이의 협력관계 형성

기업소의 지배인들끼리 계획수행을 위해 자신들의 공급능력을 교환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석탄과 시멘트, 물고기와 철판, 석탄과 목재를 교환하는 등의 사적인 거래를 통해서 성사시키는 것이다.¹⁴⁶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생산물의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빼돌려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는 한 국가가 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한다.

계획수행을 위한 기업 사이의 협력 사례를 들면, 김책제철소와 2금속연합기업소에 어랑천발전소 건설, 희천발전소 건설, 그리고 김책제철소 3호 용광로 확장공사 등 3개의 계획이 동시에 하달되었을 경우, 김책제철소는 잉여 노동력을, 2금속연합기업소는 배급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 경제의 계획체제와 공식부문의 생산이 최소한으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소 간의 거래는 특급 및 1급기업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에서도 보편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화사업소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 계획이 하달되지 않자 기업소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건설 물자를 실어 나르던 자동차를 개조하고 상업 활동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운행에 필요한 연료와 타이어 등을 확보하지 못하자 외화별이사업소와의 거래를 통해 기름과 타이어를 제공받고 외화별이사업소의 물류 운반을 책임져주는 ‘계획 교환’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⁴⁷

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및 검열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계획이 최고위층이 결재한 문건 하나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물자의 사용처가 분명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한다.

¹⁴⁶ 탈북자 함○○, 2006년 탈북, 2013.4.23. 인터뷰; 탈북자 허○○, 2008년 탈북, 2013.4.11. 인터뷰.

또한, 기업소가 국가계획을 자체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개인들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소 소속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대신에 일종 규모의 생산물이나 금액을 납부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⁴⁸ 수산사업소의 경우에는, 개인이 배를 만들어 해양사업소에 등록을 하고 매달 일정 규모(예를 들어, 2톤 정도)의 생산물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바다로 출항할 때 필요한 출항증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계획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생산재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도 생산계획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유사한 경우는 차량사업소에 개인 차량을 등록시켜 놓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등록된 사업소에 납부하는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최근까지 북한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장거리 버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⁹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업소에 등록한 재산들은 국가재산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 등록된 재산은 개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소유한 재산을 기업소에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 차원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자본재 소유가 일정부분 묵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47- 탈북자 권○○, 2011년 탈북, 2013.5.29. 인터뷰.

148- 탈북자 허○○, 2008년 탈북, 2013.4.11. 인터뷰.

149- 탈북자 허○○, 2008년 탈북, 2013.4.11. 인터뷰.

I
II
III
IV
V

다. 국영기업들의 단계별 시장 활용

(1)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활용 미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화벌이 사업처럼 국내 생산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지방단위의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국가차원의 물자공급이 대부분 중단되고 국가의 계획체계가 실질적으로 와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계획에 입각한 생산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액상계획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을 활용하는 활동이 국가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2) 생산단계에서는 비공식(시장)부문을 다양하게 활용

최근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액상계획 비중의 증대 현상과 맞물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시장을 포함하여 비공식부문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심지어는 기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및 비공식영역을 활용한다. 최근 북한에서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드러지

는 현상은 개인 자산가(이른바 ‘돈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기업들이 비공식영역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해당 기업의 특징점을 살려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설비·자재를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건설부문의 경우 돈이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권을 제공하는 사례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생산물 처분단계에서는 비공식(시장)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는 자신들의 생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 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소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 등에서 유통되지만 시장에 생산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기업 차원에서 공식적인 거래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생활비 대신에 상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책임자의 묵인하에 비공식적으로 빼돌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지만 제한적이거나 국가가 공급한 원자재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매우 엄

I
II
III
IV
V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한 원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따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국가의 물자공급체계에 비해서 생산물 배분에 대한 관리체계는 비교적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IV

북한의 시장화 실태 변화: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1. 설문지의 주요 구성과 설문 대상자의 특징

가. 설문지의 주요 구성

본 과제에서 설문작업을 수행한 이유는 북한 기업의 계획수행 과정에서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현장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상황 일반과 노동 및 직업(공식영역)부문, 그리고, 노동 및 직업(비공식영역) 부문 등이다.

첫째, 경제상황 일반 및 전망에 대한 설문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당시 느꼈던 북한의 경제상황(양호, 중간, 악화 등)에 대한 일반적 질문, 경제난 발생원인과 당국의 노력 여부, 2002년 7·1조치에 대한 개인적 평가, 향후 경제체제 변화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상황 일반, 경제난 발생원인과 당국의 대응, 7·1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시켰다.

둘째, 직장 생활 및 소득, 그리고 계획 수행(공식영역)에 대한 설문은 대상자가 북한에 있을 때 공식적으로 근무했던 직업, 계획의 특화(특혜) 여부, 지배인의 권한과 역할, 계획의 변화 및 수정, 자재 조달, 노동규율, 급여 및 후생, ‘8·3생산품’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비공식영역인 시장에 대한 활용의 범주와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개인부업 관련 폐기받이나 축산과 같은 농업관련 활동, 개인상업 관련 활동 및 실태, 개인 제조업 관련 활동 및 실태 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
II
III
IV
V

나. 설문 대상자의 주요 특징

본 연구 설문 대상자 100명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성별은 남자 17%, 여자 83%이다. 여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둘째, 출생연도는 올해 기준으로 20대 6%, 30대 25%, 40대 24%, 50대 11%, 60대 24%, 70대 10%로, 30~4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탈북 연도는 2009년 5%, 2010년 46%, 2011년 29%, 2012년 19%, 2013년 1%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가 대부분(94%)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 생활했을 때 거주한 지역은 함경북도(61%)와 양강도(17%), 그리고 함경남도(8%), 평양시(4%), 평안남도(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출신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최종학력은 고등중 졸업(59%), 고등중 중퇴(17%), 대학/전문대 졸업(13%), 대학/전문대 중퇴(7%) 등의 순의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당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동당 가입자의 비중이 13%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지표계획의 중요도

“목표 생산량 등 위로부터 하달되는 지표계획은 귀하의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시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최우선 목표로 강조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목표 생산량이 북한의 기업소, 농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인식,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지표계획의 중요도

항 목	비중(%)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39.0
여전히 최우선 목표지만 중요성은 떨어졌다	33.0
실질적으로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고 중요성도 별로 없다	16.0
하달되는 목표가 없거나 크게 축소되었다	11.0
기타	1.0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3, p. 158.

나. 계획 목표량 미달성 시 처벌

“만일 생산량 등 계획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는 ‘월급 감소’(28.5%)와 ‘사상교육을 받았다’(26.2%)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배급량이 감소했다’(19.2%)는 응답이 가장

I
II
III
IV
V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가가 부여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정치적 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는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을 생산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관리·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도 13.8%를 차지하여 국가계획의 통제 밖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 계획 목표량 미달성 시 처벌

항목	비중(%)
배급량이 줄었다	19.2
월급이 줄었다	28.5
보너스가 줄었다	3.1
승진에 지장이 있다	6.2
감옥에 갔다	0.8
사상교육을 받았다	26.2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13.8
기타	2.3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4, p. 159.
 * 기타 응답: <책임자 직위 해임>, <항상 수행했음>, <직장에 돈을 보낼 때도 있다>.

계획 목표량 미달성 시 처벌 받는 내용과 관련하여, 소속 직장에 따른 차이점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농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는 ‘배급량이 줄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57.7%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광업 종사자들 중에서는 37.5%가 ‘사상교육을 받

았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제조업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탈북자 대부분의 출신지역인 지방의 소규모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제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 계획 초과 달성 시 보상

계획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34.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훈장'(25.2%)과 '월급 증가'(15.7%), '배급 증가'(11.3%) 등으로 나타났다. 목표 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또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보상을 앞세우면서 경제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0년 이후 '아무 보상이 없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이다.

결국 북한당국은 생산계획과 관련해서 미달성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초과 달성의 경우에는 별다른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표 IV-3 계획 초과 달성 시 보상

항목	비중(%)
배급량이 늘었다	11.3
월급이 늘었다	15.7
보너스가 늘었다	1.7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9.6
훈장을 받았다	25.2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34.8
기타	1.7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5, p. 159.

* 기타 응답: <상장>, <그런 적이 없다>.

라. 액상계획의 중요도

“액상계획(또는 번수입지표) 등은 귀하의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시 하였다’(36%)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표 계획의 중요성은 덜 강조된다’(19%)고 응답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액상계획이 ‘거의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다’는 응답도 31%나 차지하고 있어 계획시스템의 붕괴 이후 액상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 액상계획의 중요도

항목	비중(%)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36.0
목표생산량 등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19.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31.0
액상계획 또는 변수입지표 같은 것이 없었다	12.0
기타	2.0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6, p. 160.

액상계획에 대한 강조의 정도는, 소속 직장 단위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 및 임업의 경우는 액상계획이 '목표생산량 등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이 34.6%였고,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30.8%로 그 뒤를 이었다. 광업 종사자들도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31.3%로 가장 많았고,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이 25%였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액상계획이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고 응답한 비중과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똑같이 40.9%였다. 응답자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어업, 공공행정 등의 산업에서 종사했던 사람들도 '액상계획이 가장 중시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운수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50%,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소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37.5%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는 응답이 30.4%로 바로 뒤를 이었다.

I
II
III
IV
V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액상계획이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는 22.2%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37.5%가 목표생산량 등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산계획이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계획 다음으로 액상계획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연도에 따라서도 응답 내용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2009년에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 액상계획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답한 사람과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이 60%와 40%였으나, 2010년에는 액상계획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41.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의 경우에는 다시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41.4%,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0년 화폐개혁 이후 시장경기의 침체와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액상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되었다가 이후 점차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 기업의 시장 활용의 중요성

“직장이 직접 생산물이나 자재 등을 시장에서 팔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은 귀하의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특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응답자의 비중이 거의 균등하게 나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기업들의 시장 활용 정도가 기업소·협동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IV-5 기업의 시장 활용의 중요성

항목	비중(%)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25.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25.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24.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25.0
기타	1.0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7, p. 160.

기업의 시장 활용의 중요성은 응답자가 소속된 산업별로 차이가 발견되었다. 농업 및 임업 종사자들의 경우 34.6%가 시장 활용이 '국가 계획달성보다 우선시되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43.8%와 31.8%가 '국가 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건설업, 운수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등의 산업부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장 활용의 정도가 산업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바.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가 계획에 의거하여 조달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이나 개인적인 연줄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조달한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평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기업들이 국가 계획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행태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I
II
III
IV
V

고 있다.

다만, 근무한 직장의 산업별 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종사했던 농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각각 61.5%, 62.5%, 6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 등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가계획에 따라 자재 등을 조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했거나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은 직장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나타나고 있다. 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50%가 ‘국가계획에 따라 자재와 물품을 조달했다’고 응답했다.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6.7%가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했다’고 대답했으며,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62.5%가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했다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한 응답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급기업소처럼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계획의 틀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해결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국가계획에 의존하여 자재와 물품을 조달한다는 응답은 탈북 연도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IV-6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

항목	비중(%)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47.1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조달	16.5
시장에서 구입	19.8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11.6
기타	5.0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8, p. 160.

* 기타 응답: <공장물품 절도>, <생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음>.

사.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국가계획에 따라 자재 등을 조달한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물자부족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통한 자재 및 물품 조달의 비중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요한 자재 물품의 '20% 미만'을 국가계획에 의존하여 조달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40%)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20~40% 정도'를 국가계획에 따라서 조달한다는 응답이 19%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약 60%)들이 생산에 필요한 물자 중에서 '40% 이하' 만을 국가계획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7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항목	비중(%)
20%미만	40.0
20~40%	19.0
40~60%	12.0
60~80%	9.0
80%이상	7.0
잘 모름	13.0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39, p. 161.

I
II
III
IV
V

직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39.3%가 ‘20% 미만’의 자재와 물품이 국가계획에 따라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였다고 답했다.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41.7%가 ‘20% 미만’이라고 답했고, 그 뒤로 27.8%가 ‘20~40% 정도’의 자재와 물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했다고 답했다. 이는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7.5%의 응답자가 필요한 자재·물품의 ‘20% 미만’을 국가계획에 의존한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25%의 응답자가 ‘20~40% 수준’을 국가계획에 의존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의 물자조달체계가 거의 붕괴된 것으로 평가된 상황에서도 전체의 과반수에 해당되는 기업·협동조합들이 국가계획에 따른 물자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의존 정도가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당국의 통일적 계획 관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기업의 생산물 처분 방식

응답자의 직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계획에 따라 처분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장에서 판매’(12.1%)하거나 ‘개인적 연줄로 처분’(10.5%)하는 경우도 약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물을 국가 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8 기업의 생산물 처분 방식

항목	비중(%)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64.5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결로 처분	10.5
시장에서 판매	12.1
종업원들에게 지급	8.1
기타	4.8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40, p. 161.

* 기타 응답: <개인의 주문을 받았다>.

자.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비중

“직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한 생산물의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23%가 생산물의 ‘80% 이상’을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처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이 ‘2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에 달하고 있어서 직장의 성격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처분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산물을 국가 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IV-9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비중

항목	비중(%)
20%미만	18.0
20~40%	16.0
40~60%	14.0
60~80%	10.0
80%이상	23.0
잘 모름	17.0
합계	98.0

참고: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의 문항 41, p. 161.

I
II
III
IV
V

직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에서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한 생산물의 비중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농업 및 임업, 광업의 경우에는 ‘80% 이상’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3.1%,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2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20~40%’라고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농업 및 임업, 광업의 경우에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역별 차이도 관찰되고 있다.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들의 24.6%가 ‘80% 이상’이라고 답한 반면, 함경남도 출신들은 ‘20%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37.5%), 양강도 출신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인 33.3%가 ‘40~60%’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주요 산업구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시장화 실태 비교

기존의 연구 중에서 본 설문조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업이 2008년 수행된 바 있어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¹⁵⁰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화폐개혁 전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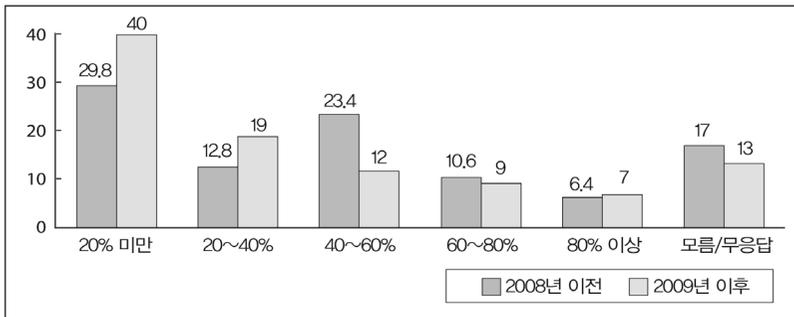
¹⁵⁰-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가. 국영기업의 자재조달 관련 비중

북한기업의 자재조달에서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0%가 계획에 따라 자재를 조달받는 비율이 낮은 수준(20%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9년 이후에 약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로부터 '20% 미만'으로 자재를 조달받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재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기업 활동 대부분이 시장과 같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화폐개혁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V-10 국영기업의 자재조달 관련 계획의 비중¹⁵¹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모름/ 무응답
2008년 이전	29.8	12.8	23.4	10.6	6.4	17.0
2009년 이후	40.0	19.0	12.0	9.0	7.0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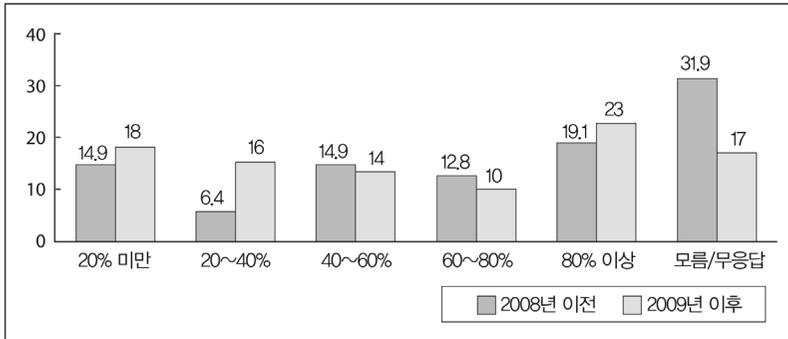
¹⁵¹- 위의 책, p. 65의 표 3-5와 본 연구의 설문 39번의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 작성함.

나. 국영기업의 생산물 처분 관련 비중

국영기업의 생산물 판매는 자재조달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생산물 판매에 있어도 계획의 비중은 ‘20%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3%는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분 중에서 ‘80% 이상’은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답하였다. 자재 조달에 비해서 생산물 처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와 관여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V-11 국영기업의 생산물 처분 관련 계획의 비중¹⁵²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모름/ 무응답
2008년 이전	14.9	6.4	14.9	12.8	19.1	31.9
2009년 이후	18.0	16.0	14.0	10.0	23.0	17.0



¹⁵² 위의 책, p. 67의 표 3-6과 본 연구의 설문 41번의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 작성함.

화폐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재조달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산물의 처분에서 계획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화폐개혁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만을 놓고 보면,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물의 처분에서 계획의 비중이 ‘40% 이하’라는 응답에서도 화폐개혁 이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명백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8·3 노동자’의 비율

노동자에게 자유활동을 허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상납을 요구하는 ‘8·3 노동자’는 북한에서 기업들이 시장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의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 기업의 8·3 노동자 비율이 평균 2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을 통해서 화폐개혁 이후에 8·3 노동자가 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폐개혁 이후 노동력의 비공식적인 활용 정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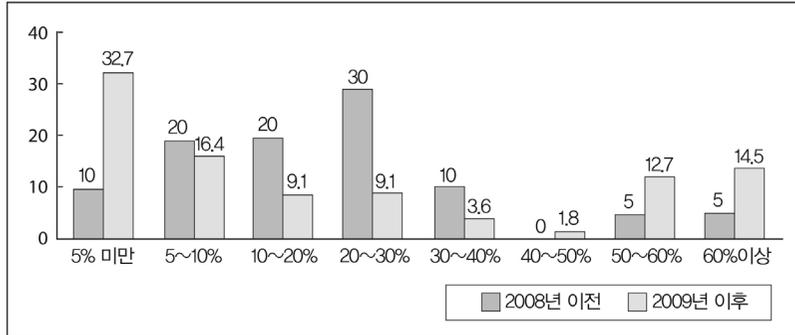
다음의 표는 북한 기업에 존재하는 8·3 노동자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북한 기업의 8·3 노동자 비율이 대체로 5~30% 사이의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5~30%정도라고 대답한 것이다. 2009년 이후에도 대체로 8·3 노동자 비율이 5~30% 정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50% 이상 비율을 차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결국, 화폐개혁 이후 8·3 노

I
II
III
IV
V

동자의 비중이 양 극단을 형성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특정그룹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어 5% 미만으로만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가 거의 관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통제가 완화되어 8:3 노동자를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으로 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IV-12 국영기업에서의 8:3 노동자 비율¹⁵³

	5% 미만	5~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 이상
2008년 이전	10.0	20.0	20.0	30.0	10.0	0.0	5.0	5.0
2009년 이후	32.7	16.4	9.1	9.1	3.6	1.8	12.7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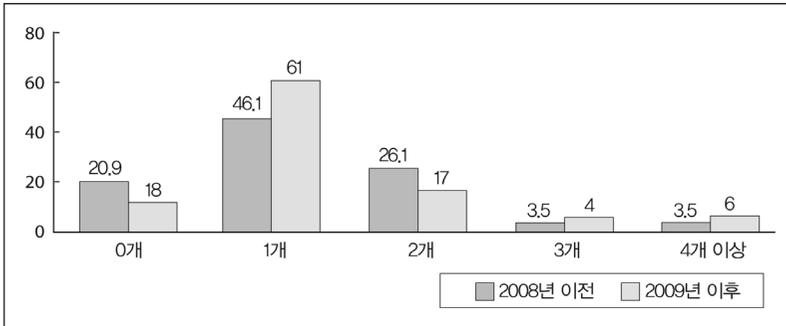
¹⁵³ 위의 책, p. 69의 표 3-7과 본 연구의 설문 53-1번의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 작성함.

라. 시장의 개수

2008년 이전에 북한을 떠난 응답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동 또는 리)에 시장이 평균 ‘1개’(46.1%) 또는 ‘2개’(26.1%) 존재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2009년 이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1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1%로 월등하게 많았으며,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소폭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번 설문 결과만을 놓고 보면,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3 시장의 개수¹⁵⁴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2008년 이전	20.9	46.1	26.1	3.5	3.5
2009년 이후	12.0	61.0	17.0	4.0	6.0



¹⁵⁴ 위의 책, p. 79의 표 3-10과 본 연구의 설문 105번의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 작성함.

마.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비율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를 묻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전 탈북자의 50% 이상이 스스로 비공식 경제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참여한 경우도 60%를 넘었다. 이러한 현상은 화폐개혁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이후의 경우에도 응답자 본인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약간 증가(57%)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본인 외 가족이 비공식부문에 참여한 경우는 32.6%로 오히려 화폐개혁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비공식 경제활동 추세와는 통계적으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반 예상을 벗어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비율¹⁵⁵

	본인 비공식부문 참여	본인 외 가족의 비공식부문 참여
2008년 이전	53.5	62.5
2009년 이후	57.0	32.6

바. 부업의 종류

생계를 위해 종사한 부업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2008년 이전에는 ‘장사’라고 불리는 시장거래 행위에 참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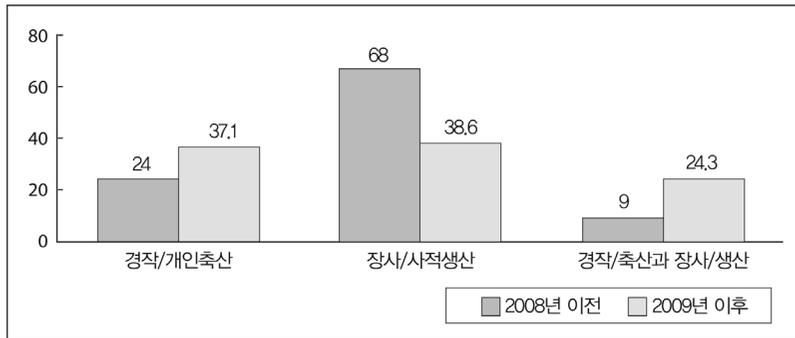
¹⁵⁵ 위의 책, p. 48의 그림 3-1과 본 연구의 설문 59번과 59-1번의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 작성함.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본인이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했다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68%가 ‘장사’에 종사했다고 밝혔으며, 약 24%는 폐기 발과 같은 ‘사적인 경작’에 그리고 나머지 9%정도는 ‘사적인 경작 및 축산 등의 다양한 부업활동을 함께 했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2009년 이후의 응답을 살펴보면 부업 종류의 순위는 같지만, ‘장사나 사적생산을 부업으로 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약 39%)이 크게 줄어 ‘경작이나 개인축산’(37.1%)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고, ‘폐기발 경작과 사적 축산뿐만 아니라 장사에도 참여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24.3%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부업활동이 보다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15 부업의 종류¹⁵⁶

	경작 혹은 개인 축산	장사 혹은 사적 생산	경작/축산과 다른 일을 함께함
2008년 이전	24	68	9
2009년 이후	37.1	38.6	24.3



¹⁵⁶ 위의 책, p. 49의 내용과 본 연구의 설문 60번의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 작성함.

4.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교차분석 주요 결과

국영기업의 시장활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한 산업의 종류와 탈북 연도를 중심으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

(1) 목표 달성 실패 시 처벌

생산량 계획목표량 달성 실패 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의 표본 규모를 제공하는 산업분야는 농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는 ‘배급량이 줄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57.7%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광업 종사자들 중에서는 37.5%가 ‘사상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제조업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숫자가 적은 기타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응답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종류별로 처벌의 유무나 처벌의 형태가 차이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16 목표 달성 실패 시 처벌의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¹⁵⁷

처벌사항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수도			수도				서비스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15	2	4	3	0	0	0	0
	%	57.7	12.5	18.2	75.0	0.0	0.0	0.0	0.0
월급이 줄었다	빈도	2	4	6	1	3	2	2	5
	%	7.7	25.0	27.3	25.0	50.0	33.3	40.0	62.5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0	2	0	0	0	0	0	1
	%	0.0	12.5	0.0	0.0	0.0	0.0	0.0	12.5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2	1	0	0	2	0	0	0
	%	7.7	6.3	0.0	0.0	33.3	0.0	0.0	0.0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4	6	3	0	1	2	3	1
	%	15.4	37.5	13.6	0.0	16.7	33.3	60.0	12.5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3	1	8	0	0	2	0	1
	%	11.5	6.3	36.4	0.0	0.0	33.3	0.0	12.5
기타	빈도	0	0	1	0	0	0	0	0
	%	0.0	0.0	4.5	0.0	0.0	0.0	0.0	0.0

(2) 목표 초과 달성 시 보상

계획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이(26%) 몸을 담고 있었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34.6%가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자들 중에서는 54.5%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광업 종사자

¹⁵⁷- 설문조사 문항 34번과 문항 22번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들은 31.3%가 ‘훈장을 받았다’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25%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북한의 제조업부문에서는 목표의 달성과 관련해서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7 목표 초과 달성 시 보상에 대한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¹⁵⁸

보상사항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수도			수도				서비스
배급량이 늘었다	빈도	6	2	1	2	0	1	0	0
	%	23.1	12.5	4.5	50.0	0.0	16.7	0.0	0.0
월급이 늘었다	빈도	5	3	3	1	1	0	1	1
	%	19.2	18.8	13.6	25.0	16.7	0.0	20.0	12.5
보너스가 늘었다	빈도	0	0	0	0	1	0	0	0
	%	0.0	0.0	0.0	0.0	16.7	0.0	0.0	0.0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2	1	1	0	1	0	1	0
	%	7.7	6.3	4.5	0.0	16.7	0.0	20.0	0.0
훈장을 받았다	빈도	3	5	5	0	2	2	1	1
	%	11.5	31.3	22.7	0.0	33.3	33.3	20.0	12.5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빈도	9	4	12	1	1	3	2	6
	%	34.6	25.0	54.5	25.0	16.7	50.0	40.0	75.0
기타	빈도	1	1	0	0	0	0	0	0
	%	3.8	6.3	0.0	0.0	0.0	0.0	0.0	0.0

¹⁵⁸ 설문조사 문항 35번과 문항 22번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3) 액상계획(또는 변수입지표)의 중요도

액상계획 혹은 변수입지표 등이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였던 탈북자들의 경우는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8%를 차지했으며, 목표생산량 등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이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실물 지표계획이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액상계획이 중요한 계획지표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업 종사자들은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답한 사람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25%였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과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똑같이 4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표계획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해서 제조업분야에서 국가의 지표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어업, 공공행정 등의 산업에서 종사했던 사람들도 ‘액상계획이 가장 중시되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운수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중이 각각 50%, 62.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운수업과 개인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에 따른 생산 및 성과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IV-18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¹⁵⁹

중요도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수도			수도				서비스
최우선 목표	빈도	8	5	9	1	2	1	3	3
	%	30.8	31.3	40.9	25.0	33.3	16.7	60.0	37.5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	빈도	9	4	3	1	2	0	0	0
	%	34.6	25.0	13.6	25.0	33.3	0.0	0.0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6	3	9	1	1	3	1	5
	%	23.1	18.8	40.9	25.0	16.7	50.0	20.0	62.5
액상계획이 없었다	빈도	2	3	1	1	1	2	1	0
	%	7.7	18.8	4.5	25.0	16.7	33.3	20.0	0.0
기타	빈도	1	1	0	0	0	0	0	0
	%	3.8	6.3	0.0	0.0	0.0	0.0	0.0	0.0

(4)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의 중요도

근무했던 직장에서 생산물이나 자재 등을 시장에서 팔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일이 국가계획 달성과 비교해서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농업 및 임업 종사자들의 경우 34.6%가 ‘국가 계획달성보다 우선시되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43.8%와 31.8%가 ‘국가 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고 답하였다. 농업과 임업부분의 시장에 대한 활용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제조업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생산물 처분 등을 위해서 시장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점이다. 앞에서 살펴

¹⁵⁹ 설문조사 문항 36번과 문항 22번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에서 제조업부분이 국가의 생산계획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건설업, 운수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등의 산업에서는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을 활용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산업의 종류에 따라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의 중요도가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표 IV-19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 중요도의 산업별 차이점¹⁶⁰

중요도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수도			수도				서비스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9	3	5	1	1	0	1	2
	%	34.6	18.8	22.7	25.0	16.7	0.0	20.0	25.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 되었다	빈도	7	7	7	1	1	1	1	0
	%	26.9	43.8	31.8	25.0	16.7	16.7	20.0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3	4	5	2	2	3	2	2
	%	11.5	25.0	22.7	50.0	33.3	50.0	40.0	25.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7	1	5	0	2	2	1	4
	%	26.9	6.3	22.7	0.0	33.3	33.3	20.0	50.0
기타	빈도	0	1	0	0	0	0	0	0
	%	0.0	6.3	0.0	0.0	0.0	0.0	0.0	0.0

¹⁶⁰ 설문조사 문항 37번과 문항 22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5)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어떻게 조달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의 구성에 있어서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모두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61.5%, 62.5%, 68.2%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 등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지 개인 서비스업에서만 국가계획에 따른다는 응답이 12.5%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시장에서 구입했거나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똑같이 37.5%로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계획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부여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개인적인 연줄과 시장 등 계획 이외의 방식을 통한 자재와 물품의 조달은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0 생산에 필요한 자재·물품 조달방식의 산업종류별 차이점¹⁶¹

조달방법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운수	공공 행정	기타 개인 서비스
		민업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16	10	15	3	4	3	3	1
	%	61.5	62.5	68.2	75.0	66.7	50.0	60.0	12.5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7	2	3	1	0	1	0	1
	%	26.9	12.5	13.6	25.0	0.0	16.7	0.0	12.5
시장에서 구입	빈도	0	3	3	0	2	1	1	3
	%	0.0	18.8	13.6	0.0	33.3	16.7	20.0	37.5
각출/ 스스로 조달	빈도	2	0	1	0	0	0	0	3
	%	7.7	0.0	4.5	0.0	0.0	0.0	0.0	37.5
기타	빈도	1	1	0	0	0	1	1	0
	%	3.8	6.3	0.0	0.0	0.0	16.7	20.0	0.0

(6) 자재와 물품의 조달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재와 물품 가운데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된 자재와 물품이 차지한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다수가 종사했던 농업 및 임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 미만’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제조업과 건설업부문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는 비율이 ‘20~40%’에 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

¹⁶¹ 설문조사 문항 38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결과에 따라 문항 22번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난 앞에서의 결과와 충돌하고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국가계획을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계획을 통해서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1 자재·물품 조달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산업별 차이점¹⁶²

비중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수도			수도				서비스
20% 미만	빈도	11	5	7	2	1	5	1	4
	%	42.3	31.3	31.8	50.0	16.7	83.3	20.0	50.0
20~40%	빈도	3	4	8	1	2	0	1	0
	%	11.5	25.0	36.4	25.0	33.3	0.0	20.0	0.0
40~60%	빈도	3	4	1	0	2	0	0	1
	%	11.5	25.0	4.5	0.0	33.3	0.0	0.0	12.5
60~80%	빈도	2	2	1	1	1	0	1	1
	%	7.7	12.5	4.5	25.0	16.7	0.0	20.0	12.5
80% 이상	빈도	3	0	2	0	0	0	1	0
	%	11.5	0.0	9.1	0.0	0.0	0.0	20.0	0.0
잘 모름	빈도	4	1	3	0	0	1	1	2
	%	15.4	6.3	13.6	0.0	0.0	16.7	20.0	25.0

(7) 생산물의 처분 방식

생산된 생산물은 어떻게 처분하였는가에 대한 응답을 산업 종류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속해있었던 농업 및 임업,

¹⁶² 설문조사 문항 39번과 문항 22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광업,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각각 92.3%, 81.3%, 86.4%로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많은 숫자의 탈북자들이 속하진 않지만 여타 다른 사업에서도 모두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장에서 판매했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자재·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생산과정보다는 생산물의 처분과정에 국가계획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생산과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생산물 처분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2 생산물의 처분에서 산업별 차이점¹⁶³

처분방법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서비스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24	13	19	4	6	3	4	3
	%	92.3	81.3	86.4	100.0	100.0	50.0	80.0	37.5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1	1	1	0	0	1	0	2
	%	3.8	6.3	4.5	0.0	0.0	16.7	0.0	25.0
시장에서 판매	빈도	1	0	0	0	0	1	0	1
	%	3.8	0.0	0.0	0.0	0.0	16.7	0.0	12.5
종업원에게 지급	빈도	0	0	1	0	0	0	0	1
	%	0.0	0.0	4.5	0.0	0.0	0.0	0.0	12.5
기타	빈도	0	2	1	0	0	1	1	1
	%	0.0	12.5	4.5	0.0	0.0	16.7	20.0	12.5

¹⁶³ 설문조사 문항 40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결과에 따라 문항 22번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8) 생산물의 처분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생산된 생산물 중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한 생산물의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는 앞의 결과와 다른 해석이 가능한 혼란스러운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생산물을 처분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비중만이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23 생산물 처분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산업별 차이점¹⁶⁴

비중	산업별	농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운수	공공	기타
		임업			가스			행정	개인
		수도			수도				서비스
20%미만	빈도	4	2	6	1	1	1	0	3
	%	15.4	12.5	27.3	25.0	16.7	20.0	0.0	37.5
20~40%	빈도	4	3	4	1	2	1	0	1
	%	15.4	18.8	18.2	25.0	33.3	20.0	0.0	12.5
40~60%	빈도	5	4	0	1	0	1	1	0
	%	19.2	25.0	0.0	25.0	0.0	20.0	20.0	0.0
60~80%	빈도	2	0	3	1	1	1	1	1
	%	7.7	0.0	13.6	25.0	16.7	20.0	20.0	12.5
80%이상	빈도	6	5	4	0	1	0	2	2
	%	23.1	31.3	18.2	0.0	16.7	0.0	40.0	25.0
잘 모름	빈도	5	2	5	0	1	1	1	1
	%	19.2	12.5	22.7	0.0	16.7	20.0	20.0	12.5

¹⁶⁴ 설문조사 문항 41번과 문항 22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농업·임업과 광업의 경우에는 ‘80%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1%, 31.3%로 가장 많았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20~40%’라고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농업·임업과 광업의 경우에 생산물을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최종 탈북 연도에 따른 차이점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종 탈북 연도가 2009년 이후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탈북 연도별로 설문대상자를 고르게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최종 탈북 연도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가 연도별 북한경제의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지니는 한계가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09년과 2013년에 최종적으로 탈북한 응답자들의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표 IV-24 최종 탈북 연도별 설문대상자의 숫자와 비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009	5	5.0	5.0	5.0
2010	46	46.0	46.0	51.0
2011	29	29.0	29.0	80.0
2012	19	19.0	19.0	99.0
2013	1	1.0	1.0	100.0
합계	100	100.0	100.0	

(1) 목표 달성 실패 시 처벌 행태

생산량 계획목표량 달성 실패 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을 최종 탈북 연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사상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불이익 부과라는 차원에서 ‘월급 감소’는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배급량 감소’는 2010년에 비해 2011년과 2012년에는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너스 감소’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표 달성 실패 시 부과된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배급량 감소’라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불이익 부과라는 측면에서는 ‘사상교육’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승진에 대한 제약’은 2011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마저도 2010년부터는 점차 강도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25 목표 달성 실패 시 처벌행태의 시기별 차이점¹⁶⁵

처벌사항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0	11	9	5	0
	%	0.0	23.9	31.0	26.3	0.0
월급이 줄었다	빈도	1	15	7	4	0
	%	20.0	32.6	24.1	21.1	0.0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1	1	0	1	0
	%	20.0	2.2	0.0	5.3	0.0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0	4	3	0	0
	%	0.0	8.7	10.3	0.0	0.0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1	7	7	5	1
	%	20.0	15.2	24.1	26.3	100.0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2	7	3	4	0
	%	40.0	15.2	10.3	21.1	0.0
기타	빈도	0	1	0	0	0
	%	0.0	2.2	0.0	0.0	0.0

(2) 목표 초과 달성 시 보상

계획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비중도 2010년(34.8%), 2011년(41.4%), 2012년(47.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¹⁶⁵ 설문조사 문항 34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결과에 따라 인적사항 4번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훈장을 받았다’는 응답도 미세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26 목표 초과 달성 시 보상에 대한 시기별 차이점¹⁶⁶

보상사항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배급량이 늘었다	빈도	0	8	3	2	0
	%	0.0	17.4	10.3	10.5	0.0
월급이 늘었다	빈도	0	7	5	3	0
	%	0.0	15.2	17.2	15.8	0.0
보너스가 늘었다	빈도	0	1	0	0	0
	%	0.0	2.2	0.0	0.0	0.0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0	5	2	1	0
	%	0.0	10.9	6.9	5.3	0.0
훈장을 받았다	빈도	4	8	6	4	0
	%	80.0	17.4	20.7	21.1	0.0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빈도	1	16	12	9	1
	%	20.0	34.8	41.4	47.4	100.0
기타	빈도	0	1	1	0	0
	%	0.0	2.2	3.4	0.0	0.0

¹⁶⁶ 설문조사 문항 35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결과에 따라 인적사항 4번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3) 액상계획(또는 변수입지표)의 중요도

액상계획 혹은 변수입지표 등이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요시되었다’는 응답과 ‘액상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에,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시되었다’는 응답과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보면, 2010년에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요시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액상계획 목표에 대한 중요성이 2010년 이후에 보다 강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7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시기별 차이점¹⁶⁷

중요도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빈도	3	11	12	9	1
	%	60.0	23.9	41.4	47.4	100.0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빈도	2	12	3	2	0
	%	40.0	26.1	10.3	10.5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0	19	9	3	0
	%	0.0	41.3	31.0	15.8	0.0
액상계획 등과 같은 것이 없었다	빈도	0	3	4	5	0
	%	0.0	6.5	13.8	26.3	0.0
기타	빈도	0	1	1	0	0
	%	0.0	2.2	3.4	0.0	0.0

¹⁶⁷ 설문조사 36번과 인적사항 4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4)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의 중요도

본인이 근무한 직장에서 생산물이나 자재 등을 직접 시장에 팔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가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중시되었다’는 응답과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는 응답이 차지한 비중이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응답도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IV-28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 중요도의 시기별 차이점¹⁶⁸

중요도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2	12	8	3	0		
	%	40.0	26.1	27.6	15.8	0.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빈도	1	13	8	3	0		
	%	20.0	28.3	27.6	15.8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1	9	5	9	0		
	%	20.0	19.6	17.2	47.4	0.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1	11	8	4	1		
	%	20.0	23.9	27.6	21.1	100.0		
기타	빈도	0	1	0	0	0		
	%	0.0	2.2	0.0	0.0	0.0		

¹⁶⁸ 설문조사 37번과 인적사항 4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종합하면,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 활용의 중요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시장 활용의 중요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은 어떻게 조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응답자의 50%가, 2011년의 경우에는 65.5%가, 2012년에는 57.9%가 국가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였다고 답하여 여전히 국가계획이 개인적 연줄이나 시장에 비해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생산에 필요한 자재·물품 조달방식의 시기별 차이점¹⁶⁹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4	23	19	11	0
	%	80.0	50.0	65.5	57.9	0.0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0	8	5	3	0
	%	0.0	17.4	17.2	15.8	0.0
시장에서 구입	빈도	1	11	1	2	0
	%	20.0	23.9	3.4	10.5	0.0
근로자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빈도	0	2	2	2	1
	%	0.0	4.3	6.9	10.5	100.0
기타	빈도	0	2	2	1	0
	%	0.0	4.3	6.9	5.3	0.0

¹⁶⁹ 설문조사 문항 38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결과에 따라 인적사항 4번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반면에 ‘시장에서 조달했다’는 응답은 2010년 23.9%에서 2011년 3.4%, 2012년 10.5%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물 처분에서 시장의 중요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 것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6) 자재와 물품의 조달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계획 목표량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 자재와 물품 가운데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된 자재와 물품의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2009년까지는 20~60%대였으나 2010년 이후의 경우에는 40%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0 자재·물품 조달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시기별 차이점¹⁷⁰

비중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미만	빈도	0	19	11	10	0
	%	0.0	41.3	37.9	52.6	0.0
20~40%	빈도	2	10	5	2	0
	%	40.0	21.7	17.2	10.5	0.0
40~60%	빈도	2	5	5	0	0
	%	40.0	10.9	17.2	0.0	0.0
60~80%	빈도	0	4	2	3	0
	%	0.0	8.7	6.9	15.8	0.0
80%이상	빈도	0	3	2	2	0
	%	0.0	6.5	6.9	10.5	0.0
잘 모름	빈도	1	5	4	2	1
	%	20.0	10.9	13.8	10.5	100.0

¹⁷⁰- 설문조사 39번과 인적사항 4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7) 생산물의 처분 방식

응답자가 근무한 직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처분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했다’는 응답은 절대적인 비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1 생산물의 처분에서 시기별 차이점¹⁷¹

처분방법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4	38	22	15	1
	%		80.0	82.6	75.9	78.9	100.0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0	1	4	1	0
	%		0.0	2.2	13.8	5.3	0.0
시장에서 판매	빈도		1	3	1	0	0
	%		20.0	6.5	3.4	0.0	0.0
종업원들에게 지급	빈도		0	1	1	0	0
	%		0.0	2.2	3.4	0.0	0.0
기타	빈도		0	3	1	3	0
	%		0.0	6.5	3.4	15.8	0.0

(8) 생산물의 처분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직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한 생산물의 비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감소한

¹⁷¹ 설문조사 문항 40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결과에 따라 인적사항 4번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질문에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생산물을 처분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설문결과는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관념이 강력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생산물 처분에서 국가계획 비중의 시기별 차이점¹⁷²

비중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미만	빈도	1	8	7	2	0
	%	20.0	17.4	25.0	11.1	0.0
20~40%	빈도	0	12	4	0	0
	%	0.0	26.1	14.3	0.0	0.0
40~60%	빈도	1	5	4	4	0
	%	20.0	10.9	14.3	22.2	0.0
60~80%	빈도	0	6	1	3	0
	%	0.0	13.0	3.6	16.7	0.0
80%이상	빈도	1	9	7	5	1
	%	20.0	19.6	25.0	27.8	100.0
잘 모름	빈도	2	6	5	4	0
	%	40.0	13.0	17.9	22.2	0.0

¹⁷² 설문조사 41번과 인적사항 4번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V

맺음말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양기초식품공장이 북한당국의 “경제지도와 관리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의 시범단위로 지정되었다.¹⁷³ 이 공장은 앞으로 ‘원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영과 생산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생산물을 생산하여 넘겨주는데까지 지출된 비용”인 원가를 보상해준다는 원칙이 적용되면 “국가계획을 벗어나 공장이 자체로 산 연료를 가지고 확대재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토의 아래 공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실험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계획 밖에서의 경영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들이 시장영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경제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요약·정리한 내용들이다.

1.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부문과 북한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발견되는 비공식 경제부문의 특징은 대체로 북한의 시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비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고, 공식부문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식부문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경쟁적인 측면과 보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¹⁷³ 『조선신보』, 2013년 11월 6일.

차이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비공식 경제부문은 조세 등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와 관료들의 탈취 속에서 비공식부문에서의 활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제도화가 극히 미흡하다는 점이 다른 개도국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기업들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방식의 주요 특징

국영기업들이 비공식부문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활용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단위의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계획시스템이 와해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계획을 토대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계획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시장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둘째, 생산단계에서는 비공식(시장)부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에서 기업들의 생존전략은 시장 등 비공식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개인 자산가(이른바 ‘돈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특

장점을 살려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설비·자재를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셋째, 생산물 처분단계에서는 비공식(시장)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는 자신들의 생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 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 등에서 유통되지만 시장에 생산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기업 차원에서 공식적인 거래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지만 제한적이거나 국가가 공급한 원자재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산업분야에 따른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수준의 격차

북한에서 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제조업부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업 및 임업분야에서는 정부의 물량공급과 배급이 최소한의 수준에는 제공된다는 점에서 계획체제의 틀이 가장 많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이 외화벌이 및 연료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광산부문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및 통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은 계획체제의 유지와 시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양면성을

I
II
III
IV
V

지니고 있다. 국가계획의 완수를 강력하게 요구받는다든 점에서 광산분야에서처럼 계획체계의 틀이 강조되고 있지만 생산물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조업처럼 시장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4. 국가 계획에 대한 고착화된 관념과 현실적 인식의 괴리

국가적으로는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계획의 종류와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국가계획의 달성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관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물자는 극도로 부족한 상황을 직시할 경우 국가계획에 따른 물자공급과 생산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관념적으로는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비공식부문을 통해 생산 및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북한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화 가능성

북한에서 기업들이 시장이 포함된 비공식적인 경제부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시장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침체 현상은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과 노후화 된 설비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연료와 기계·설비 등을 우호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주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계기로 정상거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공장·기업소에서의 생산은 급감하였으며 노동자들은 사실상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활성화되어 온 시장은 북한에서 국영기업부문에서 발생한 잠재적 실업을 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와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국내총생산량을 결정하는 투입 노동력의 규모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국민총생산액을 증대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 북한에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의 계량화된 평가작업에서는 여전히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이 외부의 추정작업에는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당국이 비공식부문에서

의 경제활동을 공식화하면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북한당국은 앞으로도 시장을 완전하게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기업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비공식영역을 활용하는 현상은 북한당국의 고민 속에서 점차적으로 공식화 및 제도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향후 기업부문의 개혁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대학용』.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이 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Aryeetey, Ern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of the Financial Market in Ghana. Vol. 10*. Oxford: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1992.

Germidis, Dimitrios A., Denis Kessler, and Rachel Meghir. *Financial Systems and Development: What Role for the Formal and Informal Financial Sectors*. Paris: OECD Publishing, 1991.

Guha-Khasnobis, Basudeb, Ravi Kanbur, and Elinor Ostrom (eds.).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ILO. *Informal Sector in Africa*. Addis Ababa: JASPA, 1985.

2. 논문

강응철.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제4호, 2002.

- 김경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 『경제연구』. 제4호, 2005.
- 김옥경. “일군들이 강한 생활력을 가지는 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2호, 2010.
- 김주성. “인민경제계획구율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3호, 2009.
- 김학성. “현 시기 계획의 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방도.” 『경제연구』. 제3호, 2011.
- 리진수. “국가의 계획적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제3호, 2010.
-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5호 (한국정치학회), 2012.
- 박홍엽. “국영기업소 경영상상대적독자성의 사회경제적기초.” 『경제연구』. 제3호, 2001.
- 송 미. “공업기업소 자재확보사업에서 예측방법의 적용.” 『경제연구』. 제3호, 2010.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북한경제리뷰』. 제15권 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정영룡.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경제연구』. 제2호, 2003.
- Altman, Miriam. “Low Wage Work in South Africa.” IAZ/World Bank Conference on Employment & Development. Berlin, Germany. May 25~27, 2006.
- Arimah, Ben C. “Nature and Determinants of the Linkages between Informal and Formal Sector Enterprises in Nigeria.”

- African Development Review*. Vol. 13, No. 1, 2001.
- Arvin-Rad, Hassan, Arnab K. Basu, and Maria Willumsen. "Economic Reform, Informal-Formal Sector Linkages and Intervention in the Inform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A Paradox."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Vol. 19, No. 4, 2010.
- Bairagya, Indrajit. "Liberalization, Informal Sector and Formal-Informal Sectors' Relationship: A Study of India." The 31st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St. Gallen, Switzerland. August 22~28, 2010.
- Böhme, Marcus and Rainer Thiele. "Informal-Formal Linkages and Informal Enterprise Performance in Urban West Africa." *Kiel Working Papers*. No. 1751, January 2012.
- Chakrabarti, Saurya and Anirban Kundu. "Formal-Informal Sectors' Conflict: A Structuralist Framework for Indi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34, No. 2, December 2009.
- Chen, Martha A. "Rethinking the Informal Economy: Linkages with the Formal Economy and the Formal Regulatory Environment."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Working Paper*. No. 46, July 2007.
- Davis, Rob, and James Thurlow.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and Unemployment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Vol. 78, No. 4, 2010.
- Gërzhani, Klarita. "The Informal Sector i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 Literature Survey." *Public choice*. Vol. 120, No. 3~4, 2004.
- Granström, Sigrid Colnerud. "The Informal Sector and Formal

- Competitiveness in Senegal.” *Minor Field Study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Lund). No. 194, 2009.
- Kay, David Dua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Employment in South Africa.”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2011.
- Marjit, Sugata. “Economic Reform and Informal Wage-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2, No. 1, 2003.
- Meagher, Kate. “Crisis, Informalization and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Sub-Saharan Africa.” *Development and Change*. Vol. 26, 1995.
- Pieters, Janneke, Ana I. Moreno-Monroy, and Abdul A. Erumban. “Formal-Informal Linkages and Informal Sector Dynamics: Evidence from India.” The 31st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St. Gallen, Switzerland. August 22~28, 2010.
- Ranis, Gustav and Frances Stewart. “V-goods and the Role of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7, No. 2, 1999.
- Sethykun, Ngoun. “Linkag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Financial Sectors in Cambodia.” *Cambo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 August 2011.
- Sindzingre, Alice. “The Relevance of the Concepts of Formality and Informality: A Theoretical Appraisal.” Basudeb Guha-Khasnabis, Ravi Kanbur, and Elinor Ostrom (eds.).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Tokman, Victor E. “An Exploration into the Nature of Informal-Formal Sector Relationships.” *World Development*. Vol. 6, No. 9~10, 1978.

Valodia, Imraan, Likani Lebani and Caroline Skinner. “Low Waged and Informal Employment in South Africa.”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Southern Africa*. Vol. 60, No. 1, 2006.

3. 기타자료

『조선신보』.

Altman, Miriam.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April 2008. <www.hsrc.ac.za>.

Moreno-Monroy, Ana I. and Abdul A. Erumban. “Chapter 5. Formal-Informal Production Links and Growth of Informal Manufacturing in India.” <www.dissertations.ub.rug.nl>.

Valodia, Imraan. “Formal-Informal Economy Linkages: Some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April 2008.

부록

〈부록 1〉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

I. 북한 경제현황과 체제에 대한 인식

문 1) 탈북 당시 북한의 경제상태가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관찰았다	1	1.0
약간 어려웠다	6	6.0
지역적으로 경제난이 있었다	26	26.0
대부분의 지역에 경제난이 심각하였다	67	67.0
합계	100	100.0

문 2) 만일 경제난이 있었다면,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식량부족	89	89.0
식량을 제외한 생필품 부족	2	2.0
에너지 부족	4	4.0
(공장 기업소 등의)원자재 부족	5	5.0
합계	100	100.0

문 3)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일반 사무직(간부)	2	2.0
일반 생산직(간부)	26	26.0
농어민(농민)	61	61.0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9	9.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 기타 응답: <평백성 모두>, <직장직, 노동직>.

문 4)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예	74	74.0
아니오	12	12.0
잘 모르겠다	14	14.0
합계	100	100.0

문 4-1) (위에서 '예'라고 답하신 분들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경제난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권력이 강화된 북한 지도층	58	78.4
장사, 대출 등으로 돈을 번 상인들	7	9.5
중국 기업이나 상인	8	10.8
기타	1	1.4
합계	74	100.0

기타 응답: <2,3 중복응답>

문 5) 북한에서 경제난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빈도	퍼센트
주체사상 때문	10	10.0
사회주의 체제 때문	31	31.0
북한당국의 부정부패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	53	53.0
미국의 경제 제재때문	2	2.0
자연재해 때문	1	1.0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관계 단절때문	3	3.0
합계	100	100.0

문 6)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29	29.0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8	8.0
잘못된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난을 악화시켰다	63	63.0
합계	100	100.0

문 7) 2002년 7·1조치 등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경제를 크게악화시켰다	65	65.0
경제를 약간 악화시켰다	8	8.0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0	10.0
경제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	5	5.0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2	2.0
잘 모르겠다	10	10.0
합계	100	100.0

문 8) 2002년 7·1조치 등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자본주의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매우 반대한다	36	36.0
다소 반대한다	5	5.0
다소 동의한다	22	22.0
매우 동의한다	18	18.0
잘 모르겠다	19	19.0
합계	100	100.0

문 9) 귀하께서는 탈북 당시 북한 당국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통제력이 거의 없었다	16	16.0
통제력이 약했다	29	29.0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37	37.0
거의 전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18	18.0
합계	100	100.0

문 10) 귀하께서 탈북하실 당시와 탈북하기 수년전을 비교하여 볼 때, 북한 당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크게 약화되었다	43	43.0
약간 약화되었다	20	20.0
변화가 없었다	16	16.0
약간 강화되었다	7	7.0
크게 강화되었다	14	14.0
합계	100	100.0

문 11) (문10에서 '1번', '2번'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첫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경제난 때문에 통제가 힘들어졌다	54	85.7
부업 등 시장경제활동이 증가하여 통제가 힘들어졌다	1	1.6
부정 부패 때문에 통제가 힘들어졌다	5	7.9
북한 당국이 자발적으로 통제를 줄였다	1	1.6
기업소나 주민들이 통제 받기를 싫어하였다	2	3.2
합계	63	100.0

두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제난 때문에 통제가 힘들어졌다	4	6.3	6.5
부업 등 시장경제활동이 증가하여 통제가 힘들어졌다	17	27.0	27.4
부정 부패 때문에 통제가 힘들어졌다	19	30.2	30.6
북한 당국이 자발적으로 통제를 줄였다	8	12.7	12.9
기업소나 주민들이 통제 받기를 싫어하였다	13	20.6	21.0
기타	1	1.6	1.6
합계	62	98.4	100.0
시스템 결측값	1	1.6	
합계	63	100.0	

* 기타 응답: <공급이 없어서>, <결측값>첫번째는 응답하였으나 두번째는 응답하지 않음.

문 12) (문10에서 '4번', '5번'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첫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선군정치 때문에	19	90.5
외부 지원 덕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1	4.8
관리들의 사기가 증진되어	1	4.8
합계	21	100.0

두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외부 지원 덕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7	33.3	35.0
관리들의 사기가 증진되어	11	52.4	55.0
식량 배급이 원활이 되어서	1	4.8	5.0
기타	1	4.8	5.0
합계	20	95.2	100.0
시스템 결측값	1	4.8	
합계	21	100.0	

* 기타 응답: <경제가 어려워져서 강화하였다>, 결측값 <첫 번째는 응답하였으나 두 번째는 응답하지 않음>.

문 13) 귀하께서는 향후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매우 나빠질 것이다	54	54.0
다소 나빠질 것이다	29	29.0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9	9.0
다소 좋아질 것이다	7	7.0
매우 좋아질 것이다	1	1.0
합계	100	100.0

문 14) (문13에서 '4번', '5번'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북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대로 두가지)

첫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자본주의를 더 많이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6	75.0
남한이 북한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2	25.0
합계	8	100.0

두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자본주의를 더 많이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1	12.5
외국 원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1	12.5
남한이 북한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5	62.5
기타	1	12.5
합계	8	100.0

* 기타 응답: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따라 하기 때문에>.

문 15) (문13에서 '1번', '2번'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북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63	75.9
부정부패 때문에	6	7.2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줄 것이기 때문에	4	4.8
남한으로부터의 원조가 줄 것이기 때문에	2	2.4
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4	4.8
기타	4	4.8
합계	83	100.0

* 기타 응답: <3, 4 중복응답>, <1, 3 중복응답>, <1, 2 중복응답>(2건).

문 16) 귀하께서는 향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변화가능성이 매우 낮다	66	66.0
변화가능성이 다소 낮다	17	17.0
변화가능성이 다소 높다	12	12.0
변화가능성이 매우 높다	5	5.0
합계	100	100.0

문 17) 만약 북한 경제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향후 5년 내에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자본주의체제로 바뀔 것이다	14	14.0	14.3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할 것이다	53	53.0	54.1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이다	31	31.0	31.6
합계	98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2	2.0	
합계	100	100.0	

문 18) 만약 북한이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바뀐다면 변화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북한의 최고 권력자(김정은)	51	44.3
당, 정부, 군과 같은 국가 기관	24	20.9
북한의 상류층	13	11.3
북한의 중산층	11	9.6
북한의 하층민	15	13.0
기타	1	0.9
합계	115	100.0

* 기타 응답: <민주주의 원칙에서>.

Ⅱ. 노동 및 직업 (공식부문)

문 19) 귀하께서는 탈북직전 북한에서 직장이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예	98	98.0
아니오	2	2.0
합계	100	100.0

문 20)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었던 직장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문 21)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었던 직장은 어떤 상위기관에 속해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당기관	19	19.0
군 부대나 제2경제위원회(군수)	13	13.0
내각 중앙부처	10	10.0
지방 정부	58	58.0
합계	100	100.0

문 22)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었던 직장은 다음 보기 중 어느 산업에 해당됩니까?

	빈도	퍼센트
농업 및 임업	26	26.0
어업	2	2.0
광업	16	16.0
제조업	22	22.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	4.0
건설업	6	6.0
도매 및 소매업	1	1.0
숙박 및 음식점업	1	1.0
운수업	6	6.0
통신업	1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	5.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2.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8	8.0
합계	100	100.0

문 23) 직장에서 귀하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아래 표의 해당 항목에 ○ 표 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관리자, 고위임원 및 의회임원	2	2.0
전문가	3	3.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	11.0
사무 종사자	5	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7	7.0
숙련 농어업 종사자	22	2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1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	17.0
단순노무 종사자	17	17.0
군인	2	2.0
합계	100	100.0

문 24) 직장에서의 귀하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1	1.0
중간층	7	7.0
하위 관리층	15	15.0
하위 근로층	77	77.0
합계	100	100.0

문 25)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던 직장의 근로자의 수는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결과 생략)

문 26) 직장에서 귀하가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관리하는 위치가 아니었다	71	71.0
1~5명	8	8.0
6~10명	6	6.0
10~50명	8	8.0
50명 이상	7	7.0
합계	100	100.0

문 27) 완전가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직장의 가동 수준(직장을 다니던 마지막 년도 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20%미만	29	29.0
20~40%	16	16.0
40~60%	20	20.0
60~80%	16	16.0
80%이상	19	19.0
합계	100	100.0

문 28) 귀하의 직장은 군수품 생산이나 중요 무역회사처럼 자재의 조달 등에서 국가로부터 특혜와 주목을 받는 곳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그렇다	27	27.0
아니다	73	73.0
합계	100	100.0

문 29)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던 직장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당비서	62	62.0
지배인(협동농장관리위원장)	19	19.0
당비서와 지배인의 권한이 비슷	17	17.0
잘 모름	2	2.0
합계	100	100.0

문 30) 과거에 비해 직장에서 지배인(또는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귀하의 직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46	46.0	46.9
약간 그렇다	21	21.0	21.4
별로 그렇지 않다	16	16.0	16.3
전혀 그렇지 않다	11	11.0	11.2
잘 모른다	4	4.0	4.1
합계	98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2	2.0	
합계	100	100.0	

*기타 응답: 직장에 지배인이 없고 당비서가 총 책임을 맡고 있다는 응답 등으로 인하여 결측값이 발생함.

문 31) 만일 지배인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증가했다면 귀하의 직장에서는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증가된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첫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계획의 작성과 생산	41	61.2
노력관리	15	22.4
자재구입 및 조달	4	6.0
생산물의 처분	4	6.0
잘 모름	3	4.5
합계	67	100.0

두번째 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계획의 작성과 생산	6	9.0	9.2
노력관리	24	35.8	36.9
자재구입 및 조달	17	25.4	26.2
생산물의 처분	17	25.4	26.2
잘 모름	1	1.5	1.5
합계	65	97.0	100.0
시스템 결측값	2	3.0	
합계	67	100.0	

문 32) 과거에 비해 공장 기업소/협동농장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귀하의 직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2	22.0
별로 그렇지 않다	21	21.0
약간 그렇다	34	34.0
매우 그렇다	14	14.0
잘 모른다	8	8.0
합계	99	99.0
시스템 결측값	1	1.0
합계	100	100.0

문 32-1) (문31에서 1번, 2번 응답자만 응답) 만일 자율권이 증가하였다면 귀하의 직장에서는 어떤 부문에서 자율권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권이 증가된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생산목표 등 위로부터 하달되는 목표치가 없어지거나 덜 중요	3	6.3	10.3
공장 기업소 스스로 계획하는 목표치가 늘어났다	9	18.8	31.0
원자재 구입 등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4	8.3	13.8
생산한 제품에 대한 처분권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7	14.6	24.1
기업간 거래에 있어 현금사용 등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3	6.3	10.3
가격과 임금 결정 등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3	6.3	10.3
합계	29	60.4	100.0
시스템 결측값	19	39.6	
합계	48	100.0	

* 기타 응답: 첫 번째는 응답하였으나 두 번째는 응답하지 않음.(2건)

문 33) 목표 생산량 등 위로부터 하달되는 지표계획은 귀하의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시되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39	39.0
어전히 최우선목표지만 중요성은 떨어졌다	33	33.0
실질적으로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고 중요성도 별로 없다	16	16.0
하달되는 목표가 없거나 크게 축소되었다	11	11.0
기타	1	1.0
합계	100	100.0

* 기타 응답: <세부사항 미 기입>.

문 34) 만일 생산량 등 계획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배급량이 줄었다	25	19.2
월급이 줄었다	37	28.5
보너스가 줄었다	4	3.1
승진에 지장이 있다	8	6.2
감옥에 갔다	1	0.8
사상교육을 받았다	34	26.2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18	13.8
기타	3	2.3
합계	130	100.0

* 기타 응답: <책임자 직위 해임>, <항상 수행했음>, <직장에 돈을 보낼 때도 있다>.

문 35) 계획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배급량이 늘었다	13	11.3
월급이 늘었다	18	15.7
보너스가 늘었다	2	1.7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11	9.6
훈장을 받았다	29	25.2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40	34.8
기타	2	1.7
합계	115	100.0

* 기타 응답: <상장>, <그런적이 없다>.

문 36) 액상계획(또는 변수입지표) 등은 귀하의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36	36.0
목표생산량 등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19	19.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31	31.0
액상계획 또는 변수입지표 같은 것이 없었다	12	12.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 기타 응답: <잘 모른다>, <세부사항 미 기입>.

문 37) 직장이 직접 생산물이나 자재 등을 시장에서 팔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은 귀하의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25	25.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25	25.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24	24.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25	25.0
기타	1	1.0
합계	100	100.0

* 기타 응답: <세부사항 미 기입>.

문 38) 직장에서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은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57	47.1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조달	20	16.5
시장에서 구입	24	19.8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14	11.6
기타	6	5.0
합계	121	100.0

* 기타 응답: <공장물품 절도>, <모름>, <생산하지 않았음>, <생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음>, <그러한 게 없음>, <세부사항 미 기입>.

문 39) 직장에서 사용한 자재와 물품 가운데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된 자재와 물품의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20%미만	40	40.0
20~40%	19	19.0
40~60%	12	12.0
60~80%	9	9.0
80%이상	7	7.0
잘 모름	13	13.0
합계	100	100.0

문 40) 직장에서 생산 된 생산물은 어떻게 처분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80	64.5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처분	13	10.5
시장에서 판매	14	12.1
종업원들에게 지급	10	8.1
기타	7	4.8
합계	124	100.0

* 기타 응답: <생산물이 없음>, <개인의 주문을 받았다>, <생산하지 않음>, <생산직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도면작성>, <생산물 없음>.

문 41) 직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한 생산물의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미만	18	18.0	18.4
20~40%	16	16.0	16.3
40~60%	14	14.0	14.3
60~80%	10	10.0	10.2
80%이상	23	23.0	23.5
잘 모름	17	17.0	17.3
합계	98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2	2.0	
합계	100	100.0	

* 생산물이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 <없었다>라고 응답함.

문 42) (문40번서 '3번'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1	7.1	7.7
당비서와 지배인 등이 협의하여	2	14.3	15.4
지배인 등이 단독으로	3	21.4	23.1
지배인 등이 다른 간부들과 협의하여	4	28.6	30.8
잘모름	3	21.4	23.1
합계	13	92.9	100.0
시스템 결측값	1	7.1	
합계	14	100.0	

*기타 응답: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라고 주관식으로 응답함.

문 43) 귀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60시간 이상	13	13.0
50~59	24	24.0
40~49	46	46.0
30~39	12	12.0
30시간 미만	5	5.0
합계	100	100.0

문 44) 그렇다면, 귀하께서 직장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60시간 이상	28	28.0
50~59	18	18.0
40~49	27	27.0
30~39	15	15.0
30시간 미만	12	12.0
합계	100	100.0

문 45) 직장에서 실제 일한 시간이 원칙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보다 작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규정대로 출근하였으나 일감이 적었다	21	21.0
조퇴 후 다른 일을 하였다	3	3.0
8.3 자금을 바치고 다른 일을 하였다	2	2.0
실제 일한 시간이 원칙보다 작지 않았다	74	74.0
합계	100	100.0

문 46) 직장에서 실제 일한 시간이 원칙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보다 많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일거리가 많아서 자발적으로 더 일했다	10	10.0
위로부터 지시로 더 일해야 했다	19	19.0
다른 사람의 일거리를 맡아 더 일했다	3	3.0
실제 일한 시간이 원칙보다 많지 않았다	68	68.0
합계	100	100.0

문 47) 직장에서 받는 임금(탈북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받은)은 1개월에 얼마였습니까?
(결과 생략)

문 48) 임금이나 보너스 이외에 직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알곡	20	20.0
알곡을 제외한 기타 식량	7	7.0
식량 이외의 생필품	9	9.0
기타	3	3.0
없었음	61	61.0
합계	100	100.0

* 기타 응답: <1,2,3 중복응답>.

문 48-1) 임금이나 보너스 이외 직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귀하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7.7
별로 중요하지 않음	7	17.9
상관 없음	1	2.6
약간 중요	10	25.6
매우 중요	18	46.2
합계	39	100.0

문 49) 임금이나 보너스 이외 직장으로부터 받는 것 가운데 귀하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결과 생략)

문 50) 귀하의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월급이 준다	16	16.0	16.3
배급량이 감소한다	30	30.0	30.6
해고당한다	14	14.0	14.3
감옥에 간다	15	15.0	15.3
아무 처벌이 없다	23	23.0	23.5
합계	98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2	2.0	
합계	100	100.0	

문 51) 귀하의 직장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당국의 개입이 너무 심하였음	26	26.0
부적합한 생산 명령이 내려옴	15	15.0
원자재 조달이 어려움	7	7.0
지배인 등과 근로자의 갈등	8	8.0
설비가 낙후되거나 부족하였음	19	19.0
직장 내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음	21	21.0
기타	4	4.0
합계	100	100.0

문 52)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열심히 일한 성과	24	24.0
연줄	8	8.0
공장 지배인의 후원	4	4.0
당 간부의 후원	14	14.0
뇌물	45	45.0
기타	5	5.0
합계	100	100.0

문 53) 귀하의 직장에는 '8:3 노동자'가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55	55.0	55.6
아니오	28	28.0	28.3
잘 모르겠다	16	16.0	16.2
합계	99	99.0	100.0
시스템 결측값	1	1.0	
합계	100	100.0	

문 53-1) (문 53에서 '1번 예'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있었다면, 전체 직원 대비 8:3 노동자의 비율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5%미만 또는 거의 없었다	18	32.7
5~10%	9	16.4
10~20%	5	9.1
20~30%	5	9.1
30~40%	2	3.6
40~50%	1	1.8
50~60%	7	12.7
60% 이상	8	14.5
합계	55	100.0

문 54) 귀하의 직장에서 '8:3 노동자'가 바치는 돈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결과 생략)

(문 55-58번은 협동농장에서 일하셨던 분만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 59번으로 가세요.)

문 55) 탈북 당시 협동농장의 가족단위 영농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실제로 많은 협동농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3	13.6	17.6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9.1	11.8
시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	8	36.4	47.1
잘 알지 못한다	4	18.2	23.5
합계	17	77.3	100.0
시스템 결측값	5	22.7	
합계	22	100.0	

문 56) 귀하께서 일했던 협동농장에서는 총생산량의 몇 %를 국가에 수매양곡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40%	2	9.1	13.3
40~60%	5	22.7	33.3
60~80%	1	4.5	6.7
80% 이상	7	31.8	46.7
합계	15	68.2	100.0
시스템 결측값	7	31.8	
합계	22	100.0	

문 57) 그렇다면 귀하의 협동농장에서 실제로 국가에 수매양곡으로 납부한 양은 총생산량의 몇 % 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 미만	1	4.5	6.7
20~40%	3	13.6	20.0
40~60%	6	27.3	40.0
60~80%	2	9.1	13.3
80% 이상	3	13.6	20.0
합계	15	68.2	100.0
시스템 결측값	7	31.8	
합계	22	100.0	

문 58) 국가에 납부하기로 한 수매양곡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배급량이 줄었다	7	31.8	41.2
월급이 줄었다	2	9.1	11.8
승진에 지장이 있다	3	13.6	17.6
감옥에 갔다	2	9.1	11.8
사상교육을 받았다	2	9.1	11.8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1	4.5	5.9
합계	17	77.3	100.0
시스템 결측값	5	22.7	
합계	22	100.0	

* 기타 응답: <5,6 중복응답>.

Ⅲ. 노동 및 직업 (비공식부문)

문 59) 귀하께서는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빈도	퍼센트
예	57	57.0
아니오	43	43.0
합계	100	100.0

문 59-1) (문 59에서 '2번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가족 중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예	14	32.6
아니오	29	67.4
합계	43	100.0

문 59-2) (문 59-1)에서 '2번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서 아무도 부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8	27.6
나이와 신체적 특성 때문에 집안에 부업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8	27.6
정부의 통제가 심해서	3	10.3
장사 밀전을 구할 수 없어서	10	34.5
합계	29	100.0

문 60) 그렇다면, 부업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돼기발 경작이나 개인 축산부업만 했다	26	26.0	37.1
그 외의 다른일(장사 또는 직접생산)을 했다	27	27.0	38.6
돼기발이나 축산부업도 하고 다른 일도 했다	17	17.0	24.3
합계	70	70.0	100.0
시스템 결측값	30	30.0	
합계	100	100.0	

* 본인이 직접 부업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부업을 하였을 때 응답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문 61) 귀하께서는 부업을 통해 1개월에 평균 얼마를 벌었습니까? (탈북 직전년도 기준) (결과 생략)

문 62) 귀하께서 부업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주업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53	53.0	84.1
돈을 벌어 사업이나 장사 밀전으로 삼으려고	5	5.0	7.9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4	4.0	6.3
앞으로 쓸 돈을 저축하기 위해	1	1.0	1.6
합계	63	63.0	100.0
시스템 결측값	37	37.0	
합계	100	100.0	

문 63) 귀하께서는 어떻게 부업을 갖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가족, 친척, 친구의 소개로	15	22.4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4	6.0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6	9.0
할 수 있는 부업이 그것 밖에 없어서	40	59.7
기타	2	3.0
합계	67	100.0

* 기타 응답: <먹을거리를 장만하려고>, <개인적으로 약초채취>.

문 64) 귀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업에 종사하하셨습니까?
(결과 생략)

문 65) 귀하께서는 부업을 위하여 일주일에 몇 시간 가량 일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60시간 이상	10	10.0	16.4
50~59	9	9.0	14.8
40~49	9	9.0	14.8
30~39	11	11.0	18.0
30시간 미만	22	22.0	36.1
합계	61	61.0	100.0
시스템 결측값	39	39.0	
합계	100	100.0	

문 66)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함께 돼기밭 경작하셨을 경우 아래 빈 칸을 채워 주십시오.
(결과 생략)

문 67) 개인 축산 부업을 하셨을 경우, 아래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결과 생략)

문 68) 가장 중요한 부업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어떤 물품을 다루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 되거리장사, 밀매업, 삼륜차영업, 고리대금업, 골동, 음식장사, TV수리 등)
(결과 생략)

문 69) 귀하께서 부업으로 장사를 하였다면 몇 명이 함께 하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혼자	21	21.0	52.5
1~2	16	16.0	40.0
3~4	2	2.0	5.0
5명 이상	1	1.0	2.5
합계	40	40.0	100.0
시스템 결측값	60	60.0	
합계	100	100.0	

문 69-1) 만약 장사를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가족	13	68.4
친지 또는 친구	5	26.3
고용한 사람	1	5.3
합계	19	100.0

문 70) 귀하께서는 부업으로 장사를 하였다면 국가납부금(장세 등)을 지불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지불하였다	14	14.0	34.1
지불하지 않았다	27	27.0	65.9
합계	41	41.0	100.0
시스템 결측값	59	59.0	
합계	100	100.0	

문 71) 국가납부금(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장사를 허가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2	7.4	8.0
어떻게 장사 허가를 받는지 알 수 없어서	1	3.7	4.0
장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11	40.7	44.0
돈을 절약하려고 고의로	4	14.8	16.0
기타	7	25.9	28.0
합계	25	92.6	100.0
시스템 결측값	2	7.4	
합계	27	100.0	

문 72) 귀하께서는 장사를 할 때 뇌물을 고인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정기적으로 주었다	8	8.0	21.1
부정기적으로 주었다	10	10.0	26.3
한차례 주었다	7	7.0	18.4
준 적 없다	13	13.0	34.2
합계	38	38.0	100.0
시스템 결측값	62	62.0	
합계	100	100.0	

문 73) 뇌물을 고인 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공장 혹은 협동농장의 지배인, 당비서	9	22.0
보위부 관리	6	14.6
보안원	17	41.5
인민반장	5	12.2
정부 고위층 관리	2	4.9
기타	2	4.9
합계	41	100.0

문 74) 위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한테 가장 많은 뇌물을 고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장 혹은 협동농장의 지배인, 당비서	4	4.0	16.7
보위부 관리	4	4.0	16.7
보안원	15	15.0	62.5
기타	1	1.0	4.2
합계	24	24.0	100.0
시스템 결측값	76	76.0	
합계	100	100.0	

문 75) 귀하께서는 장사를 할 물건들을 어디에서 조달하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도매상에서 구입	12	12.0	30.8
외국에서 수입	3	3.0	7.7
직접 생산	8	8.0	20.5
다른 소매상에서 구입	5	5.0	12.8
수매시장에서 구입	8	8.0	20.5
기타	3	3.0	7.7
합계	39	39.0	100.0
시스템 결측값	61	61.0	
합계	100	100.0	

문 76) 도매상에서 구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어디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북한산	14	14.0	38.9
중국산	22	22.0	61.1
합계	36	36.0	100.0
시스템 결측값	64	64.0	
합계	100	100.0	

문 77) (부업으로 직접생산을 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 귀하께서 부업으로 직접 생산을 하였다면 몇 명이 함께 하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혼자	12	12.0	54.5
2~3	8	8.0	36.4
4~5	1	1.0	4.5
8명 이상	1	1.0	4.5
합계	22	22.0	100.0
시스템 결측값	78	78.0	
합계	100	100.0	

문 78) 만약, 직접생산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가족	8	80.0
고용한 사람	1	10.0
기타	1	10.0
합계	10	100.0

* 기타 응답: <직장 동료>

문 79) 직접 생산을 한 경우 원자재를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외국에서 수입	1	1.0	4.5
도매상에서 구입	11	11.0	50.0
직접 생산으로 조달	7	7.0	31.8
공장 기업의 원자재를 절취하거나 구입	1	1.0	4.5
기타	2	2.0	9.1
합계	22	22.0	100.0
시스템 결측값	78	78.0	
합계	100	100.0	

문 80) 직접 생산으로 어떤 제품을 주로 만들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빈도	퍼센트
음식 및 음식가공	13	40.6
옷	6	18.8
비누	1	3.1
술	5	15.6
담배	1	3.1
얼음과자	3	9.4
사탕	1	3.1
기타	2	6.3
합계	32	100.0

문 81) 개인이 직접생산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위험했다	4	4.0	18.2
약간 위험했다	2	2.0	9.1
위험하지 않았다	10	10.0	45.5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	6	6.0	27.3
합계	22	22.0	100.0
시스템 결측값	78	78.0	
합계	100	100.0	

문 82) (문81에서 '1번', '2번' 위험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위험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처벌때문에	4	66.7
뇌물을 바치지 않고서는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2	33.3
합계	6	100.0

문 83) (81에서 '3번', '4번' 위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위험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빈도	퍼센트
당이나 정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2	12.5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11	68.8
문제가 생기면 뇌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	6.3
기타	2	12.5
합계	16	100.0

문 84) 귀하의 탈북 당시와 탈북 수년 전을 비교해 볼 때 부업으로 하는 직접생산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크게 감소하였다	4	4.0	17.4
약간 감소하였다	4	4.0	17.4
거의 차이가 없다	2	2.0	8.7
약간 늘어났다	4	4.0	17.4
크게 늘어났다	9	9.0	39.1
합계	23	23.0	100.0
시스템 결측값	77	77.0	
합계	100	100.0	

문 85) 귀하가 직접 생산을 통해 만든 제품의 질을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질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내가 만든 제품의 질이 훨씬 나쁘다	2	2.0	9.1
내가 만든 제품의 질이 약간 나쁘다	4	4.0	18.2
거의 동일하다	9	9.0	40.9
내가 만든 제품의 질이 약간 좋다	3	3.0	13.6
내가 만든 제품의 질이 훨씬 좋다	4	4.0	18.2
합계	22	22.0	100.0
시스템 결측값	78	78.0	
합계	100	100.0	

문 86) 귀하가 직접 생산을 통해 만든 제품의 가격을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내가 만든 제품의 가격이 훨씬 낮다	5	5.0	21.7
내가 만든 제품의 가격이 약간 낮다	6	6.0	26.1
거의 동일하다	7	7.0	30.4
내가 만든 제품의 가격이 약간 높다	3	3.0	13.0
내가 만든 제품의 가격이 훨씬 높다	2	2.0	8.7
합계	23	23.0	100.0
시스템 결측값	77	77.0	
합계	100	100.0	

IV. 가계소득 및 지출

문 87) 직장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81	81.0	81.8
아니오	18	18.0	18.2
합계	99	99.0	100.0
시스템 결측값	1	1.0	
합계	100	100.0	

문 88) 만일 있었다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번	3	3.7	3.8
2번	2	2.5	2.5
3번 이상	75	92.6	93.8
합계	80	98.8	100.0
시스템 결측값	1	1.2	
합계	81	100.0	

문 89) 1번 이상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얼마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연속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개월 미만	3	3.7	3.8
1~3개월	19	23.5	24.1
3~6개월	21	25.9	26.6
6~8개월	1	1.2	1.3
8개월 이상	35	43.2	44.3
합계	79	97.5	100.0
시스템 결측값	2	2.5	
합계	81	100.0	

문 90)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받아야 할 총 임금의 몇 %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 미만	13	16.0	17.1
20~40%	8	9.9	10.5
40~60%	15	18.5	19.7
60~80%	6	7.4	7.9
80% 이상	34	42.0	44.7
합계	76	93.8	100.0
시스템 결측값	5	6.2	
합계	81	100.0	

문 9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받은 국가 보조금 또는 연휴금은 북한 원화로 월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공로자 연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산전 산후 보조금, 인민 후방 가족 원호 보조금, 일시적 보조금 등)
(결과 생략)

문 92) 탈북하시기 직전 해에, 본인 이외에 귀하의 가족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아니오	44	44.0
예	56	56.0
합계	100	100.0

문 93) 만약 있었다면, 전체 가족 중 몇 명이 돈을 벌었습니까? (예: 귀하의 가족이 아내, 첫째아들, 둘째아들, 막내딸이 있고, 아내와 첫째 아들이 돈을 벌었을 경우 전체가족 수 5명, 돈을 번 가족 수 2명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결과 생략)

문 94) 돈을 번 가족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예: 위의 예에서 아내와 첫째아들이 돈을 벌었으므로, '아내', '첫째아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결과 생략)

문 95) 귀하 이외의 돈을 번 가족이 직장에 소속되어 돈을 벌었다면, 직장에서 받은 월 급여는 북한 원화로 얼마였습니까?
(결과 생략)

문 96) 탈북하기 1년 전 한해 동안의 귀하의 가구 총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총소득이 아래표의 각 소득원(1~6)의 합이 될 수 있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결과 생략)

문 97) 가구의 소득 수준(또는 경제 생활 수준) 이 귀하가 거주하시던 시(군)에서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아주 못사는 편이었다	32	32.0
좀 못사는 편이었다	18	18.0
보통 정도로 살았다	41	41.0
좀 잘사는 편이었다	8	8.0
아주 잘사는 편이었다	1	1.0
합계	100	100.0

문 98) 탈북하기 1년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 수입과 지출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빈도	퍼센트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다	13	13.0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였다	31	31.0
수입이 지출보다 적었다	56	56.0
합계	100	100.0

문 99) 귀하께서는 탈북하기 일 년 전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월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되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생략)

문 100) 탈북하기 일년 전, 귀하께서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주십시오.

직장배급

	빈도	퍼센트
1	11	11.0
2	18	18.0
3	13	13.0
5	1	1.0
합계	43	43.0
시스템 결측값	57	57.0
합계	100	100.0

국영상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	1	1.0	20.0
3	1	1.0	20.0
4	2	2.0	40.0
5	1	1.0	20.0
합계	5	5.0	100.0
시스템 결측값	95	95.0	
합계	100	100.0	

수매상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	2	2.0	25.0
3	3	3.0	37.5
4	2	2.0	25.0
5	1	1.0	12.5
합계	8	8.0	100.0
시스템 결측값	92	92.0	
합계	100	100.0	

자가생산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23	23.0	53.5
2	16	16.0	37.2
3	1	1.0	2.3
4	1	1.0	2.3
5	2	2.0	4.7
합계	43	43.0	100.0
시스템 결측값	57	57.0	
합계	100	100.0	

장마당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62	62.0	79.5
2	14	14.0	17.9
3	2	2.0	2.6
합계	78	78.0	100.0
시스템 결측값	22	22.0	
합계	100	100.0	

기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4	4.0	66.7
2	1	1.0	16.7
3	1	1.0	16.7
합계	6	6.0	100.0
시스템 결측값	94	94.0	
합계	100	100.0	

문 101)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위의 답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결과 생략)

문 102) 탈북하기 일년 전, 귀하께서는 신발, 옷, 가구, 빨감 등과 같은 소비재 얻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주십시오.

직장 배급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3	3.0	18.8
2	3	3.0	18.8
3	5	5.0	31.3
4	2	2.0	12.5
5	3	3.0	18.8
합계	16	16.0	100.0
시스템 결측값	84	84.0	
합계	100	100.0	

국영 상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	1	1.0	20.0
3	3	3.0	60.0
4	1	1.0	20.0
합계	5	5.0	100.0
시스템 결측값	95	95.0	
합계	100	100.0	

수매 상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	4	4.0	50.0
3	1	1.0	12.5
4	1	1.0	12.5
5	2	2.0	25.0
합계	8	8.0	100.0
시스템 결측값	92	92.0	
합계	100	100.0	

자가 생산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8	8.0	38.1
2	10	10.0	47.6
3	2	2.0	9.5
4	1	1.0	4.8
합계	21	21.0	100.0
시스템 결측값	79	79.0	
합계	100	100.0	

장마당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87	87.0	90.6
2	9	9.0	9.4
합계	96	96.0	100.0
시스템 결측값	4	4.0	
합계	100	100.0	

기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2	2.0	100.0
시스템 결측값	98	98.0	
합계	100	100.0	

문 103) 위의 답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결과 생략)

문 104) 배급받는 식료품과 돈을 주고 구입한 소비재 사이에 품질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배급받는 물건의 품질이 훨씬 나쁘다	59	59.0
배급받는 물건의 품질이 약간 나쁘다	18	18.0
거의 동일하다	14	14.0
배급받는 물건의 품질이 약간 좋다	2	2.0
비교하기 어렵다	7	7.0
합계	100	100.0

V. 비공식경제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문 105) 거주했던 동, 리에는 시장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없었다	12	12.0
1개	61	61.0
2개	17	17.0
3개	4	4.0
4개 이상	6	6.0
합계	100	100.0

문 106)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거래 물품과 가격 등에 대한 통제가 심했다	46	46.0
치안을 유지하고 장세를 걷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	21	21.0
상황에 따라 통제의 정도가 매우 달랐다	30	30.0
기타	3	3.0
합계	100	100.0

문 107) 시장에서도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주식	21	21.0
신발	2	2.0
의복	4	4.0
의약품	44	44.0
기타	29	29.0
합계	100	100.0

문 108) 시장에서 가장 가격변화가 심했던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주식	74	74.0
부식	6	6.0
의복	1	1.0
의약품	13	13.0
기타	6	6.0
합계	100	100.0

* 기타 응답: <없음> <돈만 있으면 된다> (3건) <세부사항 미 기입>(2건)

피면접자 인적사항

1. 성별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남자	17	17.0
여자	83	83.0
합계	100	100.0

2. 출생년도는? (연령구간)

	빈도	퍼센트
20대	6	6.0
30대	25	25.0
40대	24	24.0
50대	11	11.0
60대	24	24.0
70대	10	10.0
합계	100	100.0

3. 하나원 기수는?

	빈도	퍼센트
140	4	4.0
141	2	2.0
142	6	6.0
143	1	1.0
144	1	1.0
145	6	6.0
146	1	1.0
147	2	2.0
148	1	1.0
149	5	5.0
150	9	9.0
151	2	2.0
152	9	9.0
153	3	3.0
154	4	4.0
155	3	3.0
156	4	4.0
158	6	6.0
160	2	2.0
162	2	2.0
164	4	4.0
165	2	2.0
166	1	1.0
169	2	2.0
170	1	1.0
171	1	1.0
172	3	3.0
173	1	1.0
174	1	1.0
175	1	1.0
176	9	9.0
180	1	1.0
합계	100	100.0

4. 최종탈북 연도는?

	빈도	퍼센트
2009	5	5.0
2010	46	46.0
2011	29	29.0
2012	19	19.0
2013	1	1.0
합계	100	100.0

5. 한국에 입국 년도는?

	빈도	퍼센트
2010	30	30.0
2011	41	41.0
2012	26	26.0
2013	3	3.0
합계	100	100.0

6. 출생지(도)

	빈도	퍼센트
평양시	4	4.0
함경북도	56	56.0
함경남도	8	8.0
양강도	9	9.0
평안북도	6	6.0
평안남도	6	6.0
자강도	2	2.0
황해남도	1	1.0
강원도	3	3.0
남포시	1	1.0
개성시	1	1.0
중국	1	1.0
일본	2	2.0
합계	100	100.0

7. (북한) 거주지(도)

	빈도	퍼센트
평양시	4	4.0
함경북도	61	61.0
함경남도	8	8.0
양강도	17	17.0
평안북도	1	1.0
평안남도	4	4.0
자강도	2	2.0
강원도	2	2.0
남포시	1	1.0
합계	100	100.0

8. 현 거주지(도)

	빈도	퍼센트
서울시	38	38.0
인천시	49	49.0
경기도	13	13.0
합계	100	100.0

9. 최종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대학/전문학교 졸업	13	13.0	13.3
대학/전문학교 중퇴	7	7.0	7.1
고등 중학교 졸업	59	59.0	60.2
고등 중학교 중퇴	17	17.0	17.3
인민학교 졸업	2	2.0	2.0
합계	98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2	2.0	
합계	100	100.0	

10. 당원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조선노동당	13	13.0	13.8
미가입	80	80.0	85.1
농업근로자연맹	1	1.0	1.1
합계	94	94.0	100.0
시스템 결측값	6	6.0	
합계	100	100.0	

〈부록 2〉 북한 비공식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표 34/22〉 계획 미달성 시 산업별 처벌 정도의 차이

처벌사항	산업종	농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도매	숙박	운수	통신	공공	문화	기타
		임업				가스	수도	소매	음식		행정	관련	서비스	서비스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15	1	2	4	3	0	0	0	0	0	0	0	0
	%	57.7%	50.0%	12.5%	18.2%	75.0%	0.0%	0.0%	0.0%	0.0%	0.0%	0.0%	0.0%	0.0%
월급이 줄었다	빈도	2	0	4	6	1	3	1	0	2	1	2	0	5
	%	7.7%	0.0%	25.0%	27.3%	25.0%	50.0%	100.0%	0.0%	33.3%	100.0%	40.0%	0.0%	62.5%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0	0	2	0	0	0	0	0	0	0	0	0	1
	%	0.0%	0.0%	1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5%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2	1	1	0	0	2	0	0	0	0	0	1	0
	%	7.7%	50.0%	6.3%	0.0%	0.0%	33.3%	0.0%	0.0%	0.0%	0.0%	0.0%	50.0%	0.0%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4	0	6	3	0	1	0	0	2	0	3	1	1
	%	15.4%	0.0%	37.5%	13.6%	0.0%	16.7%	0.0%	0.0%	33.3%	0.0%	60.0%	50.0%	12.5%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3	0	1	8	0	0	0	1	2	0	0	0	1
	%	11.5%	0.0%	6.3%	36.4%	0.0%	0.0%	0.0%	100.0%	33.3%	0.0%	0.0%	0.0%	12.5%
기타	빈도	0	0	0	1	0	0	0	0	0	0	0	0	0
	%	0.0%	0.0%	0.0%	4.5%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34/24〉 계획 미달성 시 직장 내 직위별 처벌 정도의 차이

처벌사항	직장직위	단위책임자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또는 지배인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1	1	3	20
	%	100.0%	14.3%	20.0%	26.0%
월급이 줄었다	빈도	0	3	6	18
	%	0.0%	42.9%	40.0%	23.4%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0	0	0	3
	%	0.0%	0.0%	0.0%	3.9%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0	2	2	3
	%	0.0%	28.6%	13.3%	3.9%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0	0	3	18
	%	0.0%	0.0%	20.0%	23.4%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0	1	1	14
	%	0.0%	14.3%	6.7%	18.2%
기타	빈도	0	0	0	1
	%	0.0%	0.0%	0.0%	1.3%

〈표 34/25〉 계획 미달성 시 직장 규모별 처벌 정도의 차이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처벌사항	빈도			
	%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10	13	2
	%	17.9%	36.1%	25.0%
월급이 줄었다	빈도	14	10	3
	%	25.0%	27.8%	37.5%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1	2	0
	%	1.8%	5.6%	0.0%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4	3	0
	%	7.1%	8.3%	0.0%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17	3	1
	%	30.4%	8.3%	12.5%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9	5	2
	%	16.1%	13.9%	25.0%
기타	빈도	1	0	0
	%	1.8%	0.0%	0.0%

〈표 34/인적사항4〉 계획 미달성 시 탈북 연도별 처벌 정도의 차이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처벌사항	빈도					
	%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0	11	9	5	0
	%	0.0%	23.9%	31.0%	26.3%	0.0%
월급이 줄었다	빈도	1	15	7	4	0
	%	20.0%	32.6%	24.1%	21.1%	0.0%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1	1	0	1	0
	%	20.0%	2.2%	0.0%	5.3%	0.0%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0	4	3	0	0
	%	0.0%	8.7%	10.3%	0.0%	0.0%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1	7	7	5	1
	%	20.0%	15.2%	24.1%	26.3%	100.0%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2	7	3	4	0
	%	40.0%	15.2%	10.3%	21.1%	0.0%
기타	빈도	0	1	0	0	0
	%	0.0%	2.2%	0.0%	0.0%	0.0%

〈표 34/인적사항7〉 계획 미달성 시 지역별 처벌 정도의 차이

처벌사항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배급량이 줄었다	빈도	1	18	1	3	0	1	1	0	0
	%	25.0%	29.5%	12.5%	17.6%	0.0%	25.0%	50.0%	0.0%	0.0%
월급이 줄었다	빈도	2	13	4	6	0	0	1	1	0
	%	50.0%	21.3%	50.0%	35.3%	0.0%	0.0%	50.0%	50.0%	0.0%
보너스가 줄었다	빈도	0	2	1	0	0	0	0	0	0
	%	0.0%	3.3%	12.5%	0.0%	0.0%	0.0%	0.0%	0.0%	0.0%
승진에 지장이 있다	빈도	0	4	0	2	1	0	0	0	0
	%	0.0%	6.6%	0.0%	11.8%	100.0%	0.0%	0.0%	0.0%	0.0%
사상교육을 받았다	빈도	1	11	0	4	0	3	0	1	1
	%	25.0%	18.0%	0.0%	23.5%	0.0%	75.0%	0.0%	50.0%	100.0%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빈도	0	13	1	2	0	0	0	0	0
	%	0.0%	21.3%	12.5%	11.8%	0.0%	0.0%	0.0%	0.0%	0.0%
기타	빈도	0	0	1	0	0	0	0	0	0
	%	0.0%	0.0%	12.5%	0.0%	0.0%	0.0%	0.0%	0.0%	0.0%

〈표 35/22〉 계획의 초과 달성 시 직장 종류별 보상 정도의 차이

처벌사항		산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배급량이 늘었다	빈도	6	1	2	1	2	0	0	0	1	0	0	0	0
	%	23.1%	50.0%	12.5%	4.5%	50.0%	0.0%	0.0%	0.0%	16.7%	0.0%	0.0%	0.0%	0.0%
월급이 늘었다	빈도	5	0	3	3	1	1	0	0	0	0	1	0	1
	%	19.2%	0.0%	18.8%	13.6%	25.0%	16.7%	0.0%	0.0%	0.0%	0.0%	20.0%	0.0%	12.5%
보너스가 늘었다	빈도	0	0	0	0	0	1	0	0	0	0	0	0	0
	%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2	1	1	1	0	1	0	0	0	1	1	1	0
	%	7.7%	50.0%	6.3%	4.5%	0.0%	16.7%	0.0%	0.0%	0.0%	20.0%	50.0%	0.0%	0.0%
훈장을 받았다	빈도	3	0	5	5	0	2	1	1	2	0	1	1	1
	%	11.5%	0.0%	31.3%	22.7%	0.0%	33.3%	100.0%	100.0%	33.3%	0.0%	20.0%	50.0%	12.5%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빈도	9	0	4	12	1	1	0	0	3	1	2	0	6
	%	34.6%	0.0%	25.0%	54.5%	25.0%	16.7%	0.0%	0.0%	50.0%	100.0%	40.0%	0.0%	75.0%
기타	빈도	1	0	1	0	0	0	0	0	0	0	0	0	0
	%	3.8%	0.0%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35/24〉 계획의 초과 달성 시 직장 지위별 보상 정도의 차이

보상사항	직장지위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배급량이 늘었다	빈도	1	1	1	10
	%	100.0%	14.3%	6.7%	13.0%
월급이 늘었다	빈도	0	2	3	10
	%	0.0%	28.6%	20.0%	13.0%
보너스가 늘었다	빈도	0	0	1	0
	%	0.0%	0.0%	6.7%	0.0%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0	2	2	4
	%	0.0%	28.6%	13.3%	5.2%
훈장을 받았다	빈도	0	2	2	18
	%	0.0%	28.6%	13.3%	23.4%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빈도	0	0	5	34
	%	0.0%	0.0%	33.3%	44.2%
기타	빈도	0	0	1	1
	%	0.0%	0.0%	6.7%	1.3%

〈표 35/인적사항4〉 계획의 초과 달성 시 연도별 보상 정도의 차이

보상사항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배급량이 늘었다	빈도	0	8	3	2	0
	%	0.0%	17.4%	10.3%	10.5%	0.0%
월급이 늘었다	빈도	0	7	5	3	0
	%	0.0%	15.2%	17.2%	15.8%	0.0%
보너스가 늘었다	빈도	0	1	0	0	0
	%	0.0%	2.2%	0.0%	0.0%	0.0%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0	5	2	1	0
	%	0.0%	10.9%	6.9%	5.3%	0.0%
훈장을 받았다	빈도	4	8	6	4	0
	%	80.0%	17.4%	20.7%	21.1%	0.0%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빈도	1	16	12	9	1
	%	20.0%	34.8%	41.4%	47.4%	100.0%
기타	빈도	0	1	1	0	0
	%	0.0%	2.2%	3.4%	0.0%	0.0%

〈표 35/인적사항7〉 계획의 초과 달성 시 지역별 보상 정도의 차이

보상사항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배급량이 늘었다	빈도	1	8	1	2	0	1	0	0	0
	%	25.0%	13.1%	12.5%	11.8%	0.0%	25.0%	0.0%	0.0%	0.0%
월급이 늘었다	빈도	1	9	2	1	0	0	1	1	0
	%	25.0%	14.8%	25.0%	5.9%	0.0%	0.0%	50.0%	50.0%	0.0%
보너스가 늘었다	빈도	0	1	0	0	0	0	0	0	0
	%	0.0%	1.6%	0.0%	0.0%	0.0%	0.0%	0.0%	0.0%	0.0%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	빈도	0	5	0	2	1	0	0	0	0
	%	0.0%	8.2%	0.0%	11.8%	100.0%	0.0%	0.0%	0.0%	0.0%
훈장을 받았다	빈도	1	10	2	6	0	1	0	1	1
	%	25.0%	16.4%	25.0%	35.3%	0.0%	25.0%	0.0%	50.0%	100.0%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다	빈도	1	27	3	5	0	2	1	0	0
	%	25.0%	44.3%	37.5%	29.4%	0.0%	50.0%	50.0%	0.0%	0.0%
기타	빈도	0	1	0	1	0	0	0	0	0
	%	0.0%	1.6%	0.0%	5.9%	0.0%	0.0%	0.0%	0.0%	0.0%

〈표 36/22〉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산업별 차이

중요도		산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업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최우선 목표	빈도	8	2	5	9	1	2	1	1	1	0	3	0	3
	%	30.8%	100.0%	31.3%	40.9%	25.0%	33.3%	100.0%	100.0%	16.7%	0.0%	60.0%	0.0%	37.5%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	빈도	9	0	4	3	1	2	0	0	0	0	0	0	0
	%	34.6%	0.0%	25.0%	13.6%	25.0%	33.3%	0.0%	0.0%	0.0%	0.0%	0.0%	0.0%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6	0	3	9	1	1	0	0	3	1	1	1	5
	%	23.1%	0.0%	18.8%	40.9%	25.0%	16.7%	0.0%	0.0%	50.0%	100.0%	20.0%	50.0%	62.5%
액상계획이 없었다	빈도	2	0	3	1	1	1	0	0	2	0	1	1	0
	%	7.7%	0.0%	18.8%	4.5%	25.0%	16.7%	0.0%	0.0%	33.3%	0.0%	20.0%	50.0%	0.0%
기타	빈도	1	0	1	0	0	0	0	0	0	0	0	0	0
	%	3.8%	0.0%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36/24〉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직위별 차이

중요도		직장직위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빈도	1	3	4	28	
	%	100.0%	42.9%	26.7%	36.4%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빈도	0	2	3	14	
	%	0.0%	28.6%	20.0%	18.2%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0	1	5	25	
	%	0.0%	14.3%	33.3%	32.5%	
액상계획 등과 같은 것이 없었다	빈도	0	1	2	9	
	%	0.0%	14.3%	13.3%	11.7%	
기타	빈도	0	0	1	1	
	%	0.0%	0.0%	6.7%	1.3%	

〈표 36/25〉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근로자 규모별 차이

중요도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빈도	17	17	2	
	%	30.4%	47.2%	25.0%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빈도	11	5	3	
	%	19.6%	13.9%	37.5%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21	8	2	
	%	37.5%	22.2%	25.0%	
액상계획 등과 같은 것이 없었다	빈도	5	6	1	
	%	8.9%	16.7%	12.5%	
기타	빈도	2	0	0	
	%	3.6%	0.0%	0.0%	

〈표 36/인적사항4〉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탈북 연도별 차이

중요도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빈도	3	11	12	9	1		
	%	60.0%	23.9%	41.4%	47.4%	100.0%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빈도	2	12	3	2	0		
	%	40.0%	26.1%	10.3%	10.5%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0	19	9	3	0		
	%	0.0%	41.3%	31.0%	15.8%	0.0%		
액상계획 등과 같은 것이 없었다	빈도	0	3	4	5	0		
	%	0.0%	6.5%	13.8%	26.3%	0.0%		
기타	빈도	0	1	1	0	0		
	%	0.0%	2.2%	3.4%	0.0%	0.0%		

〈표 36/인적사항7〉 액상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거주 지역별 차이

중요도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최우선 목표로 가장 중시되었다	빈도	2	19	6	6	0	1	1	0	1
	%	50.0%	31.1%	75.0%	35.3%	0.0%	25.0%	50.0%	0.0%	100.0%
지표계획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빈도	0	11	1	4	1	1	0	1	0
	%	0.0%	18.0%	12.5%	23.5%	100.0%	25.0%	0.0%	50.0%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2	22	1	3	0	1	1	1	0
	%	50.0%	36.1%	12.5%	17.6%	0.0%	25.0%	50.0%	50.0%	0.0%
액상계획 등과 같은 것이 없었다	빈도	0	8	0	4	0	0	0	0	0
	%	0.0%	13.1%	0.0%	23.5%	0.0%	0.0%	0.0%	0.0%	0.0%
기타	빈도	0	1	0	0	0	1	0	0	0
	%	0.0%	1.6%	0.0%	0.0%	0.0%	25.0%	0.0%	0.0%	0.0%

〈표 37/22〉 기업의 시장 활용 중요도에 대한 산업별 차이

중요도		산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 업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9	1	3	5	1	1	1	1	0	0	1	0	2
	%	34.6%	50.0%	18.8%	22.7%	25.0%	16.7%	100.0%	100.0%	0.0%	0.0%	20.0%	0.0%	25.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빈도	7	0	7	7	1	1	0	0	1	0	1	0	0
	%	26.9%	0.0%	43.8%	31.8%	25.0%	16.7%	0.0%	0.0%	16.7%	0.0%	20.0%	0.0%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3	0	4	5	2	2	0	0	3	0	2	1	2
	%	11.5%	0.0%	25.0%	22.7%	50.0%	33.3%	0.0%	0.0%	50.0%	0.0%	40.0%	50.0%	25.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7	1	1	5	0	2	0	0	2	1	1	1	4
	%	26.9%	50.0%	6.3%	22.7%	0.0%	33.3%	0.0%	0.0%	33.3%	100.0%	20.0%	50.0%	50.0%
기타	빈도	0	0	1	0	0	0	0	0	0	0	0	0	0
	%	0.0%	0.0%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37/24〉 기업의 시장 활용 중요도에 대한 직위별 차이

중요도		직장직위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0	2	4	19
	%		0.0%	28.6%	26.7%	24.7%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빈도		0	3	3	19
	%		0.0%	42.9%	20.0%	24.7%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1	0	3	20
	%		100.0%	0.0%	20.0%	26.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0	2	4	19
	%		0.0%	28.6%	26.7%	24.7%
기타	빈도		0	0	1	0
	%		0.0%	0.0%	6.7%	0.0%

〈표 37/25〉 기업의 시장 활용 중요도에 대한 직장 규모별 차이

중요도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14	9	2
	%	25.0%	25.0%	25.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빈도	13	10	2
	%	23.2%	27.8%	25.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13	8	3
	%	23.2%	22.2%	37.5%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15	9	1
	%	26.8%	25.0%	12.5%
기타	빈도	1	0	0
	%	1.8%	0.0%	0.0%

〈표 37/인적사항4〉 기업의 시장 활용 중요도에 대한 탈북 연도별 차이

중요도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2	12	8	3	0
	%	40.0%	26.1%	27.6%	15.8%	0.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빈도	1	13	8	3	0
	%	20.0%	28.3%	27.6%	15.8%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1	9	5	9	0
	%	20.0%	19.6%	17.2%	47.4%	0.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1	11	8	4	1
	%	20.0%	23.9%	27.6%	21.1%	100.0%
기타	빈도	0	1	0	0	0
	%	0.0%	2.2%	0.0%	0.0%	0.0%

〈표 37/인적사항7〉 기업의 시장 활용 중요도에 대한 지역별 차이

중요도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국가계획의 달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빈도	2	16	2	4	0	0	0	0	1
	%	50.0%	26.2%	25.0%	23.5%	0.0%	0.0%	0.0%	0.0%	100.0%
국가계획을 달성한 조건에서 중요시되었다	빈도	0	16	2	2	1	1	2	1	0
	%	0.0%	26.2%	25.0%	11.8%	100.0%	25.0%	100.0%	50.0%	0.0%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빈도	1	15	2	5	0	1	0	0	0
	%	25.0%	24.6%	25.0%	29.4%	0.0%	25.0%	0.0%	0.0%	0.0%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빈도	1	13	2	6	0	2	0	1	0
	%	25.0%	21.3%	25.0%	35.3%	0.0%	50.0%	0.0%	50.0%	0.0%
기타	빈도	0	1	0	0	0	0	0	0	0
	%	0.0%	1.6%	0.0%	0.0%	0.0%	0.0%	0.0%	0.0%	0.0%

〈표 38/22〉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방식에 대한 산업별 차이

조달방법		산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16	0	10	15	3	4	0	1	3	0	3	1	1
	%	61.5%	0.0%	62.5%	68.2%	75.0%	66.7%	0.0%	100.0%	50.0%	0.0%	60.0%	50.0%	12.5%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7	1	2	3	1	0	0	0	1	0	0	0	1
	%	26.9%	50.0%	12.5%	13.6%	25.0%	0.0%	0.0%	0.0%	16.7%	0.0%	0.0%	0.0%	12.5%
시장에서 구입	빈도	0	1	3	3	0	2	1	0	1	0	1	0	3
	%	0.0%	50.0%	18.8%	13.6%	0.0%	33.3%	100.0%	0.0%	16.7%	0.0%	20.0%	0.0%	37.5%
각출/스스로 조달	빈도	2	0	0	1	0	0	0	0	0	1	0	0	3
	%	7.7%	0.0%	0.0%	4.5%	0.0%	0.0%	0.0%	0.0%	0.0%	100.0%	0.0%	0.0%	37.5%
기타	빈도	1	0	1	0	0	0	0	0	1	0	1	1	0
	%	3.8%	0.0%	6.3%	0.0%	0.0%	0.0%	0.0%	0.0%	16.7%	0.0%	20.0%	50.0%	0.0%

〈표 38/24〉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방식에 대한 직위별 인식 차이

조달방법		직장직위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1	4	6	46
	%		100.0%	57.1%	40.0%	59.7%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0	0	4	12
	%		0.0%	0.0%	26.7%	15.6%
시장에서 구입	빈도		0	2	1	12
	%		0.0%	28.6%	6.7%	15.6%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빈도		0	0	2	5
	%		0.0%	0.0%	13.3%	6.5%
기타	빈도		0	1	2	2
	%		0.0%	14.3%	13.3%	2.6%

〈표 38/25〉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방식에 대한 직장 규모별 차이

조달방법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28	24	5
	%		50.0%	66.7%	62.5%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9	7	0
	%		16.1%	19.4%	0.0%
시장에서 구입	빈도		9	3	3
	%		16.1%	8.3%	37.5%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빈도		5	2	0
	%		8.9%	5.6%	0.0%
기타	빈도		5	0	0
	%		8.9%	0.0%	0.0%

〈표 38/인적사항4〉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방식에 대한 탈북 연도별 차이

조달방법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4	23	19	11	0
	%	80.0%	50.0%	65.5%	57.9%	0.0%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0	8	5	3	0
	%	0.0%	17.4%	17.2%	15.8%	0.0%
시장에서 구입	빈도	1	11	1	2	0
	%	20.0%	23.9%	3.4%	10.5%	0.0%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빈도	0	2	2	2	1
	%	0.0%	4.3%	6.9%	10.5%	100.0%
기타	빈도	0	2	2	1	0
	%	0.0%	4.3%	6.9%	5.3%	0.0%

〈표 38/인적사항7〉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방식에 대한 탈북 연도별 차이

조달방법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국가계획에 따라 조달	빈도	1	38	4	9	1	2	0	1	1
	%	25.0%	62.3%	50.0%	52.9%	100.0%	50.0%	0.0%	50.0%	100.0%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조달	빈도	0	12	0	2	0	0	1	1	0
	%	0.0%	19.7%	0.0%	11.8%	0.0%	0.0%	50.0%	50.0%	0.0%
시장에서 구입	빈도	2	5	3	3	0	2	0	0	0
	%	50.0%	8.2%	37.5%	17.6%	0.0%	50.0%	0.0%	0.0%	0.0%
근로자들이 각출하거나 스스로 조달	빈도	1	3	1	1	0	0	1	0	0
	%	25.0%	4.9%	12.5%	5.9%	0.0%	0.0%	50.0%	0.0%	0.0%
기타	빈도	0	3	0	2	0	0	0	0	0
	%	0.0%	4.9%	0.0%	11.8%	0.0%	0.0%	0.0%	0.0%	0.0%

〈표 39/22〉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에서 산업별 국가계획의 비중

비중	산업종	농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농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20% 미만	빈도	11	1	5	7	2	1	0	1	5	1	1	1	4
	%	42.3%	50.0%	31.3%	31.8%	50.0%	16.7%	0.0%	100.0%	83.3%	100.0%	20.0%	50.0%	50.0%
20~40%	빈도	3	0	4	8	1	2	0	0	0	0	1	0	0
	%	11.5%	0.0%	25.0%	36.4%	25.0%	33.3%	0.0%	0.0%	0.0%	0.0%	20.0%	0.0%	0.0%
40~60%	빈도	3	0	4	1	0	2	1	0	0	0	0	0	1
	%	11.5%	0.0%	25.0%	4.5%	0.0%	33.3%	100.0%	0.0%	0.0%	0.0%	0.0%	0.0%	12.5%
60~80%	빈도	2	0	2	1	1	1	0	0	0	0	1	0	1
	%	7.7%	0.0%	12.5%	4.5%	25.0%	16.7%	0.0%	0.0%	0.0%	0.0%	20.0%	0.0%	12.5%
80% 이상	빈도	3	0	0	2	0	0	0	0	0	0	1	1	0
	%	11.5%	0.0%	0.0%	9.1%	0.0%	0.0%	0.0%	0.0%	0.0%	0.0%	20.0%	50.0%	0.0%
잘 모름	빈도	4	1	1	3	0	0	0	0	1	0	1	0	2
	%	15.4%	50.0%	6.3%	13.6%	0.0%	0.0%	0.0%	0.0%	16.7%	0.0%	20.0%	0.0%	25.0%

〈표 39/24〉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에서 직위별 국가계획의 비중 인식

비중	직장직위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20%미만	빈도	0	3	5	32
	%	0.0%	42.9%	33.3%	41.6%
20~40%	빈도	0	0	4	15
	%	0.0%	0.0%	26.7%	19.5%
40~60%	빈도	0	1	0	11
	%	0.0%	14.3%	0.0%	14.3%
60~80%	빈도	1	2	1	5
	%	100.0%	28.6%	6.7%	6.5%
80%이상	빈도	0	0	2	5
	%	0.0%	0.0%	13.3%	6.5%
잘 모름	빈도	0	1	3	9
	%	0.0%	14.3%	20.0%	11.7%

〈표 39/25〉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에서 직장 규모별 국가계획의 비중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비중	빈도			
	%			
20%미만	빈도	22	15	3
	%	39.3%	41.7%	37.5%
20~40%	빈도	7	10	2
	%	12.5%	27.8%	25.0%
40~60%	빈도	9	3	0
	%	16.1%	8.3%	0.0%
60~80%	빈도	4	4	1
	%	7.1%	11.1%	12.5%
80%이상	빈도	3	3	1
	%	5.4%	8.3%	12.5%
잘 모름	빈도	11	1	1
	%	19.6%	2.8%	12.5%

〈표 39/인적사항4〉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에서 탈북 연도별 국가계획의 비중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빈도					
	%					
20%미만	빈도	0	19	11	10	0
	%	0.0%	41.3%	37.9%	52.6%	0.0%
20~40%	빈도	2	10	5	2	0
	%	40.0%	21.7%	17.2%	10.5%	0.0%
40~60%	빈도	2	5	5	0	0
	%	40.0%	10.9%	17.2%	0.0%	0.0%
60~80%	빈도	0	4	2	3	0
	%	0.0%	8.7%	6.9%	15.8%	0.0%
80%이상	빈도	0	3	2	2	0
	%	0.0%	6.5%	6.9%	10.5%	0.0%
잘 모름	빈도	1	5	4	2	1
	%	20.0%	10.9%	13.8%	10.5%	100.0%

〈표 39/인적사항7〉 기업의 자재와 물품 조달에서 지역별 국가계획의 비중

비중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빈도	1	23	5	10	0	0	0	1
20%미만	%	25.0%	37.7%	62.5%	58.8%	0.0%	0.0%	0.0%	50.0%	0.0%
	빈도	0	16	1	1	0	0	1	0	0
20~40%	%	0.0%	26.2%	12.5%	5.9%	0.0%	0.0%	50.0%	0.0%	0.0%
	빈도	0	5	1	2	0	2	0	1	1
40~60%	%	0.0%	8.2%	12.5%	11.8%	0.0%	50.0%	0.0%	50.0%	100.0%
	빈도	0	7	1	0	1	0	0	0	0
60~80%	%	0.0%	11.5%	12.5%	0.0%	100.0%	0.0%	0.0%	0.0%	0.0%
	빈도	1	3	0	2	0	1	0	0	0
80%이상	%	25.0%	4.9%	0.0%	11.8%	0.0%	25.0%	0.0%	0.0%	0.0%
	빈도	2	7	0	2	0	1	1	0	0
잘 모름	%	50.0%	11.5%	0.0%	11.8%	0.0%	25.0%	50.0%	0.0%	0.0%

〈표 40/22〉 기업의 생산물 처분방식에서 산업별 차이

처분방법	산업종	농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건설	도매	숙박	운수	통신	공공	문화	기타
		임업				가스	수도	소매	음식점		행정	서비스업	서비스업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24	1	13	19	4	6	0	1	3	1	4	1	3
	%	92.3%	50.0%	81.3%	86.4%	100.0%	100.0%	0.0%	100.0%	50.0%	100.0%	80.0%	50.0%	37.5%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1	0	1	1	0	0	0	0	1	0	0	0	2
	%	3.8%	0.0%	6.3%	4.5%	0.0%	0.0%	0.0%	0.0%	16.7%	0.0%	0.0%	0.0%	25.0%
시장에서 판매	빈도	1	1	0	0	0	0	1	0	1	0	0	0	1
	%	3.8%	50.0%	0.0%	0.0%	0.0%	0.0%	100.0%	0.0%	16.7%	0.0%	0.0%	0.0%	12.5%
종업원에게 지급	빈도	0	0	0	1	0	0	0	0	0	0	0	0	1
	%	0.0%	0.0%	0.0%	4.5%	0.0%	0.0%	0.0%	0.0%	0.0%	0.0%	0.0%	0.0%	12.5%
기타	빈도	0	0	2	1	0	0	0	0	1	0	1	1	1
	%	0.0%	0.0%	12.5%	4.5%	0.0%	0.0%	0.0%	0.0%	16.7%	0.0%	20.0%	50.0%	12.5%

〈표 40/24〉 기업의 생산물 처분방식에서 직위별 차이

처분방법	직장직위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1	4	11	64
	%	100.0%	57.1%	73.3%	83.1%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0	0	1	5
	%	0.0%	0.0%	6.7%	6.5%
시장에서 판매	빈도	0	2	0	3
	%	0.0%	28.6%	0.0%	3.9%
종업원들에게 지급	빈도	0	0	1	1
	%	0.0%	0.0%	6.7%	1.3%
기타	빈도	0	1	2	4
	%	0.0%	14.3%	13.3%	5.2%

〈표 40/25〉 기업의 생산물 처분방식에서 직장 규모별 차이

처분방법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41	32	7
	%	73.2%	88.9%	87.5%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4	2	0
	%	7.1%	5.6%	0.0%
시장에서 판매	빈도	4	0	1
	%	7.1%	0.0%	12.5%
종업원들에게 지급	빈도	1	1	0
	%	1.8%	2.8%	0.0%
기타	빈도	6	1	0
	%	10.7%	2.8%	0.0%

〈표 40/인적사항4〉 기업의 생산물 처분방식에서 탈북 연도별 차이

처분방법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4	38	22	15	1
	%	80.0%	82.6%	75.9%	78.9%	100.0%
지배인 등이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0	1	4	1	0
	%	0.0%	2.2%	13.8%	5.3%	0.0%
시장에서 판매	빈도	1	3	1	0	0
	%	20.0%	6.5%	3.4%	0.0%	0.0%
종업원들에게 지급	빈도	0	1	1	0	0
	%	0.0%	2.2%	3.4%	0.0%	0.0%
기타	빈도	0	3	1	3	0
	%	0.0%	6.5%	3.4%	15.8%	0.0%

〈표 40/인적사항7〉 기업의 생산물 처분방식에서 지역별 차이

처분방법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국가계획에 따라 처분	빈도	1	52	6	12	1	4	1	2	1
	%	25.0%	85.2%	75.0%	70.6%	100.0%	100.0%	50.0%	100.0%	100.0%
개인적 연줄로 처분	빈도	0	3	1	2	0	0	0	0	0
	%	0.0%	4.9%	12.5%	11.8%	0.0%	0.0%	0.0%	0.0%	0.0%
시장에서 판매	빈도	1	3	0	1	0	0	0	0	0
	%	25.0%	4.9%	0.0%	5.9%	0.0%	0.0%	0.0%	0.0%	0.0%
종업원들에게 지급	빈도	1	0	0	0	0	0	1	0	0
	%	25.0%	0.0%	0.0%	0.0%	0.0%	0.0%	50.0%	0.0%	0.0%
기타	빈도	1	3	1	2	0	0	0	0	0
	%	25.0%	4.9%	12.5%	11.8%	0.0%	0.0%	0.0%	0.0%	0.0%

〈표 41/22〉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산업별 비중

비중		산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	공공 행정	문화 관련 서비스 업	기타 개인 서비스 업
20% 미만	빈도	4	0	2	6	1	1	0	0	1	0	0	0	3
	%	15.4%	0.0%	12.5%	27.3%	25.0%	16.7%	0.0%	0.0%	20.0%	0.0%	0.0%	0.0%	37.5%
20~40%	빈도	4	0	3	4	1	2	0	0	1	0	0	0	1
	%	15.4%	0.0%	18.8%	18.2%	25.0%	33.3%	0.0%	0.0%	20.0%	0.0%	0.0%	0.0%	12.5%
40~60%	빈도	5	1	4	0	1	0	1	0	1	0	1	0	0
	%	19.2%	50.0%	25.0%	0.0%	25.0%	0.0%	100.0%	0.0%	20.0%	0.0%	20.0%	0.0%	0.0%
60~80%	빈도	2	0	0	3	1	1	0	0	1	0	1	0	1
	%	7.7%	0.0%	0.0%	13.6%	25.0%	16.7%	0.0%	0.0%	20.0%	0.0%	20.0%	0.0%	12.5%
80% 이상	빈도	6	0	5	4	0	1	0	1	0	1	2	1	2
	%	23.1%	0.0%	31.3%	18.2%	0.0%	16.7%	0.0%	100.0%	0.0%	100.0%	40.0%	100.0%	25.0%
잘 모름	빈도	5	1	2	5	0	1	0	0	1	0	1	0	1
	%	19.2%	50.0%	12.5%	22.7%	0.0%	16.7%	0.0%	0.0%	20.0%	0.0%	20.0%	0.0%	12.5%

〈표 41/24〉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직위별 비중

비중		산업종	단위책임자 또는 지배인	중간층	하위 관리층	하위 근로층
		20%미만	빈도	0	1	2
%	0.0%		16.7%	13.3%	19.7%	
20~40%	빈도	0	0	2	14	
	%	0.0%	0.0%	13.3%	18.4%	
40~60%	빈도	1	2	2	9	
	%	100.0%	33.3%	13.3%	11.8%	
60~80%	빈도	0	2	1	7	
	%	0.0%	33.3%	6.7%	9.2%	
80%이상	빈도	0	1	4	18	
	%	0.0%	16.7%	26.7%	23.7%	
잘 모름	빈도	0	0	4	13	
	%	0.0%	0.0%	26.7%	17.1%	

〈표 41/25〉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직장 규모별 비중

비중		근로자 분류		
		99명 이하	100~999명	1000명 이상
20%미만	빈도	12	4	2
	%	22.2%	11.1%	25.0%
20~40%	빈도	8	5	3
	%	14.8%	13.9%	37.5%
40~60%	빈도	8	5	1
	%	14.8%	13.9%	12.5%
60~80%	빈도	5	4	1
	%	9.3%	11.1%	12.5%
80%이상	빈도	11	11	1
	%	20.4%	30.6%	12.5%
잘 모름	빈도	10	7	0
	%	18.5%	19.4%	0.0%

〈표 41/인적사항2〉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탈북 연도별 비중

비중		최종 탈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미만	빈도	1	8	7	2	0
	%	20.0%	17.4%	25.0%	11.1%	0.0%
20~40%	빈도	0	12	4	0	0
	%	0.0%	26.1%	14.3%	0.0%	0.0%
40~60%	빈도	1	5	4	4	0
	%	20.0%	10.9%	14.3%	22.2%	0.0%
60~80%	빈도	0	6	1	3	0
	%	0.0%	13.0%	3.6%	16.7%	0.0%
80%이상	빈도	1	9	7	5	1
	%	20.0%	19.6%	25.0%	27.8%	100.0%
잘 모름	빈도	2	6	5	4	0
	%	40.0%	13.0%	17.9%	22.2%	0.0%

〈표 41/인적사항7〉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지역별 비중

비중	거주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20%미만	빈도	0	10	3	3	0	1	0	0	1
	%	0.0%	16.4%	37.5%	20.0%	0.0%	25.0%	0.0%	0.0%	100.0%
20~40%	빈도	0	13	1	2	0	0	0	0	0
	%	0.0%	21.3%	12.5%	13.3%	0.0%	0.0%	0.0%	0.0%	0.0%
40~60%	빈도	1	5	1	5	0	1	0	1	0
	%	25.0%	8.2%	12.5%	33.3%	0.0%	25.0%	0.0%	50.0%	0.0%
60~80%	빈도	0	6	1	1	0	1	0	1	0
	%	0.0%	9.8%	12.5%	6.7%	0.0%	25.0%	0.0%	50.0%	0.0%
80%이상	빈도	1	15	2	3	1	0	1	0	0
	%	25.0%	24.6%	25.0%	20.0%	100.0%	0.0%	50.0%	0.0%	0.0%
잘 모름	빈도	2	12	0	1	0	1	1	0	0
	%	50.0%	19.7%	0.0%	6.7%	0.0%	25.0%	50.0%	0.0%	0.0%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민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마·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마·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중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중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2014년 대북정책 추진전략	최진욱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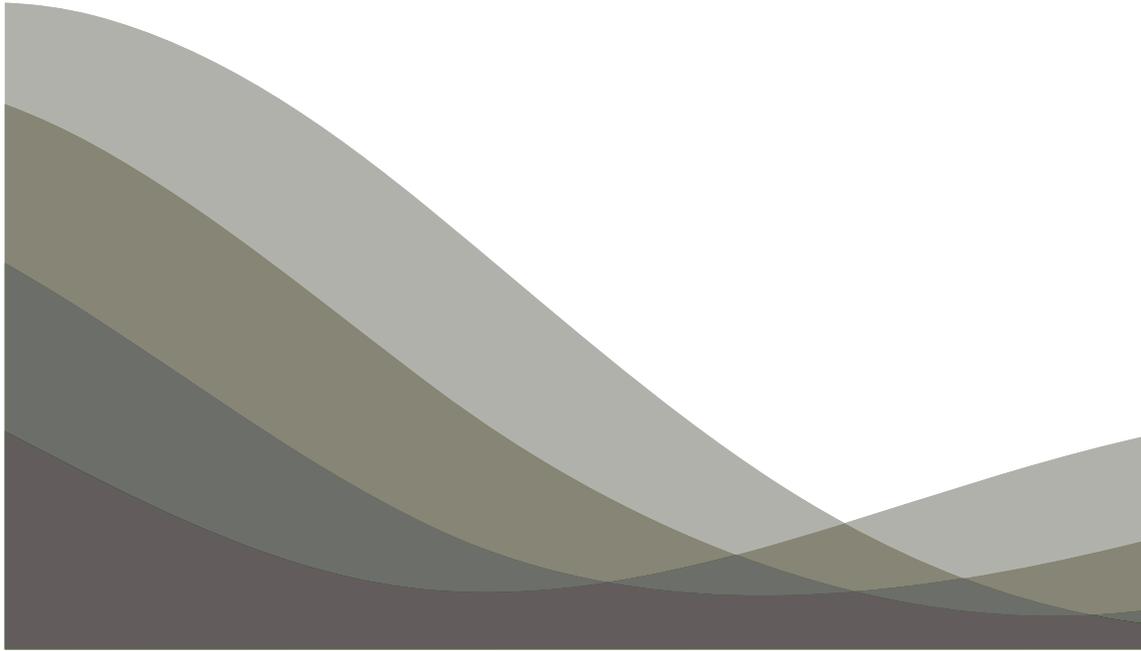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 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 788984 797550
ISBN 978-89-8479-755-0